

시공심
양자

생협평론 2014 가을 (16호)

길잡이 협동조합 교육, 절실한 이유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8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2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금현옥(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39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53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김아영(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72
좌담회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82

이슈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소비자 인증시대	박인자(아이쿱인증센터 회장)	107
‘유기농의 진실’이 놓친 진실들	김홍범((주)쿵스��어 광주전남 이사)	117
지하철 9호선을 협동조합으로...?	김기태((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130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41
-----------------	-----------	-----

돌발논문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 그 원인과 처방은 무엇인가?	이호중(너름 연구기획팀장)	142
---	----------------	-----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⑥ 협동으로 함께 굶는 빵, 동네빵집 되살릴까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54
---	-----------------	-----

에세이 협동조합 역사: 로치데일협동조합을 다시 생각한다 Co-op History: Re-visiting the Rochdale Pioneers	R.C. 리처드슨(영국 윈체스터대학) R.C.Richardson (University of Winchester UK)	165 170
---	---	------------

영화평 눈부신 순간에 대한 기록	주현숙(독립영화감독)	175
-----------------------------	-------------	-----

협동조합소식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노력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80
--	----------------------------	-----

생협평론 2014 가을 (16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 iCOOP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김기태 김아영 이대중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편집위원장	염찬희
편집간사	장인혜
편집디자인	황인혜 (스튜디오 보싸)
펴낸날	2014년 9월 20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4호
전 화	02) 2060-1373/4
구 독	1권 3,000원
e-book	교보문고, 리디북스, 알라딘, yes24에서 무료 구독 가능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교육, 절실한 이유

염찬희(편집위원장)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시행된 이래로 1년 반 만인 2014년 7월 현재 협동조합의 수가 5천 개를 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일단 만들고 보자는 듯한 설립 ‘유행’ 속에서 절반 이상이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설립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내부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준비가 안 되거나 덜 된 상태에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래서일 것이다. 그동안은 일각에서만 이루어지던 협동조합 교육이 협동조합 관계자들 사이에 그 시급함에 대한 인식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지자체가 나서서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을 열게 된 것은.

<생협평론> 16호는 협동조합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말로 교육을 택하고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를 특집으로 편집했다. 특집 원고들은 협동조합 교육을 다루되, 그 교육이 학교라는 장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며, 넓게는 교육에서 협동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도 포함하고자 기획했다.

협동을 교육 전반에 어떻게 녹여 넣을 것인지를 주제로 해서 풀어낸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교육전문가 문영선)에는 몸과 의식에 배게 하는 교육방법이 담겨 있고, 협동조합 교육이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사회적, 인문학적 의미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라는 넓은 시각은 아이쿱협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필요성을 역설한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정원각대표)에서 엿볼 수 있으며, 교사 금현옥의 “더 나

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에는 중등 교과 과정에 협동과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담겨야 하는 이유와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담은 것 외에 협동조합을 교과서에 신는 필자의 시도 경험이 담겨있다. 중등학교 과정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협동조합 교육들은 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준비위원 박주희가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에서 한국의 사례들로, 그리고 해외 사례는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의 김아영이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 영국, 핀란드의 협동조합 학교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풀어주었는데 두 글에서는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경험, 그리고 학문적인 고민을 읽을 수 있어서 유용하다.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에 참여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여서 평등하게 자신들의 경험담과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개진한 결과가 좌담회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에 고스란히 담겼다. 좌담회까지 이 6편의 기획 글들은 협동/협동조합에 관한 교육, 협동/협동조합을 위한 교육, 협동/협동조합을 통한 교육이라는 세 차원의 각각에서 혹은 두 차원에서 중첩되어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월 말과 8월 초, 2회에 걸쳐 KBS1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유기농산물의 진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나아가 한국농업 현장에서 이슈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긴급 기획된 2개의 원고가 이슈난을 채웠다. 한국농업이라는 맥락을 놓치지 않고, 유기농산물, 그것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를 다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비자의 예리한 평가(박인자의 글)와 생산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총체적인 평가(김홍범의 글)가 그것이다.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보는 유쾌한 상상(김기태의 글)을 이슈의 또 다른 꼭지에 배치했다.

이 외에도 최근 농산물가격 폭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처방한 이호중의 돌발 논문과 대형프랜차이즈 빵집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뭉친 동네빵집들의 협동조합을 취재한 김은

남 기자의 연재 글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생협평론의 지향성에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편집진으로서 뿌듯하다. 로치데일에 대한 두 편의 글이 준비되어 있는데 감동을 맛보시려면 영화평을, 정보와 생각거리를 얻으려면 에세이를 펼쳐보시기를 권한다. icoop

생협 평론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 영국, 핀란드의 협동조합 학교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좌담회

-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이야기를 시작하며 뜬금없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져본다. 중증 장애를 지닌 한 학생과 경증 장애를 지닌 또 다른 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담임교사에, 비장애의 같은 학급친구들과 학교에 다닌다면, 이 두 학생 중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아이는 누구일까? 장애를 지닌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담임교사나 다른 비장애 학생들 반 공동체 모두에게도 통합 학급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학생에게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는 노고는 교사의 몫으로 차치하고서라도 함께 생활하는 일 자체가 교실 모든 구성원에게 커다란 과제이다.

정답은 두 학생 모두 다 어렵다는 것이다. 심한 장애일수록 학교생활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대부분 경우에 경증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힘겨움은 중증의 아이들보다 가볍지 않다. 그런데 중증 장애 학생들과 경증 장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서로 다른 양상을 지닌다. 장애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시켜 말할 수는 없지만, 경증의 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겪는 고통이 더 심하게 보이기도 한다.

왜일까? 그것은 바로 경증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동일한 대우와 규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규율하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모두를 납득시킬 만큼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교사나 학생들은 장애가 그 학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 들여다볼 새도 없이 교실규칙에 따르지 못하는 반항이나 덜떨어진 존재로 바라본다. 교사가 장애 특성을 인정하여 숙제를 면제해주거나 제출기한을 늘려주기라도 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다.

이는 그대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친구에게 기회만 있다면 분노를 쏟아 부을 엄청난 잠재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이유로 경증 장애 학생이 장애 정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중증 장애 학생보다 더 쉬운 학교생활을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없다. 경증 장애 학생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장애 자체가 주는 어려움뿐 아니라 교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그 자체로 인정받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들의 고통이 장애 학생이 가진 장애(차이)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장애의 정도가 더 큰 중증장애 학생이 일반적으로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증 장애학생의 어려움은 중증 장애 학생이 겪는 어려움의 양상과 다른 점이 있거니와 더 가볍지도 않다. 이들이 겪는 다른 양상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집단의 방식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암시한다. 특히 경증 장애 학생들이 호소한 어려움은 공동체 속의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특성을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장애라는 차이를 존중받는 방식보다 동일한 규칙에 자신을 우격다짐하여 집어넣으려는 방식에 노출된다. 이러한 집단적 '동일화 과정'은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쉽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없이 열외가 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특히, 경증 장애 학생의 경우, 할 수 있지만 어려워해서 피해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실 장애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아이에 대해 잘 이해하지 않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실 안에서 교사는 학생을, 학생들은 서로를 그만큼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경증 장애 학생이 통합되는 양상은 교육현장에서 개인이 서로 다른 특성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자 하나의 지표이다. 학교와 유치원, 공동육아나 대안학교 현장을 망라하여 우리는 개인을 서로 다른 존재로 다루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 교육 현장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연령대별로 동일한 특징으로 그려낸다. 국정 교과서는 특정 연령대에는 이런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알 수 있다는 지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한 동형의

그림을 기초로 하여 제작된 것이다. 교사 역시 사범대에서 국정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된다. 개별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적으로 개별 교사의 인간적 역량에 달려있다. 교직 전문성을 교과 전문성이나 가르치는 기술의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 더 강해지면서 학생들은 동질적 집단과 집단 속의 동일한 특성의 개인으로만 설명된다. 장애나 문화, 언어같이 차이를 전문적 지식으로 제외시킨다 해도 개별 학생들은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된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협동의 방식은 달라진다

협동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를 주제로 다루며 왜 다름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말하는지 궁금해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협동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의 서로 다른 특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 사회나 공동체가 지향하는 협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본래 사회는 구성원 상호 간의 협동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협동하지 않는 사회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협동적 과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구성원인 개인을 동일한 대상으로 규정하는지 개별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분명히 협동의 형태는 달라진다. 동일한 개인 간의 공동체로 규정한다면 합의 보다 잘 찾은 정답이 중요하고, 정답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협동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합의 과정은 정답을 찾는 미로찾기이고, 미로 전문가들의 작업을 통해 더 잘 밝혀진다. 그러나 개인을 개별적 특성을 지닌 구성원으로 규정한다면 합의 과정이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기능적 협력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반이라고 말한다. 사회 속에서 개인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여 스스로 사회의 크고 작은 바퀴가 된다. 이런 기능적 협력을 하기 위해 지금과 다른 새로운 교육이 따로 필요하

지 않다.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사회 속의 개인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이런 관계 속에서 개인은 고유한 누군가가 아니라 주어진 역할이고, 역할을 수행하는 한 사람이다. 우리 교실에 한 명의 학생이 전학 온 것은 책상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여덟 시 반부터 오후까지 시간을 차지하는 ‘더하기 일의 존재’라는 의미이다. 개인으로서의 고유성이야 가지고 있겠지만, 교실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는 그저 정원의 합을 늘리고, 과반수의 비율을 조정하게 하는 더하기 일의 존재이다.

그런데 ‘더하기 일의 존재’들이 교실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실 붕괴라는 충격적인 말이 유행하며 시작된 학교 문화의 변화나 자살,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등으로 나타난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교실 속 ‘더하기 일’로 살 수 없다는 몸부림 같은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색깔과 존재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색깔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다. 왜 아침 일찍부터 졸린 눈을 비비고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합의해 본 적도, 이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 적도 없다. 학생들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과 정해진 시수와 이미 기술된 교과목의 목표에 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 없거나 형식적일 때 인간은 무기력하게 된다. 자기 자신과 행동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서 점점 학생들은 가치 판단에 무기력해지고, 행동의 무게를 견디지 않게 된다.

무의미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며, 인간을 부품화시키는 지금의 사회에서 교육은 서로를 존중하며 무게감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재배치되어야 한다. 교육의 장에서 협동의 원칙은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고매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일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이해하고 납득해가는 과정으로 실현된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처음부터 함께 모여 만들 수는 없어도 왜 따라야 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만은 필수적이어야 한다. 스스로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결정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의미를 찾

지 못해 흔들리고, 교과서가 제시한 목표와 스스로의 목표를 동일시하거나 혼동하기도 한다. 보이는 모습은 다르지만 어느 편이건 자신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같다.

흔히 사람들은 공동체 지향성과 개인 존중을 대립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공동체는 개인을 존중하는 정도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종종 사람들의 비판대에 오르는 ‘개인주의’는 부속품으로 ‘개인’을 느끼는 ‘더하기 하나의 개인’이다. 존중받는 개인은 관계 속에 존재한다.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위협받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던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구성원인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협동조합에 기반한 교육의 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시도야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공동육아와 여러 형태의 대안학교들로 시작해서 공교육 내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진 남한산성 초등학교와 같이 학교 단위의 시도들과 학급이나 교과별 노력과 실험들이 확산되고 있다.

초등과 중등,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의 육아, 성인들의 평생 교육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다양하게 시도되는 교육적 시도는 국가단위에서 결정된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각각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합한 교육을 스스로 찾아가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실천 형태이다. 각각의 교육현장은 교사들 간의 협동을 동력으로 하기도 하고, 학부모 간 협력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사-학부모-학생이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 학교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동육아나 대안학교의 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국정교육과정과 공립학교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강력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의 세력권 밖에서나 담임교사나 학과담임의 재량권 속에서 시도된 자율과 자치의 시도들이 마냥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유를 쟁

취하기 이전까지 하나의 이름이었다면 자유가 주어지자 알게 된 것은 그것 외에는 모두 다르다는 것이었다고나 해야 할까. 입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공유하려는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은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숨을 이유를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가며 스스로 합의하는 공통의 문화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육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적 ‘협동의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개별성을 존중하는 협력의 원칙은 위기에 처하곤 한다. 바람 앞의 작은 촛불 같다는 말을 늘 실감한다. 현실 논리 속에 끊임없이 유예가 시도되고, 자주 다수결이나 손쉬운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는 위기이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민주적 협력의 원칙은 구성원들이 아직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거나, 재정적으로, 시간상 준비되지 못했다는 논리로 다음으로 미뤄지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슬쩍 걸어차이곤 한다. 설혹 서로 다른 입장을 인정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회의 안건이 되더라도 사안의 성격을 규명하는 논의나 상호 이해 과정 없이 모든 견해에 상대주의적인 가치를 둔 채 찬반 다수결로 종결시켜 버리기도 한다.

교사회이나 학급회의, 학부모회의, 반 모임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들과 길어지는 토론은 알아서 결정해 주고, 적당히 모르는 척해도 되는 자유 이전 세계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토론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 “다른 일로 이미 소진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이지 않다” 시간을 돈이라 부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노고가 낯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수결과 같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합의 과정은 장애 학생을 성원으로 받아들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입장, 이주 노동자 자녀의 상황을 다만 한 개인의 사례로만 치부하게 만든다.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

해서 충분한 토의와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의 자녀 한 아이의 입학준비를 위해 그의 키에 맞는 의자와 책상을 하나 마련하면 된다. 정말 그뿐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시간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은 다시 정당성을 질문 받아 마땅하다. 이런 가치를 우선적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흔히들 말하듯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일까? 효율성 기준을 앞세우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수량적 성과가 우리를 안심시키기 때문이다. 전날 신문 보는 아기를 보여준 TV 사교육 광고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지 기억해보라. 무엇인가 더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조건적 불안을 조성한다.

협력적 관계는 경쟁력 담론을 넘어설 수 있을까

교육의 장에서 협동적 관계를 가장 위협하는 단어가 있다면 '경쟁력' 썸될 것이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여기저기 별 이유도 없이 싸움 걸고 다니는 싸움꾼처럼 "경쟁할만한가?", "한번 붙어볼래?"하는 장면을 연상하곤 한다. 이 싸움꾼에게 진 사람들은 "다른 아이들은 벌써 글을 읽고, 셈을 이만 큼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데..." 하는 시름에 잠겨 허우적거리게 된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그래도 창의성만큼은 경쟁력 있을 걸요!" 라고 답한다면 그도 역시 이 싸움꾼의 패배자이다. 모두 교육에서의 협력적 관계를 경쟁의 잣대에서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라는 잣대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개인' 단위의 성공과 경쟁에 대해 고려하는 행위를 현실 직시의 관점,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편의상 경쟁력 담론이라고 해두자. 만일 '우리'를 언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명백하게 개인의 합으로서의 '우리'일 뿐이다. 각각 개인이 경쟁력을 키우면 '우리'는 저절로 강력해져서 경쟁 사회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학교에서도 제 일에 힘쓰면 저절로 '우리' 반은 잘하

는 반이 되고, '우리' 사회는 부강하게 된다. 제 자신을 책임지는 독립심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라는 가치가 평가의 주요 척도가 된다.

전체의 문제는 제 자신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해결된다는 생각에는 함정이 있다. 개인을 경쟁적 구도에서 본다면 반 평균을 깎아 반의 경쟁력을 낮춘 바닥점수의 존재는 눈엣가시가 된다. 경쟁적 관점에서 정의하면 '남의 도움을 바라는 존재',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 몹쓸 녀석들이다. 이들은 개인 단위의 성공과 경쟁이 전체의 성공을 이룩할 수 있는 공간 속에서 불필요한 존재이거나 전체에 누를 끼치는 자가 된다.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개인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만이 사회적 미덕이 되어, 결국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존재, 사회적 약자를 사회의 잉여로 여기게 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베식 논리가 정확히 이것이다. 근대가 시작되는 때, 이십 세기가 시작할 무렵, 딱 어느 한 시점을 집어낼 수는 없지만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그때 썸이다. 세상을 둘러보니 국가 상실의 위기 속에서 세계를 생존경쟁의 장으로 설명하는 논리가 들어와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개인 모두에 우승열패의 논리가 적용되었다. 그 논리는 생물계의 변화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생물학을 박물학에서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다윈 진화론의 사회적 버전에서 기원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친일파거나 독립운동가거나 조선을 약한 존재라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도태되었다는 점에서 이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경쟁력 지상주의를 내건 사회진화론은 진화론과 중요하게 다른 점이 있다. 진화론이 자연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낸 것처럼 사회진화론도 인간 사회를 이성적,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가치 개념을 집어넣었다. 다윈은 생물변이들 중 살아남은 개체는 우월하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것이 아니라 우연의 결과로 보았고 진화론은 변화를 진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즉, 시대를 풍미한 과학이론에서 틀을 가져왔지만 '개인 경쟁을 통해 진보한다'는 생각은 그들이 믿었던

가치의 이론화였을 뿐, 과학적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세간에 과학적이라고 평가된 이론에 슬쩍 끼워 넣은 것이었다.

개인 경쟁력의 합이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은 아직까지 강력하다. “남에게 관심 갖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옆자리 친구의 사정이 어떻더라도 사정은 친구의 몫이고, 무엇이었던 너 자신의 몫을 다하라고 주문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주문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너 자신만 똑바로 하면 된다는 강령은 결국 타인으로 인해 아파하는 내 마음마저 돌보지 못하게 한다. 결국 내가 참는 만큼 타인도 함께 하는 잔혹한 지상명령을 만들게 된다. 사회적 약자는 돌아보고 함께 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잉여나 무익한 존재,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다루어진다. 반대로 나보다 더 나은 이에게 끝없는 열등감을 느끼는 사회성을 키우게 한다.

경쟁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일렬로 세우고야 만다. 일렬로 세우려면 무엇인가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어 동일한 단위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수능성적이 대학의 서열, 과별 서열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엄친아’, ‘옆집 아줌마’, ‘옆 반 교사’가 무서운 건 정말이지 어떤 조건에서든 상대를 주눅 들게 하기 때문이다. 옆 반 담임교사가 애들을 쥐 잡듯이 잡아 반 성적을 잘 거두면 우리 반은 하던 방법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스트레스가 따라오게 된다. 옆 반 교사의 효과는 바로 학부모들에게 마법을 걸어버리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의 9시 등교를 제안하고 들은 반대 여론 중 가장 큰 하나가 “우리 경기도 학생들만 수업을 덜 해서 뒤처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걱정이다. 경쟁력 담론은 이성적이라고 말하기보다 모든 이성적 태도를 메마르게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협동을 어떻게 배우는가?

‘협동을 어떻게 가르칠까?’ 도덕 교과서를 읽고 도덕 감수성을 키웠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책 읽으며 공부한 우리 세대 대부분의 교사들은 협

동을 가르치기 위해 지적 활동을 고려한다. “협동적 관계에 관해 감동적인 책을 읽어보거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비디오 자료는 어떨까.” 요즘 아이들 대다수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배우니까 말이다. 그러나 책을 읽고 공부한 우리나라,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요즘 아이들이나 협동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례를 보고 들어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 협동을 배웠다고 할 수 있을까? 제 3세계 어린이의 기아와 질병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감정이 움직인다 해도 며칠 후면 안도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심지어 자기보호를 위해 더 무감각해지기도 한다.

협동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삶에서 행동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소를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듯이 물 먹을 의지가 없으면 백날을 서 있어도 소용없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브라질의 프레이리(Paulo Freire)는 문맹의 노동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다 깨달았다. 이들은 하루 종일 노동에 지치고, 공부해본 기억조차 없어도 자기 삶과 체험을 말하는 단어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넓혀나갈 의지가 있었다. ‘벽돌’을 생성어로 삼으니 노동자들은 그 단어로 자기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멀리는 프레이리가 보여주었다면 가까이 5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풀무농업고등학교도 학교를 시작하며 학생의 삶과 학교 인근 지역주민 자치회를 통해 학교와 지역 공동체의 삶을 연결시켰다. 풀무학교의 이찬갑은 학교에 이어 학생과 지역민들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학교의 삶과 바깥의 삶이 연결될 때 앓은 생명력을 얻게 된다. 집과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학교에서 듣는다. 반대로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 집과 마을에서도 이야기된다면 잠이 오는 대신 귀가 열리고 참여 의지가 높아진다. 지금의 풀무학교는 학교뿐 아니라 마을의 생활 협동조합과 주민회, 학교와 전공부를 통해 끊임없이 생활과 공부가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흘러나온 지식이 저쪽을 적시고, 그곳을 적신 물이 다시 학교로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 풀무의 한 졸업생에게 풀무 전통은 졸업생들이 만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한 명의 뛰어난 교

장이나 교사가 붙여넣은 교육정신이 아니라 졸업한 학생들이 몸으로 느낀
앓이 다시 재학생들에게 간다는 뜻이다.

협동을 어떻게 배우는가? 삶이 가르친다. 그러나 혼자 겪고, 느끼고, 알
게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여러 교훈을 배우지
만 그것을 교육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풀무학교에 영향을 준 덴마크
의 그룬트비(Nikolaj Grundtvig)는 살아있는 교육에는 ‘살아있는 말’이 있
어야 한다고 했다. 강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입말이,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가르치고, 배우게 된
다. 여기에서 앓이 깊어지고, 넓어져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너무 평범한 방법이라고 말한다면 직접 행해 본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보
라.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
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대신 전문가의 한마디를 듣는 편이 낫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이 방법은 항상 유보되었다. 한번 시작
했다가도 되풀이되는 논의에 지겨움증이 생겨 금방 물리지 않았는가? 입
말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내면의 작업은 상대방의 말로 인해 다시 생각
하고, 되풀이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내면에 각인된다. 여기에 동반
하는 경험은 의사소통의 물질적 몸이 되어 땅에 발붙여진다.

대화의 과정은 때로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이 되기도 하고, 하다 하다 지
쳐 대화의 한 편이 포기하거나 떠나기도 한다. 말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 의지가 뒤섞인 의미가 오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대화가 멈춰진 순간이 대화의 끝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해결
하지 못한 질문은 각자에게 남아 공간을 떠나서도 답하게 된다. 결국 극적
인 이해에 도달하기도, 끝내 답을 못하게 되기도 하지만 주고받은 말의 무
게는 서로에게 남아있다. 긴 간격의 대화처럼 협동을 교육하는 일은 행사
하나를 치르고, 하나의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만 생기지 않는다. 일하는
사이사이 간극 동안 협동이 무엇인지에 관한 앓은 농익고 작은 결실을 마
련하게 된다.

나가며

가만히 살펴보면 장애 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자녀처럼 도드라진 특성
을 가진 아이들뿐 아니라 어느 아이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주위의
사람들도 성격이며 취향, 일하는 습성 할 것 없이 나와 같지 않다. 그 때문
에 자주 불편하고, 자주 도움을 받기도 한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함
께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항상 기쁜 일만은 아니다. 상처를 받을 만큼 받기도
한다. 욕하는 성미에 내 너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가 누그러지는
일도 많다. 누그러지는 건 이해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상대방이 가진 또 다
른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공동육아나 대안학교, 작은 공동체, 뜻있는
교사들의 교실에서 사람들은 제도나 형식 뒤에 숨는 대신 자신을 드러내
면서 쉽지 않은 공존을 꿈꾼다.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기 위한 교육에서의 협동,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협동 과정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이 되어 결
국 쉼 사람의 강압으로 결정되기 쉽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만 일의 홍수 속에서 소진되어 버린다. 교실 안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조영
선 교사는 세심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포함한 교실 안 관계를 들여다보며
“화합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압력과 밀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폭력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경계는 사려 깊고 귀
담아들을 만함 말이다. 주어진 과제들을 함께 해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다. 과정에서 협동을 익히고, 배우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교육하고, 생활의 장에서 보여주는 소통 관계와 모습 속에서 아
이들이 협동의 의지를 키워내기 때문이다. 비록 합의에 성공하지 못하더
라도 너무 낙담하지 말자. 우리는 꼭 성공에서 배우는 것은 아니니까.

* “인간의 생리는 (적어도 그 일부는) 열린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
신의 모든 기능들을 지배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되는 조절
정보가 체내의 호르몬 수치, 심장 기능, 수면 리듬, 면역 기능 등을 조절한다

다. 이 상호 과정은 동시에 진행된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조절을 받는다. 어느 누구도 전적으로 자신의 생리를 조절하지 못한다. 각자의 생리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열린 고리’구조이다.” (T. Lewis, F. Amini & R. Lannon, *A General Theory of Love*, 김한영 옮김, 『사랑을 위한 과학』) icoop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1. 들어가면서

1-1. 정관을 이해해야

“스미스 씨, 로치데일조합의 정관 읽어 봤나요?”

“아니요. 왜요?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테일러 씨는 읽어봤나요?”

“예, 저는 읽어봤어요. 정관에 따르면 조합의 대표를 우리가 직접 선출한대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면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중간에 탈퇴를 하면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를 우리가 뽑는 것은 좋은데, 사업에 실패했을 때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가입을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출자금 1파운드는 우리 식구 전체가 2주일 동안 먹고 살아야할 금액이거든요.”

1844년 잉글랜드 북서쪽 탄광촌이자 방적 공장의 지역인 랭커셔에서 28명의 노동자이자 소비자인 사람들이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이하 로치데일조합)을 시작했다. 조합에 처음 가입할 때 내야하는 출자금 1파운드의 가치는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한 1,800원이 아니었다. 당시의 물가와 화폐 가치를 고려해 보면 1파운드는 노동자들의 2주에서 한 달 정도 임금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 그러므로 조합원이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기까지는 신중하고 깊은 고민을 해야만 했다. 1파운드는 자본가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돈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큰 돈이기에 남편은 부인에게 물어 봐야 했고 결혼을 앞둔 청년은 사랑하는 여인과 상의해야 했다. 조합원들은 자기들이 낸 출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정관을 통해 알 수 있다. 1852년 협동조합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협동조합은 개인들이 모여 사업을 시작하는 사적 계약으로 정관의 내용이 모든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협동조합은 이 정관을 중심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정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인 것이다. 출자금이 지금 생협과 같이 3만 원, 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일 경우 더욱 그렇다. 즉, 출자금액이 크면 클수록 정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구나 1850년대 이전까지 영국의 문맹률은 50% 정도였으므로 정관을 바로 아는 것은 필수였다.

1-2. 로치데일조합의 교육에 대한 투자

로치데일조합은 초기부터 조합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1850년부터 1855년까지 매달 2펜스의 수업료를 받고 청년들을 위한 학교를 열었으며 1855년 이후부터는 이사회가 마련한 교실에서 20~30명의 조합원들에게 상호부조 등의 교육을 했다.¹ 또한 교육기금을 운용했고 조합원들을 위해 신문열람실과 도서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유로 로치데일조합의 8가지 원칙 중에 제7원칙으로 ‘교육의 촉진’을 채택하고 있다.² 로치데일조합이 이렇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합원들을 교육하고자 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방해했다. 로치데일조합이 이익의 10분의 1을 교육에 쓰는 것을 규약에 반영하고 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등기 담당관이 등기를

¹ 홀리요크 저, 정광민 역(2013). 『로치데일공정선거자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117~118쪽 참조.

² 존스턴 버첼 저, 장종익 역(2003). 『21세기 대안 협동조합운동』, 21쪽.

해주지 않았으며 조합에서 하는 교육사업을 금지했다.³ 조합은 정부의 이런 방해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1877년 연감에 따르면 순이익의 2.5%를 교육에 사용하고 도서실에는 3천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무료로 개방하였다.

로치데일조합은 교육을 통해 노동자, 소비자인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했다. 협동조합을 통해 범죄 없는 세상, 노동에 대한 착취가 없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인식하고 찾아야 했다. 이를 위해서 교육하고 또 교육한 것이다.

2. 협동조합에서 교육의 중요성

2-1. ICA의 협동조합 원칙 제정과 개정

1895년 런던에서 처음 결성한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국제협동조합연맹)는 1937년 15차 파리 총회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한다. 이후 1966년 23차 비엔나 총회에서 6대 원칙으로 수정하고 다시 1995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재수정한 7대 원칙을 발표한다. 세 차례에 걸친 협동조합 원칙 개정에서 ‘교육에 대한 원칙’은, ‘가입 자유의 원칙’과 ‘민주적 관리의 원칙’과 함께 계속 포함되었을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1995년에 개정된 원칙에는 조합원에게 교육 제공만이 아니라 훈련, 정보 제공 그리고 여론 주도층과 다음 세대에 대한 소통과 배려가 함께 있기도 하다.

³ 홀리요크. 앞의 책, 168~169쪽 참조.

2-2. ICA 협동조합 제5원칙의 의미⁴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Co-operatives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ir members, elected representatives, managers, and employees so they can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operatives. They inform the general public-particularly young people and opinion leaders-about the nature and benefits of co-operation.

이에 대한 ICA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① 협동조합 운동은 오래전부터 교육에 대해 남다른 헌신성을 보여 왔다. 1995년 원칙에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다.

② 이 원칙은 협동조합에서 교육과 훈련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나 사업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이 아니다. 교육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로 하여금 복잡하지만 풍부한 협동조합의 사상과 사업 활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이다. 훈련은 협동조합과 관련된 사람이 그들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게 하는 활동이다. 교육과 훈련은 협동조합 지도자들이 조합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협동조합 지도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조합원 사업 활동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

4 ICA 협동조합 원칙 해설에서 발췌.

련해야 한다. 협동조합 지도자와 조합원 간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조합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이 원칙의 마지막 부분은 협동조합이 협동의 본질과 강점에 대해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정치가,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에게 홍보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등한시한 협동조합이 허다했다. 협동조합이 앞으로도 능력에 걸맞게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이러한 책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의 이해가 없이는 협동조합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지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 레이들로 박사가 바라본 협동조합 교육의 문제

레이들로 박사는 1980년 ICA 모스크바 총회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협동조합의 열한 가지 취약점,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협동조합의 교육에 대한 경시다. 레이들로 박사는 협동조합이 초기에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가 식는다고 하면서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⁵ ①사업은 인공두뇌시대에 진입하고 있는데 교육은 석기 시대에 머물고 있다. ②사업은 성장하는데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은 30년 전과 별로 차이가 없다. ③자산의 감가상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인적 능력의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④교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져야 하는데 경영자의 손에만 맡긴다, 등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21세기에도 의미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한다.⁶ ①협동조합 교육이 사업과 상업에 한정되지 않고 가능한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②협동조합은 사업조직이면서 교육조직이 되어야 사회에서 잠재적 역할이 가능하다. ③가혹한

5 레이들로우 저. 김동희 역, (2000),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 보고서』, pp 113~114.

6 레이들로우 저. 김동희 역, (2000),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 보고서』, pp 155~156.

억압 정치 체제에서 좋은 교육계획이란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전복까지 포함될 수 있다. ④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하려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⑤조합의 이사회가 교육을 책임져야 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등이다.

3. ICA 정체성 선언 이후 협동조합의 교육

1995년 ICA 창설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채택한 ‘협동조합 정체성’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를 선언하고 원칙에 대해 개정을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995년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가 대대적인 공세를 하던 시기다. 1990년 신자유주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있었고 1995년 WTO가 출범하였다. 이런 와중에 협동조합은 정체성을 발표하고 새로운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후 협동조합의 원칙 그 중에 교육에 대한 원칙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살펴보자.

3-1.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 협동조합 교육의 어려움

신자유주의의 확대는 급변하는 정보통신혁명과 함께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어서면서 머니게임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대학에서는 투자자가 주도하는 주식회사 모델만 교육하고 협동조합은 크게 한정되었다. 더구나 협동조합 교육기관들은 재정난으로 폐쇄되거나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는 중에서도 프랑스의 협동조합 체험학습, 캐나다 대학의 국제협동조합경영 석사 과정, 스위스 미그로생협과 일본생협의 평생교육 과정, 영국 생협의 이사와 직원 연수, ILO 협동조합부의 개발도상국 협동조합 리더 연수, 스리랑카 신협연합회의 교육과

연수는 성공 사례로 꼽힌다. 여기서는 영국의 협동조합 대학과 이탈리아 생협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⁷

3-2. 영국의 협동조합대학(Co-operative College)

영국의 협동조합대학은 1919년 생협 직원 연수기관으로 시작하여 각종 조합원 등의 평생교육과 개발도상국 협동조합 리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재정난을 이겨내고 1997년 이후에는 이사와 간부 직원들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생협연합회와 함께 협동조합이사연수기관(ICD)을 설치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정보화시대에 맞게 동영상 교육과 인터넷 사이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대학은 영국 정부가 일반 고등학교를 전문 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맞추어 The Co-operative Group(영국의 도매협동조합과 소매협동조합이 통합하여 만든 그룹)과 함께 2004년부터 9개 고교와 연계하여 커리큘럼과 교재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3-3. 이탈리아 생협의 교육

이탈리아에서 생협 연수 기관은 1980년대에 사라졌지만 협동조합의 이념과 실무를 교육하고 연수할 수 있는 생협 학교가 2001년 피렌체 근교 몬테르포에 설립되었다. 이탈리아 생협은 갈수록 격화되는 자본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간부 육성이 필요했는데 이런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생협학교를 설립했다. 설립 목적은 생협의 매니저나 간부직원들을 주로 연수하는 것이지만 이어나 조합원 리더들의 교육, 연수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 매니저 연수는 협동조합의 가치, 원칙,

⁷ 쿠리모토 아키라 저, 주영덕·김형미 역(2009), 『21세기의 새로운 협동조합 원칙』, 140~144쪽 참조.

역사, 문화, 교육과 함께 경영, 기술, 조직 등의 내용을 하고 있다. 2004년에는 55개 코스에서 692명의 생협 관계자가 수강했다.

이와 같은 여러 나라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ICA, ILO와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협동조합연구소(BCICS)는 협동조합학습센터(CLC)를 설립했다.

4.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의 교육

협동조합을 성공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교육이다. 덴마크의 협동조합 운동, 이탈리아의 레가협동조합 그리고 스위스의 미그로 등 비교적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협동조합을 방문했을 때 하나같이 지적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이다. 그리고 그 교육의 대상은 조합원만 아니라 직원 나아가 일반 시민까지 확대된다. 그중에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Mondragon Corporation Cooperative, 이하 MCC)의 교육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는 2010년 아이쿱생협 유럽 연수의 일환으로 몬드라곤을 방문했을 때 오타롤라 담당 이사가 교육한 내용과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4-1. MCC 교육의 출발 이카즈도라⁸

MCC에서 교육은 협동조합의 시작이자 기반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는 MCC만이 아니라 몬드라곤이 속해 있는 바스크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다. 바스크인들은 자기들의 역사와 문화 등을 지키기 위해서 바스크 언어로 학교라는 뜻을 지닌 ‘이카즈도라’ 운동을 1917년 산 세바스찬 시에서 시작했다. MCC의 교육도 크게는 이카즈도라 운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1941년 스페인 시민전쟁이 끝난 후 쓰러져 가는 마을 몬드라곤

에 신부가 되어 돌아온 호세 마리아 아리스 멘데아리에타(이하 호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교육기관을 세운 일이기 때문이다. 호세 신부는 1945년 기술학교를 세워 기술교육을 시작하며 1946년에는 교육문화동맹이라는 교육 관련 총괄기관을 세웠다. 이 기관은 지역 교육문화운동의 중심인데 총 수입의 70%는 MCC의 각 협동조합이 조성한다. 이 기금의 대부분은 의무 교육 수준에 있는 이카즈도라에 사용되고 고등학교와 대학 수준의 학교에서는 수업료 수입이 70% 정도가 차지한다. MCC에는 보육원부터 대학 수준의 학교 그리고 교원양성소 등의 교육협동조합이 바스크협동조합법의 근거 아래 세워졌다.

4-2. MCC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교육

MCC는 다양한 분야의 크고 작은 협동조합들을 태운 탁자로 비유할 수 있다. 몬드라곤은 단일 사업체가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야의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그룹인데 그 활동은 공통의 기반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탁자로 비유한다면 탁자의 4개의 다리, 즉 ①교육 ②사회보장 ③금융과 재정 ④연구와 개발이란 4개의 다리가 MCC를 떠받치는 다리와 같다. 이렇게 4개의 다리 또는 축은 MCC를 유지, 발전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보장은 조합원들의 실직, 병, 노후 등을 대비하는 안전망과 복지로 작용한다. 금융과 재정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역할이고 연구와 개발은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조직의 미션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미션을 자신의 미래 비전과 연결시키며 그것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몬드라곤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의 10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의 실천 또는 교육의 기회 제공’도 10가지 원칙 중의 하나다. 몬드라곤에서는 교육과 훈련은 ‘협동조합 운동의 발전과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

⁸ 石塚秀雄(1991), 『바스크·몬드라곤—協同組合の町から』, pp.33~42 참조.

‘숙련된 노동자와 경영자를 길러내는 제도’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장치로서 이익분배의 연대(solidarity in profit distribution)를 통해 각 협동조합은 잉여 가운데 해당 소속 그룹에 일부를 낸 후 남은 금액의 10%를 교육 기금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4.3. MCC의 교육 관련 기관과 역할

MCC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또는 기관으로 8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몬드라곤대학, 알렉코업, 오타롤라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① 몬드라곤대학

대학의 정식 창립은 1997년이나 내용으로는 1943년 호세 신부가 설립한 기술전문학교를 모태로 한다. 이 학교 출신 5명이 1956년에 세운 울고가 MCC의 모태가 되었고 1960년에는 경영대, 1976년 사범대를 거쳐 1997년 대학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학은 노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알렉코업, 조사 연구 기관인 이켈란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이올란 등 많은 교육, 연구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 다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몬드라곤대학도 학생, 교수, 직원이 참여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성격이다. 공과대, 경영대, 인문대(사범대)로 3개 단과대 3,500명 학생이 있고 학교 재정은 학생, 협동조합의 프로젝트, 지역사회의 후원, 자치단체 등에서 함께 조달한다. 몬드라곤대학은 2007~2008년에는 유럽 고등교육모델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② 알렉코업

알렉코업(ALECOOP)은 Activity(행동) + Laboral(일) + Escolar(공부) + Cooperative(협동조합)의 합성어로 조직의 미션은 협동조합을 통하여 일과

공부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구성은 1일 8시간 정규 노동을 하는 50명의 노동자 조합원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실습생 조합원 300명 등이 있는데 출자금과 급여가 다르다. 이사회에는 총 9명 인원 중 노동자가 6명, 학생이 3명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전문 직업을 위한 교육(전자, 전기, 기계, 통신, 컴퓨터)분야와 대학의 컨트롤과 재정비를 위한 교육 그리고 자동차 케이블, 세탁기 케이블 등 기계를 개발하여 생산한다. 품질이 우수하여 세계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았으며 우수 품질로 인증 받은 기계는 MCC 기업에 보내기도 한다.

③ 오타롤라

오타롤라는 MCC에서 교육과 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다. 교육 대상과 내용을 보면 우선 각 부분별 그리고 개별 협동조합의 이사와 조합평의회 간부들에게 협동조합 경영 교육을 제공하며 일반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리고 월간 잡지 <TU Lankide>를 발간하는데 이 잡지는 몬드라곤의 초기 <노동과 단결>의 맥을 잇는 잡지로 매월 1만 부 정도 발행한다. 한편 오타롤라는 해외에서 오는 연구자, 경영자 그리고 방문자들을 위해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에서 오는 방문자는 해마다 늘어 2007년에는 4천 명에 다다랐다.

5. 한국 아이쿱생협의 교육

5-1 협동조합 교육을 등한시 하는 한국 풍토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이중적이고 매우 극단적이다. 새마을금고 1,700만 명, 신협 600만 명, 농협 300만 명, 생협과 그 외의 협동조합원 100만 명 등 무려 2,700만 명(가구 개념)으로 형식적인 조합원 숫자로는 인구

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숫자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숫자로 보면 바닥 수준이다. 필자가 약 1천 명이 넘는 농민에게 농협 조합원인 것을 확인한 후에 교육을 받았는지 물었을 때 단 1명(0.1%)만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사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새마을금고 사무실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글자와 정체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새마을금고, 농협 등은 조합원이나 직원에게 협동조합 교육을 아예 하지 않는다. 민간이 주도했으나 정부의 간섭을 받고 있는 신협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편 정부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성장한 생협들은 어떤가? 정부 주도의 협동조합들보다는 낮지만 교육 횟수와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주도 협동조합들은 출발부터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생협들은 생협 사업을 채택한 모 조직의 정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생협 가운데 적지 않은 생협들이 세계 협동조합 운동의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 보다는 자기 조직의 정체성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한국 생협에서는 2004년 '더불어식품 사건'이 터졌을 때 협동조합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해결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자기 조직 또는 한국 사회 특수성이라는 잣대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경향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한국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교육에 있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쿱생협은 이러한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왜곡 또는 편협한 흐름 속에서 협동조합 운동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살리려는 노력을 해왔고, 이런 움직임은 아이쿱생협이 실시하는 교육 내용에 잘 녹아 있다.⁹

9 김성오(2012). 『문드라곤의 기적』, 역사비평사, 102~105쪽 참조.

5-2. 교육의 효과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에서도 교육을 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물론 교육 자체가 개인 또는 집단의 성숙, 완성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이것 외에 교육을 받은 조합원이 교육을 받지 않은 조합원과 차이가 있어야 하고 그 차이는 조직에 대한 이해와 참여 나아가 주인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2006, 2009, 2012년 3차례에 걸쳐 조합원 소비실태와 의식을 조사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조합원은 그렇지 않은 조합원과 확연히 다르다. 마을 모임과 캠페인, 행사를 비롯하여 조합의 총회, '2005년 우리 쌀 지키기 우리 밀 살리기 소비자일만인대회', '2006년 한미FTA 반대 집회' 등에 참여한 비율이 3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났다. 그리고 학교급식 재료, 수돗물 절약, 환경 세제 쓰기, 후원금 기부 등과 같은 사회의식과 실천력에서도 교육을 받은 조합원이 그렇지 않은 조합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뿐만 아니라 조합비 제도, 인증 정책, 3일 전 주문 방식, 선수금 제도,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과 같은 조합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크게 달랐으며 아이쿱생협에 대한 신뢰와 조합의 물품을 이용하는 금액도 교육을 받은 조합원들이 그렇지 않은 조합원들에 비해 높았다.

5-3. 교육 현황¹⁰

아이쿱생협은 1997년 공동 물류를 시작할 때부터 조합원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해 <생협신문>을 통해 소통과 교육을 했고 이듬해부터 대면 교육을 시도 하고 2006년부터는 생협계에서는 처음으로 경제,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아카데미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2013년 지역 회원 생협과 연합 조직의 교육현황을 보면 조합원 교육은 약 105,523명(연인원 기준)이 참여하였다. 2013년의 교육은 약 20개의 단계별, 수준별, 역할별 교

10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2014년 총회 보고서(2014)

육을 진행하여 교육 체계의 안정화와 새로운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활동분야 확대를 위한 활동가 강사 양성과정, 권역별 활동가 심화학습회, 신입이사장 연수, 협동학교, 핵심활동가 정책설명회, 프로젝트 보고대회 등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표 1> 아이쿱생협 조합원 교육 참여 인원

교육주체	2012년		2013년		
	횟수	참여자	횟수	참여자	연인원
연합회(활동가 중심 교육)	128	9,794	385	5,544	28,965**
회원 생협	8,014	66,308	5,988	76,558	76,558
합계	8,142	76,102	6,373	82,102	105,523

* 입문교육, 총회준비교육, 활동가 학습회 655회, 연인원 8,801회는 회원 생협 교육 통계로 포함.
 * 연합회: 협동조합 지원2팀의 시민대상 교육 115회 / 1,757명은 포함 안 됨
 * 회원생협: 조합원들의 가입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 참가자 약 27,480명은 포함 안 됨
 ** 중복 참여를 연인원으로 환산했음

또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2013년 주관한 시민협동대학은 2012년까지 시행한 생협 칼리지의 3개 과정(아카데미, 인문학코스, 경영코스)을 4학기 과정(인문교양, 민주주의 리더십, 정치경제, 경영리더십)으로 발전시킨 것이며, 일반 시민과 사회적 경제 분야 인재들에게 개방하여 공공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5-4. 아이쿱생협 교육 내용

앞에서 밝혔듯이 아이쿱생협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 한해에 조합원 가운데 50%가 넘게 참여할 정

도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 생협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아이쿱생협이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 내용은 단계별로 모두 다르다. 아이쿱생협은 조합원 교육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협동조합에 대해 처음 입문 하는 것부터 깊게까지 통합적 이해를 위한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위원회와 같이 분야별 자기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이다. 아이쿱생협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마을 모임, 위원회, 이사, 지역 사회 연대와 연합 조직 활동 등을 하는 수준까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을 하는 방법에는 강의식, 토론타고 그리고 국내외 연수와 워크숍을 하며 구분에 따라서는 자체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선배 조합원 활동가가 후배 조합원 활동가를 이끄는 방식, 이론만이 아니라 현장 탐방을 하는 방법, 강사를 최대한 활동가 내부에서 육성하는 것 나아가 직원과 생산자 농민 교육에도 조합원 활동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등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2011년부터 도입한 유럽, 북미주 협동조합 연수는 조합원 활동가들의 시야를 매우 넓게 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전망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표 2> 아이쿱생협, 협동조합 등 통합적 이해를 위한 교육

구분	교육 단계	교육 내용
일반 조합원	조합원 가입 교육	생협 소개, 정관 설명, 물품에 대한 설명 등
마을, 동아리 지기	활동가 입문 교육	생협운동의 이해, 생협의 사업과 활동, 활동가 자세
위원회 활동	협동학교	모임 운영과 원칙,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 일반 등

지역 이사 활동	이사코스과 연수	조직 책임, 아이쿱생협 운동 성과와 과제, 지역 사회 이해, 세계 협동조합 운동, 민주주의 기초, 기초 회계 이해
이사장 등 경영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 역할교육	자연드림 베이커리, 복합 매장 - 경영, 인사 관리 등 교육 대폭 확대
연합, 연대 활동	시민협동대학	한국사회 현황, 철학, 경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등 심화

* 이 외에 대부분의 지역생협에서는 활동가 학습회(또는 이사 학습회)를 하고 권역별 활동가 심화 학습회, 권역별 핵심 활동가 워크숍 등이 있음.
* 활동가 해외 연수; 일본, 유럽, 북미 등 1주일 연수를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전망과 비전을 학습함.

<표 3> 위원회 활동을 위한 자체 교육

구별	구분	내용	기타
위원회	물품위원회	아이쿱 물품 특성, 취급 기준 등	위원회는 각 지역 생협의 재량. 이 외에 학교급식위원회, 나눔위원회, 생활정치위원회, 논습지 연구회 등 다양한 활동 모임이 있다.
	마을모임위원회	회의 진행법, 소통 방법 등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의 불안 문제, 화학 첨가물 등	
	홍보위원회	기사 작성법, 편집과 인터넷 활용법 등	

6. 마무리

지금까지 협동조합에서 교육이 왜 필요한지, 교육은 협동조합에서 왜 중요한지, ICA와 세계 다른 나라 협동조합에서는 교육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아이쿱생협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교육이 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매우 영향이 있는 수단인 것은 확실하다. 나아가서 일부에서는 교육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든다고 지적한다.

아이쿱생협의 사례에서도 교육을 받은 조합원이 조직에 대한 이해와 충성도 그리고 참여와 사회 인식 등에 대해 뚜렷한 차이가 났다. 교육은 협동조합, 생협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2011년 스위스 미그로생협을 방문했을 때 미그로 관계자는 200만 명의 조합원 중에 교육 참여자가 43만 명에 이른다고 했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또한 미그로는 매주 미그로의 상품 안내지 발행에 사회 뉴스를 포함시킨다고 했다. 스위스는 국가 전체의 직접민주주의,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투표 그리고 미그로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충성도(2009년 기준으로 29조 원 매출에 200만 명의 조합원으로 소매유통분야 시장 점유율 약 25% 코업 스위스와 합하면 소매유통분야 시장 점유율 약 40%이고 식품분야에서는 50% 수준) 등을 봤을 때 미그로가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스위스 미그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시민에 대한 교육과 소식지를 통한 소통은 조합원의 충성도와 사회의 민주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필자는 협동조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도구이지, 궁극의 목적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매장에서 좋은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 그리고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실천, 나아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망을 실현해야 한다. 아이쿱생협은 이러한 협동조합 운동의 보편성을 확산하기 위해 경제, 경영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인문, 철학, 역사 등의 분야에서도 교육을 강화해 왔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협동조합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 그리고 조합원이 속한 사회도 함께 성숙시키는 일이다. icoop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금현옥(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1. 왜 협동조합을 교육해야 할까?

1) 교육은 협동조합 에너지의 원천

협동조합의 7대 원칙 가운데 직원과 대중에 대한 교육의 원칙은 왜 들어갔을까? 아마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처럼 출자 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인정되는 조직이라면 교육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겠다. 지분을 많이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주로 결정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고, 좋은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닐뿐더러 말해도 반영되지 않고 묵살되기 십상이니까 말이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위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출자 지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투표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권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1인 1표가 의미 있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 당시부터 여성을 비롯하여 조합원들에게 부여한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실 끊임없는 교육이 있었기에 가치가 있었다. 왜 협동조합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은지, 협동조합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두 함께 조금씩 배려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모두를 위해 이익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교육하는 것. 협동조합에서 교육은 재화 또는 용역을 협동으로 구매·생

산·판매·제공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인 것이다.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채 2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8,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양적으로 팽창하는 이들 협동조합 중에는 주식회사형태로 시작하여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사례를 비롯하여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러나 또한 상당수의 협동조합들이 아직 제대로 된 사업기반이 없고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원리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이다. 기존의 사업체는 개인 혹은 공동으로 출자하고 지분만큼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 당연했다. 이와 달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출자 금액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는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는 대단히 신선하고 매력적인 것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을 하면서 부딪치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그리 만만치 않다.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의논과 회의를 하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긴 시간 동안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회의를 하며 논의가 맴돌고 있을 때 차라리 지분 많은 사람의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결정이 간절할 때도 있지 않은가?

이런 뼈적거리고 의견 차이의 많은 부분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출자하고 조합원이 되어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단계의 교육을 받는다. 이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나 7대 원칙 등은 그냥 입으로 술술 얘기할 정도로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구체적 상황과 만나 가슴으로, 몸으로 아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법이다. 그러니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은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때까지 제대로 된 협동조합을 알지도 못했다. 기껏 생협이나 한살림 등에서 양질의 믿을만한 먹을거리를 사기 위하여 소비자로서 이용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를 이해하

고, 개별적인 협동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교육을 통해 저변을 넓히는 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조합원에 의해, 조합원을 위해, 조합원 스스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협력'이 필요한 학교 풍경

학교 선생님의 수업일기 한 대목을 보자.

오늘 4교시 모둠 수업을 했다. '눈보라에서 살아남기' 상황 설명문과 활동지를 나누어주었다. 눈보라가 치는 겨울날, 여럿이 차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 전복되고 길을 잃었다. 길을 찾거나 구조될 때까지 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용해 살아남아야 한다. 지도, 나침반, 거울, 기름, 칼, 엽총, 호스, 헬멧, 담요, 육포 등의 물건을 어떻게 쓸 것인지 중요한 순서를 먼저 본인이 정하고 조별로 서로 의견을 나누며 그룹이 순서를 정한다. 친구 얘기를 들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물건의 쓰임새를 알게 되고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내 의견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활동이다. 그런데 조별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이유를 알아보니 '저, 애랑 안 친해요'한다. 순간 깜짝 놀랐다. 한 반에서 한 학기를 보낸 학생들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머리를 한 대 쥐어박힌 기분이다.

뭐가 잘 못 된 거지?

한 교실에 30명 남짓한 학생들이 모여 1년을 지내는 교실에서 서로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믿겠는가? 친한 아이가 아니면 한 학급에 있어도 친구가 아니고, 아무것도 궁금해 하지도 않고, 말을 걸고 싶어 하지

도 않는 관계. 요즘 10대들의 교실 풍경이다.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고 잦은 왕따와 위태로운 학교폭력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이런 교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달 수 있겠지만 금지와 억압 위주의 생활지도와 지나친 경쟁적 입시 교육을 그 원인으로 생각 해볼 수 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의 한 방편으로 상벌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염색이나 파마를 했을 때, 교복을 똑바로 입지 않았을 때를 비롯하여 다양한 금지사항을 어겼을 때 벌점을 준다. 문제는 친구가 담배를 피우거나, 오토바이를 탔다거나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학교에 알릴 때 상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벌점이 누적되어 학생부 징계가 염려될 때 상점을 받아 상쇄하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낀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학교의 평가는 본래 목적과는 별개로 진학에서 사정 자료로 제공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다. 모든 교과는 철저하게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누어진다. 아이들은 '우리가 돼지고기냐'고 묻는다. 동점자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문항 배점을 소수점으로 구분하고, 그러고도 동점이 생길 경우 우선순위를 매겨 두 줄, 세 줄도 아닌 철저하게 한 줄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학업의 성취도를 평가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한다던 일제고사는 한 학교 내 학생들 간의 줄 세우기에 그치지 않고 학교 간 줄 세우기로 본래의 취지가 바뀌었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학교는 교사 간 경쟁을 불러와 급기야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시험 응시를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게 만들기도 했다. 학교 교육의 기본 시스템이 이러할진대 인성교육과 창의교육, 시민교육들이 지향하는 가치교육이 몸으로 익혀질 공간은 한없이 좁은 틈새일 뿐이다. 학생들은 협동과 공동체, 공존의 가치 따위는 교과서 속에서 지식으로 배워 시험 치는 데 써먹을 뿐 생활 속에서 몸으로 익히지 못한다. 말로 하는 모든 교육이 공염불이 될 수 있음을 아주 예민한 센서를 가진 학생들은 누구보다 본능적으로 안다. 학교가 아주 세련된 포장을 한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면 지나친 말일까? 이 속에서 '협동'은 도대체 어느 틈새에 비집고 들어설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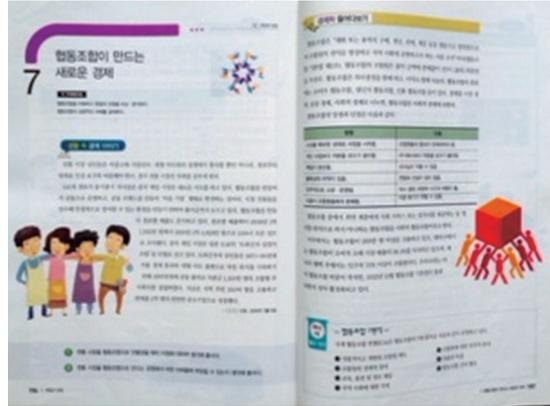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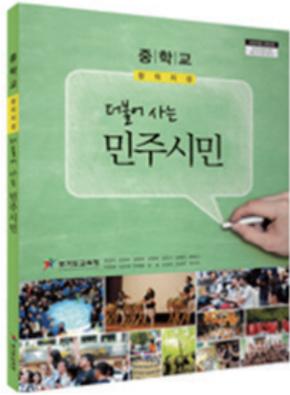
스위스 공립학교에서는 같은 반 학생을 몇 개조로 나눠서 공동 학습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태도를 어려서부터 익히게 하기 위함이다. 또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스스로 찾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경쟁과 협동이 책 속에서가 아니라 실천 속에서 그 가치를 느끼게 하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둘 이상이 될 수 있는 학습이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영국의 협동조합학교 방문단에 참여했던 이대중 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은 "최근 협동조합학교로 전환한 영국 일반 학교들의 성과와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협동에 능동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 감소와 성적 향상 같은 외형적 성과 이상으로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같은 부분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2. 학교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 교과 내용으로 협동조합 가르치기

학교에서의 협동조합 교육은 우선 사회 교과나 경제 교과서 내용에 포함하여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 영역에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이 소개되길 기대한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농업경영학이나 공업경영학 등의 교과의 기업 활동이나 창업 활동을 다루는 시간에 협동조합의 가능성이 소개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의 얘기를 잠깐 하겠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창의 지성 교과서를 개발해 올해 도내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다. 초등학교용 2권, 중학교, 고등학교용으로 전부 4권이다. 중학교 시민교육 교과서를 처음 기획할 때는 경제부분의 경우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협동조합을 비중 있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후인 2013년에도 여전히 협동조합은 교과서에서 다루기 쉬운 주제가 아니었다. 우선은 협동조합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서 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시민교육’이란 타이틀의 교과서가 물고 올 파장에 대해 조심스러웠던 분위기 탓에 심의는 예정보다 훨씬 촘촘하게 진행되었다. 지난 한 해 교학사에서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들끓었던 것을 생각해보라. 그러는 동안 고등학교 선택교과 ‘실용경제’ 교과서가 먼저 세상에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고등학교용 창의 지성 실용경제’ 교과서에 ‘협동조합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란 제목으로 협동조합의 7원칙, 학교협동조합, 몬드라곤 이야기를 5쪽에 걸쳐 실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교과서를 학교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올리면 전국의 학교에서 채택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올리기 위해선 교육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실용경제 교과서에 ‘교육과정에도 없는

협동조합을 왜 넣었느냐?’는 얘기를 들으며 분위기는 위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의 협동조합 부분은 ‘협동조합 홍보지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핀잔을 들으며 이름만 남게 되고 말았다. 소단원 끝에 들어가기로 했던 ‘로치데일 사람들’도 마지막 단계에 방글라데시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으로 빈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노벨평화상을 받은 그라민은행 설립자 무하마드 유누스로 바뀌게 되었다. 잘 만들어진 실용경제 교과서가 고등학교에서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해서 3, 4천 권 정도 발행되는 것에 비해 시민교육 교과서는 경기도 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포되는 것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2) 동아리 활동으로 협동조합 가르치기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협동조합을 꾸려 운영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모 고등학교에서는 출신 지역이 다양한 선생님들의 고향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위탁 판매한다. 직접 농사지은 채소와 과일, 된장, 고추장부터 참깨와 고춧가루, 감자와 양파, 고구마까지 다양하다. 동료 선생님의 부모나 형제가 생산한 것이라 믿을만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고 생산하시는 이들도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적절한 가격도 보장 받고 판로 걱정까지 덜었다며 만족하신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의 마음을 배운다. 과일이나 감자의 크기와 상태가 균일하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않는 선생님들과 주문한 물건 외에 ‘상품’이 아닌 다른 먹거리들을 상자에 넣어 보내주시는 가족들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이상의 끈끈함이 있다.

매월 한 차례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자원도 절약하고, 수업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 친구들이 만든 천연 비누나 수제 쿠키, 인형 같은 것을 위탁 판매하면서 협동조합을 체험하기도 한다. 학교에서의 이런 활동은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협동조합으로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다.

중소기업청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비즈니스 스쿨(비즈쿨)이란 프로젝트로 창업 의욕을 함양하고 경영, 회계, 마케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거나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비롯하여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가 가진 자원을 공유하고 진로 결정 시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3) 학교협동조합 설립하여 운영에 참여하기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협동조합 교육은 실제로 협동조합 운영에 참여하고 조합원으로서 이용해보는 것이다.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릴 수 있는 이익이란 어떤 형태인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들이 인지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협동'의 좋은 점을 몸으로 부딪쳐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교육(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생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판매할 물품을 고르는 일부터 문 여는 시간을 정하고 수익금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을 깨어나게 한다. 협동조합이 뭔지도 모르던 학생들은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서 협동조합의 역사와 7대 원칙을 공부해 친구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면서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협동조합의 가치에 공감하여 발기인이 되어 교육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을 찾아 벤치마킹을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갈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꿈을 키우기도 했다. 학생들은 발기인 모임이나 이사회에서 한 발언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의 의견과 같이 존중 받은 것이 가장 감동적이라고 한다. 한 학생은 이사로 나서면서 학생회 활

동을 할 때와 비교해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반영되니까 오히려 책임감이 커진다는 얘기를 해서 교사들이 머쓱해 하기도 했다.

3. 학교 협동조합 교육의 기대효과는?

1) 협동조합으로 민주시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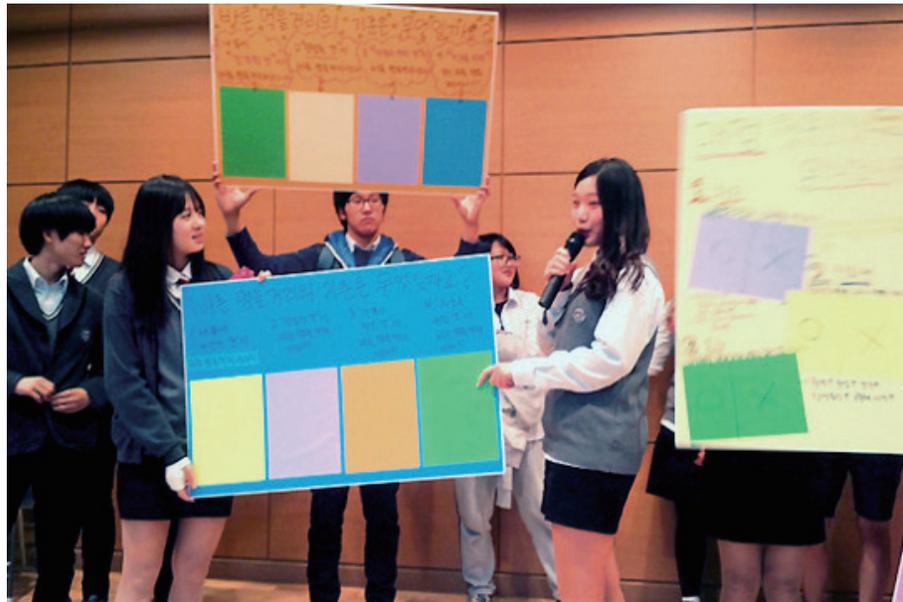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3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협동조합형 매점설립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5개 학교가 선정되어 추진된 시범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우선 국공유시설 임대차에 대해 최고가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을 넘어서야 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얻는 과정에서 학교 매점이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교육부와 기재부 등이 핑퐁 게임을 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적 지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으로 매점을 열 때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솔깃하여 시범사업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어떤 학교는 설립과정의 발기인 모임과 이사회 등을 한 것처럼 대충 서류상으로만 꾸며서 진행하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의 시민의식, 주인의식이 놀랍게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용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 매점을 준비할 때의 일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는 폭발적이었다. 학생 이사를 뽑는다고 하니 너도나도 이사를 하겠다고 나섰고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한 학생은 매점에서 판매하는 빵을 동네 빵집에서 납품받겠다고 했다. 동네에 좋은 재료를 써서 아주 맛있게 빵을 만드는 믿을만한 빵집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 장사가 잘 안돼 고민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지역에 기여하고 연대하는 협동조합의 정신에도 맞다며 다른 것들도 이런 곳을 찾아보겠노라는 말을 했다. 학생들이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듣고 있던 학부모와 교사들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성남 복정고등학교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만하다. 다음은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발기인 모임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이다.

- 저녁까지 도서관에 남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녁 먹기가 힘들다. 매점 시간을 연장해서 건강하고 값싼 저녁거리를 제공하면 좋겠다.
- 친구들 중에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매점에서 일하게 되면 수업에도 덜 지장 받고 임금을 떼일 염려도 없다. 매점에서 일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
- 용돈이 떨어져 배고플 때가 있다. 학생들이 외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약속을 못 지키면 일을 하는 벌을 받겠다.



협동조합 홍보 캠페인을 준비하는 복정고 학생 조합원들.
4개 분과로 나뉘어 매점 개소를 준비했다.(사진 출처: 시사인 김은남기자)

·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꿈인 친구들도 있다. 매점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 손재주가 있는 친구들이 만든 작품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물건들을 대신 팔아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집으로 갈 때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이처럼 학부모와 교사인 어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학생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안해서 어른 발기인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다.

개점을 앞두고 학부모와 교사인 이사들은 매점 형태를 편의점처럼 학생이 들어와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가게 하자고 의견을 냈다. 그런데 학생들은 혹시 분실이나 도난이 생길 경우 친구들끼리 서로 의심하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학교협동조합인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하자는 어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좀 더 현실적인 안을 내고자 했다. 결국 학생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까이 있는 친구들의 학교 몇 군데를 둘러보았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다. 결론은 쉬는 시간 10분, 점심시간 50분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매점 공간도 좁은 '학교협동조합 매점'의 특성을 고려하여 카운터 밖에서 구입하는 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스스로의 문제라고 여길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기대 이상으로 자라난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그저 학생들을 믿고 지켜보며 기다려 주었을 뿐이다.

한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여 드러나는 문제도 있다. 학교라는 특성상 발기인 모임이나 이사회를 여는 것이 모두 학사 일정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수업이 있거나 방과 후 수업, 또는 갑작스런 일이 생겨 교사가 참여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문제는 교사가 불참한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이 뒤늦게 무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다.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 개점을 앞두고 시식회를 통

해 판매 물품을 선정하기로 하고 업체를 섭외하였다. 그런데 학사 일정 상 불가하다며 날짜를 변경하게 되어 여러 업체에 다시 연락을 해야만 하는 곤혹스런 일이 생기기도 했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 스스로 서는 미래를 꿈꾸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진 20대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생을 하고 있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한 의자 놀이처럼 취업을 하는 것이 희망고문이고, 취업 후엔 비정규직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려 고생을 한다. 20대의 상당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며 양극화가 진행되고 과도한 부채와 불공정한 기회 때문에 향후 계층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만들고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식들은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썩어빠진 자녀가 되어 부모의 노후 생활을 위협한다.

UN이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제정하면서 주목한 것은 협동조합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의 대안 역할을 하며, 지속가능한 생산, 자발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 사회적 기능과 파급효과였다.

2008년 미국발 국제 금융 위기에서 보았듯이 이제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아마존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에 폭풍을 일으킨다는 말처럼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전파된다.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 대부분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직원을 해고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와중에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스페인의 몬드라곤 같은 협동조합이 강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협동조합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입시교육을 핑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좁은 경로에 많은 이들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식의 무한 경쟁은 그 치열성 만큼이나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고 탈락한 이들을 고스란히 사회의 짐으로 만든다.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현실적 배움으로 협동조합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함께 힘을 모으고 나누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이 내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삶에 있어 선택지 하나를 더 가진다는 것은 삶을 더 풍요롭고 여유 있게 할 것이다. 하물며 그것이 이웃과 동료와 더불어 살아가는 구체적 실천이 가능한 협동조합이라면 더 말할 무엇하겠는가?

교육의 목표는 세계의 이치나 의미, 그리고 삶의 본질이나 맥락을 바르게 이해하여 삶에서 직면한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적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인간상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협동조합형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토론을 했다. 간절하게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적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협동조합의 7대 원칙과 일치했다고 한다. 현재의 경쟁중심 입시교육 위주에서 협동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협동으로 협동조합하라’는 말이 있다. 마음 맞는 사람 다섯 이상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얼핏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용을 채우고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남는 것을 넘어 목적하는 사업을 이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동조합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현장의 교사들 대부분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다양한 연수 과정을 개발하여 교사들에게 협동조합을 알리고,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의 장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말한다. “자기가 배운 대로 세상을 바라본다.” 협동을 배워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75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좁아진 지구에서 혼자 잘 살기를 꿈꿀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icoop](#)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박주희((준)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준비위원)

1. 들어가며

최근 학교협동조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협동과 상생의 사회를 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확산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협동조합에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학교협동조합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기부터 필요를 모아 사업으로 만들고, 주위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가치를 책 속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연습을 한 학생들이 사회로 나온다면 그 사회는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먼저 국내 학교협동조합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협동조합 사례를¹ 토대로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기술한 이후에, 학교협동조합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학교협동조합교육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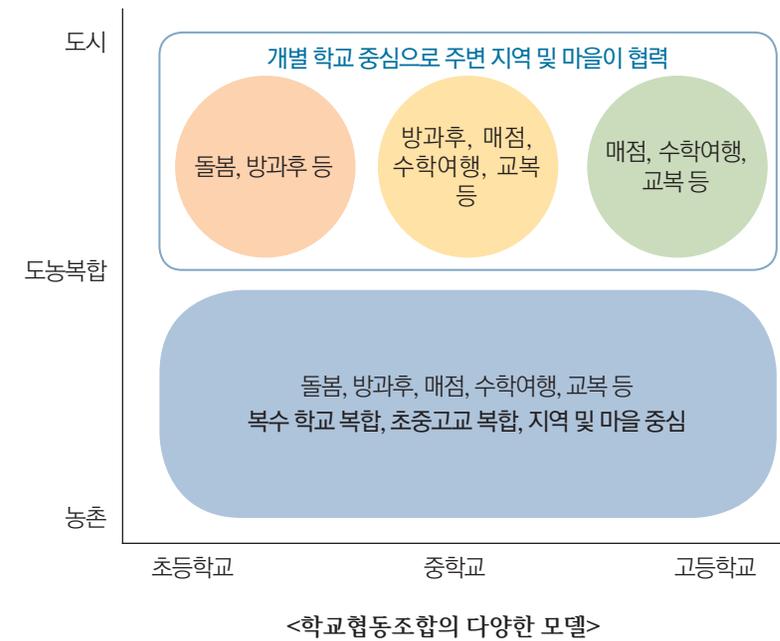
¹ 필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복정고 협동조합에서 2013년 하반기에 인큐베이터로 활동했었고 2014년 여름 현재 대학생 및 지역협동조합활동가들과 함께 복정고를 비롯하여 학교협동조합을 시작했거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7개 학교협동조합 학생위원들에 대한 릴레이 협동조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복정고 사례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2. 학교협동조합의 특징과 현황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정의를 활용하면 학교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교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주희·주수원, 2014)

학교협동조합의 유형은 그 사업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학교 자체를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학교 내의 사업 혹은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교 정규 커리큘럼 및 학교 운영방식에 보다 중점을 두는 형태로, 대안학교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드는 경우나 영국의 협동조합학교(Co-operative school)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학교 내의 사업 혹은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매점, 식당, 교복구매와 같은 사업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교과 과정 외의 방과 후 학교 등을 지역주민이 함께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박주희·주수원, 2014)

학교 내의 사업 혹은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급수별, 지역별로 다른 협동조합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필자가 2014년 6월에 경기도교육청관계자들과 논의하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태동할 협동조합의 유형을 모델화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농촌 지역의 경우는 단일학교의 규모가 작아서 독립적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지역 내의 여러 학교 구성원과 지역조합원이 조합원이 되는 학교협동조합 유형이 생겨날 수 있고, 도농과 상관없이 협동조합의 중점 사업도 급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협동조합의 특징은 목적, 주체, 그리고 거버넌스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목적 면에서 학교협동조합의 필요는 교육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목적과 필요가 중요해질 수 있다. 구체적인 필요를 살펴보면 학교협동조합의 사업영역으로 배미원(2013)의 연구보고서에서 학교매점 사업, 방과 후 학교 사업, 수학여행사업, 공동구매 사업,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상 이익성을 실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개인사업자 매점이나 대기업의 편의점 매점의 경우에는 친환경 식품이나 과일과 같이 상품은 이윤이 크게 남지 않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영리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매점 사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러한 운영원리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학교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체 면에서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구성원들이 조합원이 된다

는 특징이 있다. 학교 구성원은 학생, 교직원 이외에도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포함될 수 있다. 박주희·주수원(2014)은 학교협동조합은 교육적 필요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연결될 때 그 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교육, 식생활 교육, 협동문화 교육 등 학교 교과과정이 아직 다 포괄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교사가 다 담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단순히 학교 교육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 특히 2014년 지자체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등장한 ‘마을 기반 학교협동조합’ 개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청소년교육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초대하면서 학교협동조합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경기도교육청)’, ‘마을결합형 학교(서울시교육청)’, ‘마을기반 학교협동조합 구축(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정책이 그것이다.(박주희, 2014)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면에서 학교협동조합의 특징은 학교협동조합에서는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의사결정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며, 또한 거버넌스 자체가 비용이라기보다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²

학교협동조합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매점사업을 중심으로 교육부의 사회적 협동조합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하고 심사 중에 있는 협동조합으로 서울의 영림중, 독산고, 경기도의 복정고, 흥덕고, 덕이고, 기흥

²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주희·주수원(2014) 참고.

고, 한국문화영상고, 한국도예고, 의정부여중이 있다. 그리고 원주 진광고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 신탁에서 학교매점을 운영해 왔고, 부산국제중고에서는 법인격이 없이 학생 자치적으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³ 그리고 마을과 학교가 결합하여 방과 후 학교 및 교육문화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는 원주의 온고을방과후협동조합, 경기도 연천의 즐거운발견문화학교협동조합 등이 있다.

3. 학교협동조합의 교육 활동

필자가 인큐베이터로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하면서 살펴본 복정고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조합교육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⁴ 학교협동조합 운영과정은 그 자체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회,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살펴 보겠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도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

먼저 이사회 활동을 살펴보면, 복정고에서 창립총회 이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후 과제를 논의한 것이다. 이 첫 이사회에서 했던 것은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며, 이사회와 분과위원회의 관계는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매점운영을 위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짚어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월 1~2회 모여서 협동조합의 주요한 사안을 결정했다.

³ 부산국제중고등학교 사례는 박주희·주수원 (2014a) 참고.

⁴ 필자는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계약을 통해 복정고협동조합의 인큐베이터로 파견되어 창립총회이후 매점오픈 등 한 학기동안 일주일에 1회 정도 복정고를 방문하여, 여러 의사결정과 매점오픈을 지원했다. 박주희·주수원(2014)은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요약 발췌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운영에서 이사회만큼 중요한 것은 이사회 사이사이에 열리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이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 위원회에는 이사 1~2명이 포함되고 조합원 중에서 협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성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책임을 가지고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결의하고 나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위원회의 종류는 먼저 그룹별로 교사위원회, 학생위원회, 학부모위원회의가 있을 수 있고, 업무별로 매점구매위원회, 조직교육위원회 등이 있을 수 있다. 복정고의 경우 학생위원회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학생들은 ‘매점운영에 대한 분과위원회’, ‘교육문화홍보위원회’ 등을 조직했고, 매점판매품목, 매점운영방식, 인테리어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조합원 대상 시식회, 매점 이름 공모 등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매점 운영에 대해 분과회의에서는 벤치마킹을 위해 팀을 나누어서 지역 생협, 대학 생협, 대안학교의 매점 등을 다녀왔고, 성남시의 고등학교를 조사하였다. 교육문화팀은 자체적으로 ‘세계협동조합, 한국의 협동조합, 성남의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홍보팀은 교육과정을 UCC로 만들어서 매장 오픈 기념식 때 상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사 이사들이 지속적으로 공식 비공식으로 회의와 논의를 했는데 이들이 이것을 교사위원회라고 이름 붙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교사위원회의 모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학부모위원회가 구성되기보다는 학부모 이사들과 학교운영위원들이 비공식적인 미팅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부모위원회의 모태가 될 수 있다.

이사회와 분과위원회의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취급물품의 결정이다. 취급물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정고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친환경식품’을 취급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친환경식품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친환경식품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 우리들에게 어떠한 선택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이때 학생들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친환경 매장은 학생들의 선호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 1차 매점운영위원회에 필자가 인큐베이터로 참석했을 때 외부전문가들과 교감, 일부 교사 이사 및 학부모 이사들 간에는 친환경 매점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동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위원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교사 이사들 중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매점 운영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무조건 친환경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기 쉬운 것이다. 이때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 그리고 생협과 우리밀 등의 도움으로 1차 시식회를 할 수 있었다. 매점학생운영위원들이 시식회를 기획하는 회의를 하고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식회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 시식회에서 과자에 대해서는 “친환경이 의외로 맛있다”는 인식이 생겼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식회에서 협찬받지 못했던 빵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2차 시식회를 가졌다. 사실 일정이 빡빡해서 그냥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학생 이사들이 시식하지 않고는 정말 맛있는지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2차 시식회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시식회는 단지 맛이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환경 중에서도 어느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시식회였다. 이 2차 시식회 역시 학생 임원들의 불신을 가라앉히는 데 성공적이었다.

학생 이사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학생 임원들과 친구들에게 이러한 결정을 알리고 홍보할 책임감을 느꼈고, 이것이 개장 초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복정고의 경우 상품취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사회와 매점운영 위원회에서 몇 차례 이야기 하는 시간을 거쳤다. 친환경이라면 꼭 생협 식품만을 의미하는지, 생협 식품이 어떤 면에서 믿을 만한지, 빵과 같은 품목에서 친환경과 일반을 섞기보다는 독점적으로 공급해야 친환경이 외면되지 않을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과 의견들의 오고 갔다. 이러한 논의는 교사 이어나 학부모 이사들이 주도하기 쉬운 주제이다. 그러나 학생들도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실제 매점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을 훈련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 결과 복정고에서 적용하게 된 물품 전략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빵 과자 등 필수 식품을 친환경 100%로 하고, 음료는 친환경뿐만 아니라 일반식품 중 학교매점 취급 적합 품목을 함께 취급하고 있다. 이는 학교 후문 앞에 바로 일반음료자판기업체가 경쟁사로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부로 유출되는 수요를 끌어들이기 점차적으로 친환경의 매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친환경식품의 마진을 최소로 유지하고 일반식품의 마진은 일반소비자가격에 맞추어 높게 유지함으로써 일반식품에서 번 돈으로 친환경을 보존하여 학생들이 가격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친환경식품에 학생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입맛이 변하면서 친환경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여름에 아이스크림 등이 추가로 도입되면 친환경 비중과 매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이 더 활발히 드러날 수 있는 과정이다. 아래의 필드 노트는 복정고 매점운영분과위원회 학생위원들의 회의를 스케치한 것이다. 학생들 서로 간의 배움의 과정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예컨대, 다른 학교 매점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인터넷 조사라는 효율적인 방식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다.

Field notes (2013. 7.29)

매점운영분과위원회(벤치마킹팀)와 시청에서 그룹별로 벤치마킹해 온 결과를 공유하는 모임을 했다. 방중 매점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매점구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매점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더운 날 학생들 18명 정도가 모였다. 토요일이라 오늘은 선생님은 없다. 인큐베이터인 나와 회의실을 빌려준 성남시 관계자만 성인이다. 인큐베이터인 나는 오늘은 참관을 주로 할 테니 그냥 진행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다.

3학년 학생 이사가 회의를 진행한다. 각자 대학생협연합회, 국민대생협 등에 다녀온 내용을 발표한다. 3학년 팀이 발표를 잘해서 약간 놀랐다. 1학년 팀이 약간 수줍어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회를 보던 3학년 학생이사 지혜(가명)가 능숙하게 다른 팀을 먼저 발표하게 하고, 발표가 끝나자 다시 그 1학년 팀에게 발표를 권유한다. 그 수줍어하던 1학년이 발표를 시작한다. 느낌 중심으로 발표를 해서 정보가 충분치는 않았지만 그 정도면 꽤 괜찮은 훌륭한 발표이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누군가 대학생협만이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의 매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다. 팀을 다시 짜려고 하기에 내가 끼어들었다. “대학생협들과 달리 고등학교의 매점들은 개인사업자이고, 여러분이 간다면 반기면서 설명해 주지는 않을지 모른다” 는 요지의 설명을 했다.

그러자 1학년 학생위원이 “그럼 온라인으로 조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 그 학교들에 친구들 있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자 옆에 있던 3학년 학생위원과 또 다른 2학년 학생위원도 자기도 그 학교들 학생회에 아는 친구들이 있다고 거든다. 나에게 어떤 질문을 추가로 물으면 될지 말하기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3학년 학생 이사가 칠판에 그 질문들을 적었다. 학생위원 중 두 명이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의견을 냈다. 질문내용은 “판매 품목, 판매자 수, 매점 오픈 및 닫는 시간, 쉬는 시간에 평균적으로 출 서는 사람의 수, 점심시간에 평균적으로 출 서는 사람의 수” 와 같은 것들이다.

질문이 완성되자 학생위원 3명이 각자 세 개의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냈다. 한 5분이나 걸렸을까 순식간에 인근의 3개 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모였다.

또한 학생들 만의 회의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회의는 또 다른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다. 복정고에서 매점 오픈을 준비할 때 중요하게 내려야 했던 의사결정 중 하나는 매점을 주문형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오픈형으로 만들 것인가였다. 아래의 필드 노트는 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필자가 작성한 것인데, 논의가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에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야기하는 학생의 의견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Field notes (2013. 8. 18)

학교(교장, 행정실장)와 협동조합(몇몇 이사들)이 모여서 학내 공간 사용에 대한 협의를 했다. 공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매점운영방식(오픈형 vs 주문형)을 가능한 빨리 정해야 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외부전문가로서 참여한 정책담당자가 오픈형이 학생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더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었다. 반면에 학내 구성원들 중에는 주문형에 대한 선호가 약간 우세한 편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참여하여 총대를 메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어른이사' 들의 의견이 오픈형을 한번 시도해 보자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매점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던 1학년 학생이사 한명이 얼마 전 벤치마킹팀에서 했던 근처 다른 고등학교 매점 운영 결과에 대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핸드폰에서 열어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타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이 점심시간에는 평균 40명 정도씩이나 몰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좁은 오픈형 공간에 다 들어가 있으면 실제 물건을 고르기 더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문형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견 제출 이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생각도 변화하기 시작했고 주문형으로 매점을 만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사실 협동조합에서 결정하는 많은 의사결정 중에 하나의 정답이란 없다. 모든 결정에는 장단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양한 측면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고려되는가이다. ‘외부 전문가’, ‘교장선생님’이라는 권위에 따라서 충분한 동의가 안 났음에도 따라가게 된다면 아무리 그 결정 자체가 좋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과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수직적 위계질서가 지배적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를 당연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협동조합이 민주시민교육의 공간으로서 가지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공식적 교육활동

이렇게 회의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활동들 외에 공식적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루어진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운영원칙에 대한 교육과 바른 먹을거리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복정고에서 협동조합이해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표> 복정고 협동조합 교육 사례

일시	주제	강사	대상
9.27(금)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협동조합 7원칙 게임으로 배우기	인큐베이터	학생위원
10.18(금)	바른먹을거리교육 및 캠페인	지역생협의 식생활 교육팀	학생위원 및 학생 조합원
10.22(화)	협동조합의 물품선택과정	인큐베이터	학부모 조합원
	협동조합상품의특징 & 친환경빵공장견학	지역생협의 빵공장	

11.22(금)	학교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인큐베이터	전체교직원
11.22(금)	협동조합의 학생분과 위원회조직활동	복정고교사	학생위원
12.14(토)	총회진행방법교육	외부 협동조합중간 지원교육	교사 및 학부모이사 매니저활동가
2014.1월	4차례 세무회계교육	지자체 시사회계기 업지원센터, 프로 보노세무사	매니저활동가

출처: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3)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결과보고서

교육에서는 강의식 교육만이 아니라 게임 등을 활동하여 학생들이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복정고 인큐베이팅만이 아니라 이후 다른 학교에서 진행한 학생위원교육에서도 활용되었는데 그 결과는 7개 학교 멘토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다른 기회에 공유하도록 하겠다. 또한 강의 후 홍보팀에서 동영상 촬영하도록 미리 가이드라인을 줌으로써 내부적으로 성과를 남길 수 있게 하였다. 실제 이 동영상은 “복정고 협동조합 설립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발전해서 협동조합 개소식 때 상영하기도 했다.

지역 생협이 참여해서 진행한 ‘바른 먹을거리 교육’도 있었는데 이 교육에는 학생위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 교육 역시 단순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위원들이 직접 캠페인 내용을 제작해서 교내의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으로 나왔다. 물론 그것으로 교육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 매점을 오픈한 다른 협동조합매점에 비하여 식생활교육을 실시한 복정고 매점의 학생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4.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

위의 기술 내용을 토대로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는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민주적으로 소통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배운다는 점에서,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훈련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배운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허브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게 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학교 협동조합은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틀이다.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앎은 일방적 지식의 전달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갖는다. 협동조합에서 구성원들의 참여활동은 이러한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정고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를 벤치마킹하면서 학습해가는 과정은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매점 운영 분과위원회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매점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책으로 읽거나 강의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른 협동조합이나 다른 학교 매점을 조사함으로써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배움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서로 나누는 것 역시 또 다른 방식의 배움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주변 매점을 조사하기 위해 카톡을 활용하는 것처럼 난관에 봉착하여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은다. 이러한 방식의 지식습득과 교류를 통한 확인과 문제해결력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학교협동조합은 그러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배움의 거리’를 제공한다. 학교협동조합은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은 공간이고, 그리고

그 많은 주제들은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사와 배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 민주적 의사결정의 학습

학교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소통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나이, 직급, 위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1인 1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위계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고, 위계가 낮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 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도 해야 한다. 학교협동조합은 그러한 훈련이 가능한 공간이다. 학교협동조합의 이사회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대등하게 만나는 공간이다. 성인과 청소년,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식으로 위계가 있는 관계이지만, 이사회 테이블에 놓인 그 주제에 대해서는 각각 동등한 입장으로 논리적 토론을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 이사가 자신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른 이사’들을 설득한 것은 그 학생 이사에게나 혹은 교사나 학부모 이사에게나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는 현장 일 수 있다.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구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수평적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가 낫설어 한다는 점이다. 교실이란 공간에서 교사는 학생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와 존경의 대상일 수 있다. 교사에게 학생은 건의하는 주체일 수는 있지만 수평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라고 여겨지기 어려울 수 있다. 학부모 역시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의견이 있어도 자신의 아이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질까봐 선뜻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학생들도 많은 생

각들이 있지만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얘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과도기적 단계일 것이다. 협동조합에서는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자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혼자 내리기보다는, 그러한 정보와 지식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여 최적은 아니더라도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3) 교육 자치의 실현

학교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 낮은 참여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학부모들에게 학교는 조심스럽고 어려운 공간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매점과 같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협동조합활동을 통해서 가까이에서 학교와 교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학부모로서 더 깊은 학교자치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 학교협동조합 인터뷰에서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좀 더 이해하게 된다”는 말을 한 것은 이를 보여준다. 또한 교직원내에서도 직급별로 위계적인 관계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창의적 동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에서 훈련되고 성숙한 참여의 문화가 학교 전체로 퍼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학습

기업가 정신은 “사업 활동에서 계속적으로 혁신하여 나가려고 하며 사업 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조직하고, 실행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 또는 “조직과 시간 관리 능력, 인내력, 풍부한 창의성, 도덕성, 목표설

정 능력, 적절한 모험심, 유머감각, 정보를 다루는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구상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창조성, 의사결정 능력, 도전 정신” 등을 의미한다.

학교협동조합의 이사로서 참여하고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복정고 매점을 오픈하기 까지 내려야 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중의 하나는 “친환경식품 판매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하면서 매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가”였다.

이러한 의사 결정에서 기업가 정신과 대비되는 가장 쉬운 대답은 뭘까? 그것은 “이미 정해진 방향대로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시범사업이므로 시범사업 책임자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식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별다른 숙고 없이 따르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실천이라고 하기 힘들 것이다. 복정고의 경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사회와 매점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이야기 하는 시간을 거쳤고 그 결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름의 물품 전략이나 인테리어 전략을 도출했다.

필자는 이러한 전략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략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기업가정신의 훈련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안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모델을 찾아갈 수 있는 훈련이다.

5) 지역(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학교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그 이전까지 학교와 그 학교가 속한 지역의 만남은 학부모와 교사 간의 만남, 개인사업자와 학교와의 만남 정도이다. 사업을 하지만 이윤이 아닌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비영리(not for profit) 성격의 학교협동조합은 지역과 학교가 지역과 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류하는 것을 축

진할 수 있다. 물건의 공급과 같은 교류 역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큰 주제임으로 별도의 논문에서 논하기로 하고 이 논문은 교육에 초점을 둔 글이므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 해 보겠다.

먼저 지역 생협이나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들과의 교육적 교류가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2013년 복정고의 경우, 한살림 성남용인 식생활교육팀이 와서 ‘바른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을 했던 것은 가장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 협동조합교육은 협동조합교육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들 간의 협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협동조합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가들이 아래로부터 협력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필자가 함께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가칭)라는 민간네트워크 조직에서 진행한 수도권 7개 학교협동조합 학생위원교육에서도 대학생 협동조합 활동가와 지역의 협동조합 (아이쿱, 한살림 등 생협, 문화 및 교육분야 기본법협동조합,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등)의 활동가들이 자원하여 학교협동조합의 멘토로 참여했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관심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기에 학교협동조합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들만이 아니라 그 안의 구성원들의 풀뿌리 연대를 확장하는 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지역에서 학교를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배움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살림 성남용인의 경우 활동가들의 교육활동을 확장시키고자 하던 차에 복정고를 만나서 교육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한살림 성남용인의 구성원들에게도 보람된 경험이 될 수 있었다. 대학생 및 지역협동조합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협동조합에서의 활동경험은 사회에서의 다른 활동으로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5. 나가며

이 글은 먼저 국내 학교협동조합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협동조합 사례를 토대로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기술한 이후에, 학교협동조합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앞으로 진행될 학교협동조합 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일 학교 혼자 책임지기는 힘들고 학교협동조합 간 협력이 중요하다. 학교협동조합을 활용한 교육을 고민하는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뜻을 공유하는 학내외의 다른 선생님들과의 모임과 교류를 통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과과정 내외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하는 모임이 중요할 것이다. 학교협동조합 실무자활동가나 학부모활동가들의 경우도 어찌어찌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고민과 정보를 나누고 힘을 모을 모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내 학생들과의 교류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협동조합의 학생들과의 교류는 언제나 경험과 활동을 풍부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학교협동조합 간의 협력만이 아니라 지역의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조직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2013년 복정고는 설립과정에서 성남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살림 성남용인, 아이쿱친환경급식센터 등의 도움이 있었다. 2014년 7개 학교협동조합 교육에 있어서는 지역의 협동조합활동가와 대학생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2014년의 교육은 학교협동조합이 지역의 다양한 협동조합들(생협, 신협, 기본법협동조합들)이 교육을 매개로 협력할 수 있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 더 다양한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교협동조합에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성과가 공유되고 확산되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별로 혹은 전국단위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이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학교협동조합을 경험한 학생들과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만나고 교류하는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갈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icoop](#)

참고문헌

- 박주희, 주수원(2013). 학교 협동조합의 실험과 확산의 가능성 탐색. 『협동조합네트워크』, 63호.
- 박주희, 주수원(2014). 학교협동조합의 국내외 사례와 활성화방안 모색. 『2014 한국협동조합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박주희(2014). 학교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함께하기. 『제 2회 협동조합 교육포럼 자료집』, 성공회대학교협동조합경영학과.
- 박주희, 주수원(2014). 부산국제중·고등학교 "하루에 3번 학생들에 의해 열리는 쉼터" - 박인순 부산국제중·고등학교 교장 인터뷰. 『학교협동조합뉴스레터』, 2호 (2014년 7-8월호 통합본) <http://blog.naver.com/schoolcoop/220074940327>
- 배미원(2013).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법인화 연구. 『성남산업정책연구』, 5, 성남산업진흥재단.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2014).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서울특별시.
-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4). 『복정고 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인큐베이팅) 최종보고서』, 성남산업진흥재단.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 영국, 핀란드의 협동조합 학교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김아영(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1. 협동조합 교육

협동조합 교육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독특한 미션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Fairbairn, 2003) 특히 협동조합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교육 역시 추상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상호 참여를 통해 수행되는 실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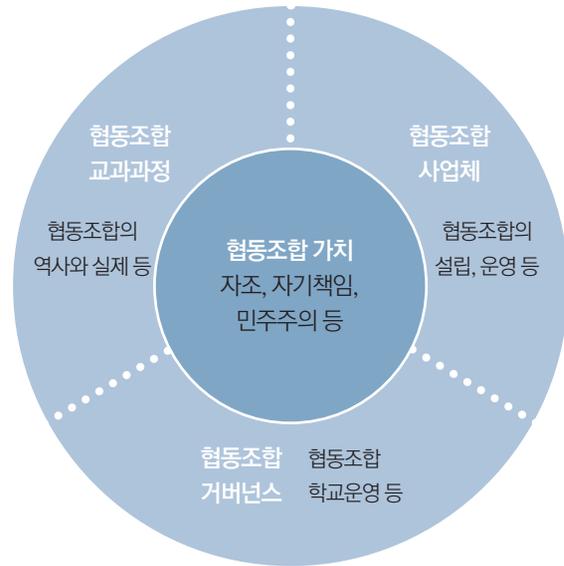
1990년대부터 교육 분야에서는 인간의 학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사회적 구성주의가 소개되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David & Land, 2000) 전통적인 교수 중심(transmissive instruction)의 교육에서는 교사가 어떻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면, 학습자 중심(student-centered)의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가 어떻게 학습 환경에 영향을 주고 의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처럼 학습자의 상황과 학습의 맥락을 강조하는 시각은 협동조합 교육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지식의 의미와 지식 구성의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구성주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상황학습이론(Situated Learning Theory)은 협동조합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구성주의 교육철학은 지식이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진리이며 학습은 이러한 외부 세계의 진리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전통적인 교육학적 이론들과는 달리 지식을 인간이 경험을 통해 구성된 세계에 대한 해석이라고 본다. 브라운 등(Brown et al., 1989)은 지식은 상황적

인 것으로 그 지식이 사용될 과제, 맥락, 문화 안에서 생성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상황학습이란 실제 상황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환경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문화 적응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상호적이며 참여가 학습과 이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레이브(Lave)와 웅거(Wenger)는 학습을 ‘개인의 정보 처리 과정의 결과’로서 논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도했다. 즉, 학습이라는 활동은 개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Lave & Wenger, 1991) 이들은 학습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은 지식의 공유가 아니라 상호 참여하려는 공동 능력이며 이러한 실천을 공유하는 사회적 집단을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라고 정의하였다. 실천공동체는 관심 영역과 주제를 나타내는 영역(domain),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인 실천(practice), 공통의 참여자와 참여 의지에 바탕을 둔 공동체(community)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쇼(Shaw, 2011)는 상황학습이론과 실천공동체 개념으로부터 협동조합 교육에 대한 통찰과 함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일상적인 참여를 통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 사업가적인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협동조합들은 이러한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과 맥락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페이스 등(Facer et al., 2011)은 협동조합 교육의 개념으로 협동에 관한 교육(Teaching about co-operation), 협동을 위한 훈련(Training for co-operation), 협동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co-operation)을 주장하였다. 먼저 협동에 관한 교육은 대안적 경제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으로 당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과 실천, 협동조합의 역사와 실제에 대하여 다룬다. 협동을 위한 훈련은 협동조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과 역량에 대한 훈련으로 설립과 운영, 개인의 역량 개발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협동을 통한 학습은 협동조합에 참여함으로써 평등과

연대를 기초로 하는 관계를 통해 개인은 자기 책임과 자조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게 된다. 최은주, 김아영, 장승권 등(2014)은 협동조합 교육의 연구 모형으로 협동조합 사업체 운영과 교육과정, 학교 운영 등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제시하였다.



<그림> 협동조합 교육 모형¹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와 상황학습이론을 바탕으로 <그림>과 같은 협동조합 교육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협동조합 교육은 협동조합 가치를 기반으로 협동조합 교과과정, 협동조합 사업체,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협동조합 교과과정은 협동조합의 역사와 실제 등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협동조합 사업체는 사업체의 설립과 운영,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협동조합 거버넌스는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협동조합 교과과정과 협동조합 사업체 및 거버넌스가 각각 분리되거나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

¹ 최은주 외(2014)의 '협동조합교육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한 것임.

는다는 것이다. 먼저 협동조합 교육에서는 '이론'과 '실천'이라는 이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에 관한 학습'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협동조합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교육에서는 '가르침'과 '배움'의 이분법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동시에 함께 가르치는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2. 협동조합 학교 교육² 사례

협동조합 교육은 수준과 범위, 영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협동조합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학교 교육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1) 영국 협동조합 학교 교육

영국의 협동조합은 교육 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학교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동조합 교육 모형(<그림>)에서 제시한 협동조합 교과과정과 협동조합 사업체, 거버넌스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협동조합학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 '협동조합 교과과정'에서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협동조

² 협동조합 학교, 학교협동조합, 협동조합 학교 교육 등 현재 협동조합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협동조합 학교'로,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학교 내 협동조합을 '학교협동조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협동조합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조합 관련 교육 전반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였다.

합 시민(Co-operative Citizenship)'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시작된 'Young Co-operatives'은 학생들이 실제로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동조합 사업체'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책이나 보드게임,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는 협동조합을 직접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지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필요에 응답하기 위한 영국 협동조합의 노력은 '협동조합 거버넌스' 과정에서 두드러진다. 2014년에 약 740여 개의 공립학교가 협동조합 트러스트 학교(Co-operative Trust School)³와 협동조합 아카데미(Co-operative Academy)⁴로 전환했다. 협동조합 학교는 부모, 직원, 학생, 지역사회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협동조합 교육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코옵 컬리지(Co-operative College)⁵는 협동조합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교육과정 개발, 협동조합학교 부문 개발, 학교 밖 청소년 협동조합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1> 영국 협동조합 학교 교육

협동조합 교과과정	협동조합 사업체	협동조합 거버넌스
-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 - 협동조합 역사와 실제 - 협동조합 시민을 위한 교육	- Young Co-operatives	- 협동조합 학교 - Co-operative College - 지역 사회

3 트러스트 학교는 제도적으로 공립학교이지만 지방 정부와 교육청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비영리재단에 의해 운영된다.

4 아카데미는 특수 공립학교의 형태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만 자립적으로 운영되며 비영리재단 형태(협동조합 등)이다.

5 1919년 맨체스터에 설립된 협동조합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협동조합 연구, 문화유산 관리, 협동조합 교육, 국제프로그램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2) 스코틀랜드 협동조합 학교 교육

스코틀랜드의 협동조합 학교 교육은 협동조합 교육 모형 중 '협동조합 교과과정' 부문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2006년에 설립된 스코틀랜드 협동조합교육 트러스트(Co-operative Education Trust Scotland, 이하 CETS)가 학교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 협동조합 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성과로 2010년부터는 '보다 수준 높은 교육(Curriculum for Excellence)'이라는 정규 교육 과정에 협동조합 부문이 개설되어 협동조합 사업체, 국제적 협력, 협동조합 역사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학교 39%가 CETS에서 제공하는 협동조합 교육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사업체' 과정은 학생들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들이 협동조합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Student Co-op Revolution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협동조합 거버넌스' 과정은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영국은 협동조합 학교라는 제도적인 접근을 하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지방정부, 지역 사회 등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진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표 2> 스코틀랜드 협동조합 학교 교육

협동조합 교과과정	협동조합 사업체	협동조합 거버넌스
-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 - 협동조합 역사와 실제 - Curriculum for Excellence	- Student Co-op Revolution	- 학교 - 지역 사회 - 지방 정부

3) 핀란드 협동조합 학교 교육

핀란드 협동조합 학교 교육의 특징은 고등 교육과 '협동조합 사업체' 부

문의 활성화이다. 2014년 협동조합 관련법의 개정으로 1명만으로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국민의 84%가 협동조합 조합원인 핀란드에서는 협동조합 사업체가 다른 나라보다 친숙하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의 협동조합 사업체를 정규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1993년부터 학생들이 설립한 학생협동조합을 통해 기업가 교육이 실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7개 대학교에서 Co-operatives Team Entrepreneurship Program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내에 있는 기존의 학교 협동조합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협동조합을 창업할 수 있으며 같은 협동조합 내에서도 다시 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사업체의 효율적 운영 과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가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를 익히게 된다. ‘협동조합 교과과정’ 부문에서는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한 협동조합 대학교 교육 네트워크(Co-op Network Studies)가 구축되었다. 2005년 처음 시작된 Co-op Network Studies에는 현재 8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사업체의 설립과 계획,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등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협동조합 거버넌스’ 과정은 스코틀랜드의 경우와 비슷하게 지방정부, 지역 사회 등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 핀란드 협동조합 학교 교육

협동조합 교과과정	협동조합 사업체	협동조합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 - 협동조합 역사와 실제 - 협동조합 사업체와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 Co-op Network Stu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peratives Team Entrepreneurship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 지역 사회 - 지방 정부

3. 협동조합 교육과 학교 교육

본 글은 협동조합교육과 학교 교육을 살펴보기 위해 전통적인 교수 중심의 교육이 채택하고 있는 이론과 실천의 이분법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즉, 협동조합은 인간의 활동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실천과 참여의 과정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교육 역시 이론과 실천을 분리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주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학습이론과 실천공동체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교육의 모형을 제안하였다. 협동조합 교육 모형은 협동조합 가치를 기반으로 협동조합 교과과정과 협동조합 사업체, 협동조합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협동조합 모형을 구성하는 각 과정들은 칸막이를 통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협동조합 학교 교육도 네 가지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영국과 스코틀랜드, 핀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동조합 학교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영국의 협동조합 학교 교육은 협동조합 연구 모형의 네 가지 과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현재는 학교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협동조합 거버넌스’ 부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국과는 달리 스코틀랜드의 협동조합 학교 교육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조직과 운영 등 ‘협동조합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학교 자체의 제도적인 변화를 피하기보다는 학교 교육의 정규 과정에 협동조합 교과과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 협동조합 학교 교육은 ‘협동조합 사업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사업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경험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협동조합 학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협동조합 연구 모형을 통해 여러 국가의 협동조합 학교 교육을 살펴본

결과, 국가와 현재의 상황, 협동조합의 실제 발전과정 및 형태 등에 따라 협동조합 학교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국내 협동조합 학교 교육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의 협동조합 학교 교육은 이론과 실천의 분리를 넘어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한다. 즉, 협동조합 학교 교육이 기존의 다른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천이 분리되고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과 학생들의 기계적인 습득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교과과정과 협동조합 사업체, 협동조합 거버넌스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해외의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단순히 해외 사례를 통해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례들의 전제 조건 즉, 그 국가의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icoop](#)

참고문헌

손민호(2002). 상황학습론: 학습활동의 관찰. 『아시아교육연구』, 3(2).

최은주, 김아영, 장승권(2014). 국내외 협동조합교육의 현황 및 전망, 『협동조합교육포럼』, 서울.

Brown, J., Collins, A. and Duguid, P.(1989). Situated Cognition and the Cul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 18(1).

David, J. and Land, S.(2000). *Theoretical Foundations of Learning Environments*, 김현진, 정종원, 홍선주 역(2012). 『학습자 중심 학습의 연구·실천을 위한 이론적 토대』, 경기도, 교육과학사.

Facer, K., Thrope, J. and Shaw, L.(2011). Co-operative Education and School: An Old Idea for New Times. *The BERA Conference*, London.

Fairbairn, F.(2003). *Three Strategic Concepts for the Guidance of Co-operatives*. Center for the Study of Co-operatives, Saskatchewan.

Hartely, S.(2011). *A New Space for a New Generation: The Rise of Co-operatives amongst Young People in Africa*, Co-operative College, Manchester.

Lave, J., and Wenger, E.(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손민호 역(2010). 『상황학습: 합법적 주변 참여』, 서울, 강현출판사.

Shaw, L.(2009). *Making Connections, Education for Co-operatives*, Co-operative College, Manchester

_____ (2011). *Co-operative Education Review 2011*, Co-operative College, Manchester.

Troberg, E., Ruskovaara, E. and Seikkula, J.(2011). The State of Co-operat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Fin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o-operative Management*, 5(2).

Wenger, E.(1998). *Communities of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때/곳: 2014년 8월 12일(화) / 성공회대 승연관 세미나실

참석: 강연수 (성남북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교사)

김민성 (서울독산고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학생)

김현미 (서울독산고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학부모)

박선하 (성남북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학생)

황성경 (성남북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학부모)

사회/정리: 지민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사회: 반갑습니다. 최근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담아내는 수많은 기사들은 학교협동조합의 일부분, 즉 친환경 매점 운영 관련 사항을 단편적으로 전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므로 학교마다 다른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학교라는 공통의 분모로 대부분의 학교협동조합이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차이와 공통의 경험들을, 학교협동조합 조직 이유와 학교 구성원들의 결합 과정, 준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 내외의 난관과 이에 대한 대처, 그리고 앞으로 학교협동조합에 거는 기대를 중심으로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협동조합을 조직했으나 조금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두 학교의 학교이해관계자 각 주체들로 좌담회 참석자를 구성했습니다.¹

먼저 두 학교에서는 어떤 이유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추진하게 되었는지, 추진 과정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각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추동 주체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서울독산고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학부모, 이하 김현미): 독산고는 작년에 일반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신청하고 올해 다시 사회

¹ 북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3년 9월 교육부 인가를 받아 2013년 10월 매점을 열었으며, 독산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3년 9월 일반협동조합으로 시작하였고 좌담회 이후인 8월 19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교육부 인가를 받았습니다.(필자 주)

적협동조합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매점 사용료 수익이 전체 학생복지에 쓰여야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시작으로 매점 수익을 다시 학생복지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매점 자체가 공익적으로 좋은 것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즈음 이미 언론을 통해 북정고와 영림중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친환경 매점 운영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친환경 매점 운영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움직임과 준비가 있으니 우리도 친환경 매점 운영을 추진해보자 했던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등 친환경 학교 급식을 위해 금천구에서 각 학교별로 일정 정도 예산편성을 해주는 등 학교 급식은 친환경을 지향하는데, 매점에서는 학생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을 파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강연수(성남북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교사, 이하 강연수): 북정고는 2010년에 개교를 하였고 학교에 매점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성남시와 서울시의 경계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에 문구류 등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간식을 집에서 싸오곤 했고 그런 불편함을 절절하게 느껴오면서 몇몇 선생님들이 매점 하나 있으면 좋겠다며 얘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개교 이후 학교가 채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매점은 만드는 과정이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뜻 시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당시 사회적으로도 학교매점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되곤 했었습니다. 마침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한창 높아졌습니다. 이즈음 매점이 만들어진다면 협동조합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13년 2월 방학 중에 공문을 살펴보다 학교매점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해보자는 성남시의 학교매점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기간이 2월까지여서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 고려되지 않아 제가 개인적인 관심으로 문의 했을 당시, 아무 학교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2월 중 새로운 학사일정을 계획하고 의

견을 모을 수 있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여 신청 기한 연장을 건의했는데 사업주체의 사정도 있어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성남시가 경기도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 경기도 전역의 시범사업으로 확대되었고, 복정고는 마침 그 기회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 매점에 대한 필요 혹은 새로운 매점에 대한 요구가 당시 학교협동조합의 시작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필요성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신 것이지요?

강연수: 명확한 생각은 아니었지만 협동조합 형태의 매점이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매점을 만들기 전인 2011년경,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 그 옆에 위치한 공장이 자판기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은 오아시스를 만난 것 마냥 쉬는 시간마다 대탈주를 벌였는데, 절실한 아이들의 필요가 해결되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파는 음식들을 관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엔 싸게 팔다가 가격을 서서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면 학교 쪽으로 수익을 일부 환원한다거나 쓰레기를 치워주는 등 어느 정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그 수익이 자신들을 위해 다시 쓰일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협동조합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와 같은 생각들을 막연하게 가지게 되었고 마침 시범사업 정보를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현미: 협동조합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조목조목 따져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조건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으로 해보자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영림중과 같은 사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 학교 구성원이 직접 매점을 운영하기 위한 법안적 필요와 같은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생협에 대한 경험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매점을 운영한다면 생협의 물품, 유통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갖게 했습니다.

사회: 학부모 혹은 교사 등 학교이해관계자 일부의 막연한 기대였지만 두 학교 모두 일반 매점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협동조합 방식에 대한 기대의 바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일반매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추동 주체가 두 학교에서 달리 나타났듯 다른 주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협동조합 움직임에 함께 하게 되었는지도 학교마다 달랐을 거라 생각됩니다.

박선하(성남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학생, 이하 박선하): 우리 학교(복정고)는 학교협동조합을 시작할 때부터 학생들이 발기인의 주체로 함께했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교내 방송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학교 매점을 설립해서 간식 선정도 학생들이 하는, 학생들이 함께하는 매점을 시작해보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년별로 발기인을 뽑아서 4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교육도 시작하면서 바라는 형태의 매점을 건의하고 그 형태로 발기인 모임을 지속하면서 지금의 매점을 탄생시켰습니다.

강연수: 시범사업에 대한 공문을 접하고 신청하긴 했으나 교사의 호응을 모으는 것도 그리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시범사업일 경우 더더욱 학교에는 부가적인



업무가 되는 현실입니다. 가치를 알더라도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장선생님 두 분이 연달아 정년퇴임하시고 새로운 교장선생님 부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발령 소식이 나자마자 관련 팀이 부임할 교장선생님을 뽑고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교 이후 학교가 채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은 되었지만 선생님들이 움직이신 것이죠. 그리고 사실 협동조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적합할지 등 공부를 하고 시작했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좋은 일이니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설득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이 모두 교장선생님 부임 후 2월에서 3월 초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공립학교의 특성상 이때가 무척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2월 말경 선생님들이 새로 오셔서 업무분담이 다시 이루어지고, 3월 초가 되면 학생들을 다듬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좀 정신없이 결정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황성경(성남북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학부모, 이하 황성경): 학부모는 작년 3월 총회 끝나고 얼마 안 있어 호출되었습니다. 시작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우선 학교 임원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하자는 제의에 따랐습니다. 알고 시작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가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사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따라가기는 힘들더라고요. 학생들은 학습도, 결정에 따른 실행도 무척 빠르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북정고는 2월 말, 3월 초 교사 사이에 공감을 형성, 신임 교장선생님 설득 과정, 이후 학년 대표들 중심의 학생 결합, 또 오래지 않아 학부모님들의

동참이 이루어졌군요. 과정은 쉽지 않았어도 결정과 실행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생각됩니다. 서울은 사뭇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우리 학교(북정고)의 경우는 위로부터 온 것을 받은 거죠. 정확한 모델은 없지만 영림중학교 사례는 알고 있었고 실질적인 필요가 있어 준비하고 있었지만, 학교협동조합 시범사업이 아니었으면 선뜻 시작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재단과 같은 기관들이 성남시 일자리 창출과 협력체계를 이루며 설립과정 지원 등 도움을 주었습니다. 필요도 있었고 마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 경기도와 달리 서울은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독산고)의 경우 처음 제안하신 분은 교사였습니다. 친환경 매점 제기에 앞서 ‘매점사용료 수익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나쁜 것을 팔기보다 애초에 좋은 것을 파는 게 맞지 않나?’ 라면서요. 그 선생님의 관심에 학부모가 귀 기울이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생각으론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실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자주 찾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선생님이 중간 역할을 하시며 교사와 학부모 양측에 논의된 것들을 공유해주시곤 했습니다. 교사회의를 통해서 교사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하시고, 우리 학부모들과의 다리 역할을 해 오신 겁니다. 물론 몇몇 생협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텃밭 모임, 아버지 모임, 소모임 등에서 학부모들은 8월 말 첫 총회를 열기까지 여러 문제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작년 12월 조합원 교육에 다섯에서 일곱 분 정도 오셨습니다. 협동조합 취지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절실함 같은 것을 보기는 어렵지요. 조합원 권익을 위한 목적성에 출자 참여는 하시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극적인 활동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점을

실제로 운영하고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을 자주 만났다면 상황은 달랐을 거라 생각해요. 매점 운영을 못 한 채로 법인격만 가지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교육만 하니 친근해질 수 있는, 어떤 경험을 나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합니다.

김민성(서울독산고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학생, 이하 김민성): 학생들도 같은 이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점을 이용하면서 직접 체감하고 관심을 키워갈 기회가 없었던 거죠. 아직 공식적으로 학생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진 않았고, 제 경우는 교장선생님께서 학생회장이나 협동조합 관련 회의에 참석하라고 권하셔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을 하다 보니 사회적협동조합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를 위해 일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함께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생을 대상으로는 학기 중에 학생 교육과 생협 먹을거리 시식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번 여름방학에 대학생 멘토링 수업이 있었습니다. 대학 생협의 경험을 지닌 형, 누나들과 협동조합에 대해 얘기해보고 게임 등을 통해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학생회 친구들을 모아서 참가했고, 학생회 친구들도 좋았다고들 얘기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잘 정비되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면 학생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성 (서울독산고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학생)

김현미: 독산고는 사실 작년에 일반 협동조합으로 시작할 때 교원과 학부모만 참여했어요. 총회에서 학생들의 친권보호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인격도 일단 협동조합부터 만들어 매점운영을 시작하자고 해서 일반 협동조합으로 신청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바는 사회적협동조합이지만 인가에 약 2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신청 수리가 30일 이내에 가능한 일반 협동조합으로 했던거죠. 8월 말 총회를 했던 입장에서 10월에 있을 매점 사업 입찰에 참여하고자 편의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결국 매점 사업은 못 하면서 조직 활동만 유지하다가 올해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설립 등기를 준비 중이고, 이번엔 학생들도 참여하는데 학생 중 등기이사들만 참여하고 이후에 더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의 협동조합 교육은 진행 중입니다. 신문읽기 동아리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을 공부하는 3차시 6시간 교육이 있었어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었던 협동조합을 통한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교육에 학생회는 교육회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방학 중에는 대학 생협 멘토단의 도움으로 12명의 학생들이 이틀간의 멘토링을 체험했습니다. 친환경 먹을거리 시식회, FC바르셀로나 등에 대해서 협동조합이야기를 발행하는 등으로 학생회가 들인 노력 모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에 앞서 체험과 교육을 통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사회: 사실상 참여가 법제도 환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경험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필요와 관심을 풀어내며 겪은 경험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학교 안팎의 환경과 관련한 법규 문제, 인적 조직 구성 과정의 문제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경험한 참여 방법과 그에 따랐던 어려움과 시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선하: 복정고에서는 처음부터 300여 명의 학생 조합원이 함께했어요. 협동조합의 취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발기인들이 운영을 위해선 조합원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조합원을 가장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건 학생들이라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과정도 있었지만 학생 복지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니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총 4명의 학생 발기인을 중심으로 친구들을 불러와 학생홍보단을 자연스럽게 꾸렸어요. 체육대회 시즌 부스 운영을 시작으로 FC바르셀로나라든지 협동조합 사례를 들어 각 학급 홍보를 통해 협동조합을 알렸고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방송이 나왔을 때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저게 뭐지? 좀 힘들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생이 학업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학생회에서 학생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침 협동조합을 운영한다고 해서 학생회 몇몇 학생들이 ‘저거다! 우리가 참여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우리가 의견을 내어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우리 학교는 참여하는 학생들은 여러 활동에 중복해서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함께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참 큼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데 익숙하고 어디를 가든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이 되어 의견대립 없이 운영하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강연수: 복정고는 정말 학생의 참여를 너무나 당연시했습니다. 시범사업에 따라 지원 들어온 분들도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시작을 한 것이죠. 교육도 다 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최대한 끌어모았는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교 당사자도, 지원 연구자도 모두 실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시행착오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총회할 때부터의 실수들, 공증의 문제에서부터 미성년인 학생들 등기시킬 때 양 부모의 인감이 들어간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 것들 모두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창립 총회할 때 공증도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총회에 참

석해서 직접 확인하는 참여공증을 해야 했는데,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150명을 해야 했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나마 지자체, 교육청이 연계된 시범사업이어서 변호사를 비롯한 도와주신 관계자들이 호의를 갖고 부딪치는 난관마다 여러 편의를 봐주셨습니다. 50~60만 원 정도의 참여공증비용도 사업지원비와 프로보노² 등 여러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총회는 참여공증을 잘 하자 했는데, 도움을 주시기로 한 변호사가 오셔서 300명이라는 인원을 보고 놀라신 거예요. 나중에야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부처에 공증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의 과정에서 만나는 교육부 담당자도 협동조합 관련 업무가 처음인 데다, 해마다 새로운 담당자로 바뀌는 상황이어서 이전 담당자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면서 진행이 이루어져 심사에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 학교가 같이 신청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호의를 가지고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면제된다고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교가 모여 하는 것이 힘이 실릴 수 있을 듯합니다만.

김현미: 학교협동조합 연합회를 만들어 이런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이 학교를 벗어나 사업을 확장하면 모르지만 구성원 학생들의 신분은 확실한데 말이죠. 이런 제도들에 진이 빠지면 누구도 엄두를 못 내지요. 그나마 사례가 있고 협동조합을 접해봤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계속 여러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관계 그룹들이 나서주었으면 좋겠어요. 학교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

²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직업을 통해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 (사가 이쿠마, 2012, 프로보노)(필자 주)

황인데 생협들은 대표적인 제품부터 시범물품으로 시작해서 소포장 제품 다양화와 가격현실화가 될 수 있게 빨리 대응해주고, 전문가 집단과 공공기관은 프로보노 활동이나 제도적인 문제 해결 등 각 역할을 나누어서 해 나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공증, 소포장 물품 등 일일이 찾아다니며 알아보고 설득하고 하면서 힘들고 진이 다 빠져버리죠. 관계 집단들이 우리에게 힘을 보태줘야 하지 않겠어요?

강연수: 정말 학생의 참여를 원한다면 등기제도, 총회 공증과 같은 제도절차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인감이 필요한 것은 한부모 가족, 조손 가정과 같은 각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학생들 앞에서 분명히 선출은 됐지만 등기된 이사가 있고 안 된 이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기가 되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어차피 학생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니까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서로 가정사를 캐물어야 하고, 말을 전해야 하고, 이를 해마다 반복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런 과정에서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 올해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1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듣게 된 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황성경: 처음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는 인감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별 의문을 갖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학교에 문의했고요.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 부분을 물어본 적이 없어서 다른 분의 생각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박선하: 저도 함께하는 이사 중에 한부모 이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같이 서류를 준비할 때 많이 물어봤어요. 나는 이러한데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다. 그 친구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준비해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어요.

사회: 현실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 환경은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 환경이 되는 법 제도는 학교협동조합의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매점사용수익권에 대한 입찰이 그 대표적인 문제일 텐데, 사업 관련 법 제도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가셨는지.

김현미: 독산고는 사업 시작을 위해 서두르느라 일반 협동조합으로 시작해서 참여한 입찰 결과는 8개 업체 중 6순위였습니다. 최고가 입찰제에 따라 1년 간 매점 사용권에 2,000만 원을 제시했고 6위에 그쳤습니다. 순진하게 1순위를 설득하려 했는데, 5순위까지 모두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학교협동조합이 친환경 매점사업을 통해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업을 해야 지속가능하고 하나의 현장, 교육장소 제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매점이어서, 이후 다른 사업의 가능성을 생각하더라도 우선 매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매점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만든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입찰에 우선권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요.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최고가 입찰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올해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시범사업형태로 해보기 위해 지금 학교에서 여러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도 매점을 하지 못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해진 장소에서 일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학교협동조합이 법인을 유지하기는 어렵거든요. 전국에서 학

교협동조합 움직임이 있을 때 이런 제도적 문제를 고쳐놓아야 실제 실행이 가능합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배당도 안 받고, 사업수익은 결국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강연수: 우리 학교는 이전에 매점이 없었고 외진 곳에 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워낙 외지 아닌 외지에 있으니 일반사업자가 우리 학교 존재 자체를 모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2013년 4월에 경기도교육청,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재단 세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를 근거로 자연스레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감히 접근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MOU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생각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다른 학교들이 다 겪어야 할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 입찰, 수의계약 모두 매점사용수익권에 대한 법규에 따라 매점사용 기간의 문제로 학교협동조합의 사업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의 문제는 법규 외에 학교가 지닌 특성이기도 합니다. 학생, 교사, 학교장 모두 세대가 바뀔 때 처음 관심을 갖고 학교협동조합을 일군 사람들이 다른 구성원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민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김현미: 독산고는 아직 매점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사용수익권을 따는 데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물론 법규가 장애물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교장선생님의 강한 의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장의 의지가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그 의지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의 존폐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본환경이 되는 법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수: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 교사가 자주 바뀌는 문제가 사실 걱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대다수를 이루는 학생들의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건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좋아서 참여했지만,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1년 동안은 학교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직원이나 기관의 리듬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학교 리듬에 맞게 정리해야 하고 이때 학생이 수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용으로도 중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올해는 학생 중심으로 만들어 가려고 천천히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4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사회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어른들이 운영에 필요한 결정들을 실행하는 단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좀 뒤집어 실제적으로 핵심 활동기구를 네 개의 위원회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위원회에 선생님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필요들을 자체적으로 위로 올려서 결정하고, 활동 보고하고, 이사회에 결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학교의 행정과 협조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몇 분을 제외하고 교사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하나의 일이거든요. 작년에는 기존에 있던 혁신부에 갑자기 협동조합 관련 일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피곤해 하셨어요. 올해는 분리해서 전담교사를 만들었고, 인문사회부에 제가 담당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선후배 간에 물려지는 것이 있으니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교사는 행정적 지원, 분과 활동 지원을 해주고 학부모님들도 이에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인 부분은 이렇게 해도 일하는 사람만의 일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과정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조직의 이름은 다르고 모임의 이름이 다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컨대 학교협동조합 이사장님은 학부모 회장님이고, 박선하 학생 이사는 부학생회장이에요. 50명의 적극적인 아이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이 대부분의 일을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확대하는 데 제한이 있죠.

박선하: 매점이라는 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보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의견을 내야 하는 동시에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수업하고 야자까지 하다보면 학생들끼리 모이고 싶어도 모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라서 친구들도 많이 안타까워해요. 선생님들,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너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씀 하는데 그럴 상황이 되지 않아 학생들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사회 중에 8명의 학생 이사가 있어요. 저희들은 이사회 발언을 하고 싶죠. 이끌어가고 싶은 모델이 있고 형태가 있는데 말하기 어려운 건,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학생회 회의면 의견을 막 던져보고 해보자 하고 우겨서라도 해결해 가면 되는데 이걸 아니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법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니 저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법이 이런 상황에 맞게 간소화되거나 쉽게 설명이 되면 저희도 하고 싶은 사업이 굉장히 많고 도전해 볼 의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죠.

사회: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협동조합 관련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과외로만 덧붙여서 해야 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특별활동 등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 노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강연수: 올해 초 학사일정을 짤 때 적극적으로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조합 활동을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 내로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활동시간을 보장해주는 것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3월 정기총회 시간을 민주시민교육장으로 해서 정규 시간 내에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활동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체계화가 된다면 1년 안에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 안에 녹여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일과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막연하게 감 잡아서 해가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계획해야 해서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학교 차원에서 봉사활동처럼 보상해주고 싶은데 말입니다.

이때 조합과 학교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일이 또 고민입니다. '이게 조합이 하는 일이야, 학교가 하는 일이야?' 하는 것이죠. 가정통신문을 보내야 하는데 학교장 도장을 찍어서 하나, 이사장 도장을 찍어야 하나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과 같이 돌아가야 하는 일인데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어느 때는 편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 조합이 할 영역과 학교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의 경계. 이 문제를 학교 차원에서만 고민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현미: 독산고는 사업운영의 경험이 없어 아직까지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어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창체 시간에 반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어서 협동조합이 등록하면 학생들의 활동을 자원봉사 점수로 등록해주는 제도 ‘1365 자원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지 않겠어요?

박선하: 네, 경기도도 1365 해당돼요. 그런데 1365 이용이 좀 애매해요. 우선 학교에 있는 시간은 봉사로 인정이 안 되고 수업시간 외로 해야 하는데 야자하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 한 시간뿐인 거예요. 솔직히 한 시간 자원봉사 점수 받고 활동하는 거나 안 받고 하는 거나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똑같아요. 협동조합 활동을 한다 해서 애들이 상점을 바라거나 봉사시간을 바라거나 하지는 않아요. 같이 활동하고 이끌어가는 이사로서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고맙게 생각하죠. 협동조합 활동에 시간을 많이 쏟는 친구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어도 저희가 그거 때문에 고민하고 부담 느끼는 걸 알고 그 친구들이 먼저 괜찮다고 오히려 이해해주는 편이에요.

황성경: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까지 잘은 모릅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면 매점 둘러보고 가라고 권하는데, 원래 없었던 학교기 때문에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협동조합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부모님들

은 자세히 모릅니다. 활동하는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약간의 불만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학 중에도 일주일에 1, 2번씩 모여 회의를 했어요.

강연수: 저희가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빠르게 만들어나가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긴급하게 회의 소집이 잦았습니다. 올해는 제일 먼저 회의와 이사회 일정을 정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사들은 회의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곤 해서 회의 자체를 싫어하게 될까 염려되어, 이제는 1시간 내로 끝내자고 하고 타이머 재 놓고 합니다. 정말 시간 안에 의견수렴을 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조금씩 학교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세대교체라는 학교특성과 연계해서 학생 중심의 학교협동조합의 필요성과 그 한계에 관한 얘기를 복정고가 지난 1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럼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 또는 느낀 점을 사업운영을 해 본 입장과 사업운영을 못 한 채 법인만 유지해야 했던 입장에서 몇 가지만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박선하: 저는 친환경 물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해요.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친환경 매점의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외부에서 먹던 음식과 맛도 다르고 가격도 더 비싸서, 처음엔 친환경 안 해도 되니 더 맛있고 더 싼 과자가 좋다는 학생 의견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취지에 어긋날 수는 없다 생각해서, 학생 이사들이 좀 힘들더라도 친구들을 설득해보자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좋은 식습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학생들에게 이로운지 인지할 수 있게 학급홍보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듣기 싫어하는 티가 팍 날 정도로 귀찮아했는데, 굴하지 않고 계속 홍보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언론사에서 저희가 국내 최초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주변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부심



김현미 (서울독산고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학부모)

을 느끼면서 애교심을 느끼고 친환경 매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몇몇 친구들은 와서 이제 밖에서 사 먹는 과자는 짜고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 해요. 이런 말을 들을수록 활동하는 저희는 더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친구들이 좀 더 다양한 친환경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알아보면 가격과 크기가 부담스러워서 이것이 보완되면 학생들도 많이 좋아하고 학교협동조합도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연수: 학교협동조합이 수익을 남기려는 것은 아니어서 최소 마진으로 판매한다 해도 친환경 과자 가격이 아이들 경제사정에서는 많이 부담스럽죠. 처음에 우리에게 학교협동조합을 제안할 때 공동의 물류 체계로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성남시에서 생협 등과 친환경식품 물류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진행 과정이 쉽진 않나 봅니다. 솔직히 각 생협에서도 고려해보지 않은 사항이 많아요. 사실 영림중, 복정고처럼 학교에서 먼저 학교협동조합이 만들어지니 그에 대응해서 생협도 고민을 시작했을 텐데, 조합원 외 이용의 문제 등 여러 입장들이 사전에 고려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작년에 인건비 지원으로 인큐베이터가 몸으로 뛰어 생협 물건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감사했던 것은 성남 한살림이 빵을 학교매점용으로 작은 크기로 공급받을 수 있게 협조해주셨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학교협동조합 수가 많아지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맛에 대해서는 저는 아이들이 항상 불만인 줄 알았는데 학생 이사님 얘기 듣고 보니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수익이 나와 운영이 가능한데 친환경 물품만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물품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마진이 큰 일반 식품을 품목별로 선택해보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이사들은 ‘해보지도 않고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협의 친환경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데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반 업체가 아닌 생협 물품을 이용해서 냉동고 지원을 못 받는다는지,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사회: 조합원인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 간의 차이는 어떻게 두시나요? 가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강연수: 만드는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직 조합원에 대한 마땅한 보상체계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다만 교육활동, 봉사활동이 일일 수도 있으나 조합원만 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김현미: 우리는 매점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교육을 하더라도 돈은 필요합니다. 처음에 모은 출자금을 매점을 하지 않았으니 헐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후원을 조금씩이라도 해주곤 합니다. 그 후원금으로 등기하고 교육 간식비로 쓰는데, 정말 사업 운영 없이 교육하면서 법인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비정기적인 교육으로 협동조합 법인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역 생협에 식생활 교육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면서 정관에 지정 기부금 단체 정관을 넣었어요.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정 기부 증명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후원금으로 법인을 유지하는데, 교육 등 꼭 해야 일들도 자금의 문제로 크게 확대할 수 없었습니다. 매점에서 수익이 팡팡 나진 않겠지만 매점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협동조합은 사업과 조직 두 가지 성격이 결합되어 고민의 지점도, 나누어야 할 경험도 참 다채롭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학교협동조합이 매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학교협동조합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각 주체의 입장에서 한 분씩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김민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고서 물려주거나 학교 환경 개

선, 예를 들면 학교 앞 도로가 위험해서 안전하게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일 등이요. 민원이기도 한데, 지금은 협동조합이 무엇인가 배우기 시작한 단계여서 학생들이 힘을 모으면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을 듣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책 없이 자기 꿈이 뭔지 모르고 잠만 자는 학생이 많아요. 우리 학교협동조합이 사업을 시작해서 커지면 직업인들을 섭외하고 학교와 연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를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이 학생들에게 이런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독산고도 공립학교여서 학교장, 교사의 전근 문제로 고민입니다. 그래서 복정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중심의 협동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후배들에게 이어가는 방식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선생님, 학부모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요.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이 성년이 되어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선생님, 학부모들이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의 조합원이나 이사로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조합원으로 혹은 하나의 진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학교협동조합 활동이 이후 대학교나 사회에서 사회경제인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혹은 더 크게 학교협동조합이 학교사회에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점 외에 5명 이상이 모여 학생들이 스스로의 재능으로 협동조합을 해보려 하는 것이 교육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학교협동조합이 큰돈은 아니어도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결국 학교협동조합이 미래의 지역사회 경제인들을 양성시키는 단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성경: 저는 지금의 필요에 집중해서 일단 마이너스 나지 않고 매점 운영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매점이 필요한데, 없었던 학교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잘 유지되면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아이들

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연히 이 자리에서 생각했던 건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외국처럼 아이들에게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만족 너머 아이들의 흥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게 좋은 먹을거리가 제공되길 바라는 건 물론이고요.

강연수: 아직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를 여러 가지로 해보는 것보다 매점 하나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담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 필요는 매점이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주체로 나설 수 있고 수익을 우리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운영방식이면 보다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옷이 너무 크다는 생각은 했어요. 기본적으로 요만큼을 원했는데 기본서식이 이만큼을 채워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진행하되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협동조합이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한다면 그건 각 구성원의 필요이고,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이 학교에서는 학교협동조합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세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은 없어요. 담임을 맡는 경우도 반 학생과 학부모만을 만날 뿐,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는데 학교협동조합에서 처음 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의 장 너머 필요를 같이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학교’ +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니 지역사회와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마을이나 지역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시민단체 혹은 기업들과 연계해서 만나는 작업이 재밌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자기 필요의 수준에 따라서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훌륭한 교육의 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실제 필요에 의한 것이니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되겠지요.

박선하: 저는 우선 학생회 활동을 한 학생 이사 입장에서 학생들이 좀 더 학교생활에 잘 정착하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갖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 학생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이것을 일정 부분 협동조합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매점의 친환경 제품 제공은 시작이고 이 수익이나 활동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생각해요. 협동조합이 좀 더 커지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애교심,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제 주위 친구들의 경우도 학교협동조합 1년의 경험으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졌고, 무엇보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 안에서 학생 스스로 해결해보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어요.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학교협동조합의 경험은 학생들이 학교 너머 사회 내에서 참여의식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도전해서 이뤄냈을 때 그 과정을 보고 좀 더 자부심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조금은 힘들지만 오늘 나온 얘기들이 보완되어서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회: 학교협동조합의 방향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바람은 간절하기가 마찬가지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구성원의 필요, 현재는 매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학생 복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로의 확대가 가능하겠지요. 학교협동조합에 거는 기대, 그것에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 오늘과 같은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무척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협동조합 현장의 얘기를 두 시간 안에 담아내기는 그 실행과 고민이 무척 넓고 깊습니다. 못다 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다시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학교협동조합 현장의 여러분들의 애정과 노력, 그리고 그 경험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icoop](#)



- 이슈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소비자 인증시대
- ‘유기농의 진실’이 놓친 진실들
- 지하철 9호선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소비자 인증시대

박인자(아이쿱인증센터 회장)

올해 상반기 한국의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들은 KBS 파노라마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¹이라는 프로그램 방영의 여파로 생기게 될 국민적 불신과 파장에 대해 노심초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방송 전, 촬영 과정을 접하면서 제작진들의 생각과 의도가 한국 농업의 현실은 무시한 채 지금의 한계와 문제점에만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국 방송된 내용은 끝이 없는 부실 인증기관의 난립과 유기농업이 불가능하다는 생산자들의 자백을 받아내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었다. 방송이 국민의 인식을 좌우하는 중요한 매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방송으로 잘못 알려진 일을 드러내어 사실을 바로 잡기도 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언론의 사명감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유기농의 진실이라는 방송이 한국의 유기농업에 대해 좀 더 다각적인 접근과 발전 가능성을 위해 만들어지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문제의식의 대안으로 제시된 도시에서 직접 농사를 배우고, 농작물을 키워 먹는 것 또한 삶의 하나의 방식이지, 토양오염에서 안전한 유기농은 없다는 방송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30여 년 전부터 환경농업을 위해 땀 흘린 농민들과 친환경농업을 지지하는 소비자들은 다시 한 번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과 국민을 우롱하는 우리 사회 부패의 단면을 보며 허탈감에 빠진 시간이었다.

¹ 2014년 7월 31일, 8월 7일에 방송된 KBS파노라마.

1. 유기농업을 다시 생각한다

생협이 만들어진 계기는 환경농업을 살리려는 농민들의 노력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아 나선 자각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부터였다. 먹을거리가 식품첨가물과 색소,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멜라민 사고와 광우병 소고기 수입까지,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는 환경이 되었다. 이런 소비자들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생협이 외국의 협동조합과는 달리 식품안전을 우선시하는 다른 역사를 가지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먹을거리 사고가 쌓여 갈수록 소비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인들 안전하겠느냐는 불신감이 커지는 실정이고, 생협 조합원들은 현실과 무관하게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며 위안을 삼기도 한다.

2005년 식약청의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표시제도에 대해 아예 어떤 것인지 모르거나(20.2%), 표시 모양은 알지만 의미는 잘 모르는 경우가 58.4%(952명)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마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7%에 불과했다.²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소비자들이 '유기농 =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허황된 인식을 갖게 하면서 유기농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식품만이 아니라 생활 곳곳의 상품으로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세태를 만들기도 한다.

유기농이란 무엇일까? 이번 KBS 파노라마 방송이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올여름 아이쿱에서는 1,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110회의 모임을 열면서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현실과 아이쿱의 인증 관리 체계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기농업이란 자연의 이치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농약이나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벌레가 생기면 천적이 나타나고, 병을 스스로 이겨 내는 건강한

농사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이 서로를 살게 하면서 농업이 자연스럽게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불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지속해오던 농업의 모습이다.

2008년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전 세계 유기농업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의 의미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유기농업은 무엇인가'라는 의제를 상정해 그 결과를 모아낸 것이다. '유기농업은 토양과 생태계, 사람들의 건강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생산 시스템이다. 그것은 기술적인 외부 투입보다는 지역 조건에 맞는 생태 순환과 생물 다양성에 적응하고 의존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간의 공평한 관계를 만들고, 지구 건강의 지속성을 위해 협력한다.' 유기농의 내용에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거나 완벽한 무공해라는 개념은 어디에도 없었다. 농약과 오염 차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인 농업이 다른 생물들과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유기농은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이라는 등식을 또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유기농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면에서 좋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좋은 것인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고 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2009년, 아이쿱생협연구소에서 조합원 활동가 535명(100%)이 참여한 의식조사가 있었다. 생협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가족에게 제공하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라는 대답이 33.0%, 농업 살리기 운동 17.5%, 생활 실천 시민운동 16.6%로 높게 나왔다. 생협의 활동가들도 대부분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가입한 일반 조합원들과 다르지 않았고 그 명백한 요구가 힘이 되어 지금까지 생협의 성장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조합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생협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²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농산물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김성숙(2007년).

2. 한국농업의 현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24일에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왜 농업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지, 왜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자의 귀재들이 '나는 모든 것을 농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농업을 우리 경제 수출의 효자 산업으로 적극 키워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방향의 하나로 농업 육성을 손꼽았다고 한다.³ 그리고 8월 19일,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우리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농업이 새로운 미래산업, 수출산업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⁴ 농업문제를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위 뉴스를 접하며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를 겪으며 대부분의 종자 회사가 다국적기업으로 넘어갔고, 이미 세계 제2위의 GMO 종자, 농약, 농산 식품 수입국이 되었다. WTO출범 이후 20년 간 유지해오던 관세화 유예조치가 관세화 수입으로 전환 준비를 하고 있고,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23%대로 떨어져 세계 최고의 식량 부족국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농업의 미래 산업화' 추진 방안으로 제시한 관세화 대응, 농식품 수출 확대, 귀촌 등을 농업의 희망이라고 보기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가 아닌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친환경 농업의 여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전체 농산물의 1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 외에 줄어드는 농민에 대한 대책이나 부실 인증 관리, 친환경 종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정부의 목표와 실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친환경 인증 기준은 안전성 검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단순히 농약 사용 여부만을 기

3 2014년 7월 28일 농민신문 사설.

4 2014년 8월 19일 제14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막식에 보낸 축하 영상메시지.

준으로 삼는다면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의 토양과 비를 피해 실험실 속에서 재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인증기준을 국제 기준이라는 허구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되는 유기 가공식품에 별도의 확인과 검사 없이 수출국이 허가하는 인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른바 '동등성 원칙'이다. 어떻게 그냥 믿으란 말인가? 'KBS 파노라마 유기농의 진실'에서 논란이 되었던 토양 잔류 농약 문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토양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거의 없다. 그 기준과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미국과 네덜란드 정도에서는 최소 0.02ppm의 허용기준을 세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토양 잔류 농약 기준은 0.01ppm이다. 최소 2배 이상 강화되어 있는 조건이다. 힘 있는 나라들은 자신의 조건에 맞추어 친환경 유기농업의 기준을 결정하는데 한국은 스스로 자국의 농업을 죽이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친환경 농업 정책은 보조금을 주는 수준에 머물면서 책임지지 못하는 인증기관을 양산하고 친환경 농사에 필요한 모든 위험부담은 농가에서 감당하라고 한다. 제대로 된 유기농업 기술 보급과 유기농 자재 개발, 우수한 종자를 연구할 수 있는 육묘장 등 모든 것을 농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친환경 정책이 인증 기준은 높여가면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외면하는 상황이다 보니 농민들 스스로 유기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인지 의심을 버릴 수 없다.

3. 소비자 독자인증 시스템을 준비하다

아이쿱생협은 1997년부터 오늘날까지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해 왔다. 흔히 사람들은 친환경 농업이 자리 잡기도 전에 유기농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이 가짜 유기농이 범람하는 원인이라고도 말한다. 전국의 아이쿱생협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던 199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으

니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 안기에 한국의 친환경 생산 기반이 약한 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친환경 농가가 많아지면서 점검과 고발사고가 이어진 것도 2002년부터였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양적 확대 없이 친환경 농업이 천천히 기반을 다져가며 자리를 잡고, 확산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70년대부터 유기농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농민들이 있었지만 소비자들은 생협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아올 만큼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배경과 같다. 소비자들이 마음으로는 환경농업의 대의에 박수를 보내지만 유기농산물을 구입하기에는 그 가격의 문턱이 너무나 높았던 것이다. 가짜 유기농의 문제는 늘어난 소비자들의 요구 탓이 아니라 친환경 농업의 목표만 있을 뿐 농업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한국 농업 정책의 예견된 사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이쿱생협은 초기부터 생산지 사고를 겪으며 조합원이 바라는 안전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남다른 정책을 세워왔다.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농산물 인증과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조합원에게 사실을 공개하고 함께 대안을 찾는 것이다. 2004년 성공회대학교와 함께 '유통인증제 도입 및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그동안 일어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유통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관리 장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출발한 '아이쿱인증센터'는 어렵게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가 같이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증의 다른 의미는 '보증'이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증하는 것이다. 1997년 환경농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보증(인증)'은 정부에서만 했다. 보증이 잘못되면 그 보증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인증기관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보증'을 한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인증제도이다. 아이쿱생협 소비자 인증제도⁵의 차별성은 그 보증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이 과일은 제대로 유기농업으로 농

5 소비자독자인증의 업무는 2008년(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라는 농산물관질관리원 지정 제40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하고 있다. 신뢰와 정직, 객관적인 인증업무를 실시한 결과, 2010년 경기도 거점인증기관에 이어 2011년 우수인증기관, 2012년 최우수인증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다.

사지는 배입니다'라고 보증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 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책임져주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쿱인증센터의 운영비는 전국의 조합원 회비로 마련한다.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필요 없는 안정적이고 독립된 재정이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민 스스로 인증하거나 실적과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야하는 민간인증기관과는 다른 운영 방법이다. 아이쿱은 소비자 독자인증 체계를 준비하며 지난 8년 동안 160억 이상의 조합원 회비를 투입했고, 전국의 생산지⁶에서 인증센터 직원들이 생산 관리와 인증 절차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 독자인증의 내용은 인증기관의 역할을 안전성 검사만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유기농업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순환 체계, 외부 자재 투입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농법, 생산지의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그리고 농사 방법을 기록하고 축적해 가는 신뢰성을 함께 높여가는 것이 진정한 유기농업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을 소비자 독자인증 고유 평가⁷에 담고 있다.

KBS 파노라마 '유기농의 진실' 방송에 소개되었던 김근호 생산자는 천안 지역에서 유기 배를 생산하는 아이쿱생협 농부이다. 좋은 토양을 만드는데 풀과 지렁이 등 다양한 생물이 비료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 과수원은 식물 균락을 이루고 있다. 식생물조사를 하며 과수원의 생태계를 관찰하는 것도 다른 농부들의 일상과는 큰 차이이다. 이번 여름 논 생태조사 활동가들과의 공동 조사에서 발견된 식물종은 동물 33종, 식물 62종으로 주요 식물은 쇠무릎, 까마중, 개비름이었고, 특정 식물은 은방울꽃, 하늘타리였다.⁸

6 2013년 기준 2,673 농가.

7 소비자 독자인증 기준은 안전성, 순환성,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신뢰성 5가지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AAA, AA, A로 구분하고 있다.

8 8월 19일 농업과 환경팀 생태 조사단 조사 내용(김현숙단장 / 대구행복아이쿱생협).



8월 19일 아이쿱활동연합회 생태조사단 조합원들과 배 발 생태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메카로 알려진 흥성지역에서 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정산 생산자도 환경농업의 선두 주자이자 생물 다양성을 살리는 논 농사 연구자이다. 2007년부터 논에 투입되던 오리와 우렁이 양을 줄이고 논독을 높여 물 조절로 잡초를 없애고 모를 적게 심어 병해충을 이기는 방법을 정착시키고 있다. 이 재배 방식은 전통농업의 과학성을 재구성한 것으로 지금은 쌀농사의 모델이 되고 있고, 흥성의 '논생물 쌀'과 '자연드림 식혜'는 중요한 소비자 독자인증 상품이다.

4. 윤리적 생산을 만드는 윤리적 소비자

현재 한국의 농업 정책에 소비자는 없다. 정부는 또다시 로컬푸드를 지원하고 식품 수출에 막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20년 전 농업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국민들은 개방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다국적 장보기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농업 인구는 300만 정도로 그나마 30년 후에는 50만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젊은 세대의 유입이 단절된 지 오래되었고,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 주도형 환경농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후방 지원을 하고 소비자가 유기농업의 중심으로 나서는 것이 맞다. 농업이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농업의 한 축이 되어 생산자와 함께하는 정책이라야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소비자가 농업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

고, '안전한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알리는 '정보공개'와 '책임'을 지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소비자가 농업의 현실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이해가 농민의 이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협 조합원들의 장보기는 윤리적 쇼핑이 세상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



7월 31일 전주 완주군에서 'iCOOP생산자회 자원순환농업 결의 선포식'과 '축분퇴비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달 전주 완주군에서 'iCOOP생산자회 자원순환농업 결의와 선포식'이 있었다. 국가가 지정하는 유기 자재가 땅을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아이쿱 생산자가 앞장서서 땅을 살리는 자원순환농업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이미 선도적으로 자연퇴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아이쿱 생산자들이 있었으니 완주의 무항생제 축산 농가와 부안의 유기 쌀 생산자들의 협동은 일사천리로 결과를 만들었다. 전국의 소비자 조합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선포식에 지지를 보냈으며 산성화된 한국의 토양을 살리는 실천에 협력할 것이다.

아이쿱생협은 2005년 윤리적 소비자들이 우리 농업의 희망을 만들자는 호소를 하며 소비자일만인 대회를 열었다. 땅끝 해남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전국의 조합원들이 함께 걸으며 ‘우리 밀은 살리고 우리 쌀은 지키자’는 구호를 외쳤다. 1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친환경 농업을 지지하는 소비자들은 더 많아졌고 그만큼 친환경 농가도 늘어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다시 한 번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민들의 파트너이자 희망이 되자는 선언을 위해 2015년 10만인 소비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icoop](#)

‘유기농의 진실’이 농민 진실들

김홍범(㈜쿵스투어 광주전남 이사)

KBS1TV 파노라마에서 방영된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 2부작을 보았다. 친환경 사업 분야에서 적지 않은 기간을 일해 온 나로서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실태를 보고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물질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왜곡된 사회 풍조와 부조리에 답답한 가슴을 가눌 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KBS 방송의 보도가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오해할 소지가 많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방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KBS가 보여준 내용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강한 반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애매하게 끝을 맺고 있다. 이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상식적인 내용을 재확인하고, 제기된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았으면 한다.

KBS에서 이번 방송 보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국내의 유기농은 진짜 유기농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연 국내 유기농업은 진짜 유기농이 아닐까? 그럼 관행농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일까? 그렇다면 외국의 유기농은 모두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의 유기농업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야 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았으면 한다.

우선 방송 보도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인증농가의 현황을 보여주면서 인증농가들의 인증에 대한 인식 부재와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해남의 사기 사건을 근거로 인증업체와 자재업체, 검사업체 간의 리베이트와 부실 점검을 다루면서 인증의 불신과 허구를 강조했다. 거기에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허술함과 관행, 부실점검과 농약의 가짓수와 검사 결과까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은 모두 가짜이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2부의 끝 부분에서 보여준 3개 농가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면 국내 인증품은 모두 가짜라는 확신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덕분에 KBS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렸지만, 아무리 인증농가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분명 잘하고 있는 농가도 있는데 방송 분량의 현격한 차이가 소비자로서 하여금 인증농가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만들었다. 2부의 끝 부분에 방영된 3개 농가의 내용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분야에 대해 상당한 이해가 없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국내에는 유기농업은 없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부터 정리하기로 한다.

농약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KBS는 농약 없이는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방송하고 있다. 실제 그럴까? 대부분의 농가가 인증받은 필지에 농약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농약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인증받은 곳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그런데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약을 사용한 역사가 불과 60여 년에 불과하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전국이 모두 유기농이었다. 반만년의 역사 중에 겨우 60여 년만이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한 농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를 관행농업이라

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왜 농민들은 농약 없이는 농사가 안된다고 주장했을까?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유기농이 성공하려면 먼저 생태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벌레들은 모두 초식충이다. 초식충은 생태계의 하위단위를 이루고 있고, 그만큼 번식력이 좋다. 더구나 밀식되어 있는 농작물이 화학비료에 의해 약해져 있다면 병충해가 순식간에 번질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농약이 있기 전까지는 초식충이 퍼지면 그를 잡아먹는 육식충이 같이 늘어나면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유지된다. 유기농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농약은 1차 초식충보다 초식충을 잡아먹는 육식충에 더 큰 타격을 준다. 뿌려지는 농약의 피해 뿐 아니라 초식충에게 농축된 농약까지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북극에서는 한 번도 뿌려 본 적이 없는 DDT의 체내 잔류량이 북극곰의 몸에 사람보다 더 높은 수치로 농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이다. 이는 평균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건강한 땅에는 유익한 균들이 많아 유해균들이 쉽게 퍼지지 못하지만 화학비료가 많이 뿌려진 땅은 유익균들이 서식하지 못하게 되고, 유해균이 판을 벌리게 된다. 땅이 죽은 곳에서는 유해균들이 번식하기가 훨씬 쉽다.

관행농법에 의지해서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해 지었던 땅은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즉 초식충의 번식을 막아줄 육식충이 충분해지고, 유해균의 확장에 맞설 유익균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 기간이 보통 3~4년 이상은 족히 걸리는 것 같다.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다가 유기농업으로 전환한 분들은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확량 감소와 병충해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정을 이겨낸 분들이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한 분들은 몇 년간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져진 농약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반화시켜 버린 오류에 빠져있다고 본다.

유기 인증 땅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일반농산물일까?

KBS는 무농약이나 유기인증 땅에서 농약이 나오는 것이 마치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양 보도하고 있다.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땅에서 농약 검출이 안 되는 것일까? 유기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농약에는 DDT와 같은 반감기(半減期)가 있는 농약도 있다. 반감기의 사전적 의미는 "방사선 원소나 소립자 따위의 질량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할 때, 그 질량이 최초의 반(半)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감기가 있는 물질은 왜 전감기(全減期)를 쓰지 않고 반감기를 사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전감기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감기가 있는 물질은 10kg이 5kg으로 감소하는 시간이나 10g이 5g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은이나 납 등은 반감기가 무한대여서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는다. 반감기가 있는 농약은 몇 년 동안 농약을 하지 않아도 땅에 잔류하게 된다.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친환경인증 땅이 많지 않다 보니 주변에 관행농법으로 농사짓는 땅들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옆의 밭에서 뿌린 농약이 바람에 날려 넘어오는 경우(비산)도 있고,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는 과정에서 농약에 오염되는 경우(월류)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법에도 원칙적으로 작물체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작물체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나 농가가 토양에 농약을 직접 사용한 경우 등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토양을 채취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토양의 잔류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두고 있지 않다. 토양에서 설사 농약 성분이 잔류하더라도 그 수치가 미미하면 작물에서 검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토양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미국과 네덜란드 정도로 그 허용기준이 최저 0.02ppm에서 최고 2,000ppm이고, 네덜란드는 최저 0.02ppm에서 최고 10ppm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환경이 더욱 열악한 국내의 토양 잔류 농약

기준은 0.01ppm이다. 1ppm은 (용질의 무게/용액의 무게가) 1/1,000,000mg 수준이다. 0.01ppm은 1/1억 수준의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토양에 농약이 잔류되었기에 유기농이 아니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 관행농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일까?

이는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성인병이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고, 아토피며, 기관지천식, 중이염, 비염 등이 급증하고, 불임률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나, 테오 콜본의 『도둑맞은 미래』는 이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환경호르몬 67종 중에 40여 종이 농약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주장 할 수 있을까?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이 농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적은 노력으로 큰 수확을 주는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한 농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수많은 미생물과 곤충의 말살 과정은 그 곤충을 먹고 사는 동물의 멸종을 가져오고, 결국 종 다양성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산업의 발달로 오염되어 가는 공기와 물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그동안 농업이 해왔다. 그 농업의 근본은 땅에 있다. 그런데 그 땅이 오염되고, 죽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다. 이는 결국 우리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국내 유기농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고민하는 어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내 자녀를 생각하고 후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여력이 닿는 한 친환경 유기농업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도 KBS 방송은 그런 친환경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마치 국내 유기농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수입 유기농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나만의 과민 반응일까?

그럼 외국의 유기농산물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국내 유기농이 믿을 수 없다면 결국 해외 유기농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럼 해외 유기농산물은 정말 안전할까? 이코노미 인사이트 8월호에는 '가짜 유기농 범람, 유럽도 예외 아니다'라는 기사가 있다. 마피아와 업자, 관료가 결탁하여 2007~2014년까지 7년여 동안 동유럽과 인도에서 수입한 원료를 유기 농산품이라고 속여 EU에 밀반입해 왔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최근 농림부는 외국 유기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별도의 확인과 검사 없이 그대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내의 법적 인증 절차를 밟게 했는데, 외국과의 유기 식품 인증기준 동등성을 인정하여 국내의 법적 인증절차를 밟지 않고도 국내 인증 마크를 사용하게 해준다는 소위 "동등성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재업자들이 국내 인증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작당을 했다면, 수입업자는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아니 확인과 점검이 더 어렵고, 거짓을 밝히는 것이 더 까다로운 외국 유기농을 속이기가 국내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국내 유기농업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얼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의도가 있는 사람은 그를 통해 무언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국내 유기농업이 몰락해 갈 때 누구에게 더 이익이 돌아가고 누가 좋아할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증기관이 부실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인증기관이 자재업체와 결탁하여 허위 인증을 내어주고,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기저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수많은 규정에서 하나만 벗어나도 인증을 취소해 버리는 인증 기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은 보증과 함께 관리와 감독업무를 해야 한다. 당연히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 농약의 살포 여부는 현장에 가면 가장 쉽게 파악이 된다. 제초제는 주로 고독성 농약이다. 그래서 저농약 인증도 허용기준량의 1/2만큼 농약 사용을 인정하지만 제초제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다. 제초제를 한 토양에는 풀이 누렇게 죽어있어서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토양의 농약 검출 시험을 통한 분석결과보다도 쉽게 파악이 된다. 인증 필지 주변만 돌아봐도 농약병이 굴러다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농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가 어렵지 않다. 그만큼 현장 점검과 방문이 인증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농가의 창고나 약장을 뒤져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농약 사용의 실태를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농가를 점검하려고 하면 인건비며, 교통비며, 식대 등등 많은 비용이 든다. 직접 필지를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려면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농가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와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의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어 있다. 관리와 감독의 역할을 돈을 벌기 위한 사업자에게 맡기고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은 부정 부패해서 먹고 살라는 이야기와 사실 다르지 않다. 아이쿱의 인증기관이 건강한 인증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20만 조합원의 힘이 그 근원이다.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에서 각출하여 직원들이 부패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지속적인 방문과 점검은 농민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독자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농약의 검사 항목 수를 늘리는 것이 신뢰를 구축하는 대안일까?

KBS는 실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농약이 400여 가지가 넘는데 현재 인증 관련 검사 항목은 245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실제 410여 가지 농약 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 공개했다. 친환경 전문매장 5곳에서 무농약 21점과 유기농 55점을 수거해 서울대 농화학 및 독성학 실험실에서 ppb 단위까지 검사했다고 한다. 총 81점 중 30여 점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고, 그중에서 7개가 친환경인증기준을 위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작물의 농약잔류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농약검사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만 전 세계에서 생산된 농약의 가짓수는 8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400여 가지를 검사하면 누군가는 또다시 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농약을 들여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800가지를 검사하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검사하면 그 800여 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농약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오래지 않아 업자들은 그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검사 항목 수를 늘리면 검사비용이 꾸준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올라간 검사비용은 결국 물품 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비싸진 친환경농산물은 더욱 소비자로부터 멀어지기 쉬울 것이고, 소비 되지 않는다면 친환경농업은 결코 활성화될 수 없다.

분명 농약 검사의 항목 수를 적절하게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검사 항목 수를 늘리는 것이 곧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친환경인증을 받고 성실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농가가 농약을 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민이 번듯하게 먹고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정책이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농사는 예전처럼 자신이 먹기 위해 짓는 농사가 아니다. 농사를 짓는 목적이 내다 팔기 위해 짓는 농사다. 그 농사의 결과물로 농민은 먹고

살아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농산물 가격을 더 받아야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많다.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사회든 조직이든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나라와 조직이 발전할수록 규정이나 법을 만들고, 제재를 가하고, 포상을 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 농약을 하는 것이 더 손해가 되고, 농약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것은 농약을 뿌리는 것이 더 손해인 구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적정한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농민들은 쉽게 농약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농약을 치고도 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더욱 쉽게 농약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 물품이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둔갑하여 팔리게 된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이고, 결국 친환경농산물의 구매가 줄면서 친환경농업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잔류 농약 검사만을 강화해서 견제와 감시만을 강화한다면 친환경농업의 지속성은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갈아 엮는 횡수가 늘어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생산자도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급이 사라지면서 친환경농업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적정 수준의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좋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지만 소비가 되지 않아 결국 포기한 농가들을 수 없이 보아왔다. 따라서 한 측면에서 잔류 농약 검사 등 견제와 감독을 통해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불이익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친환경농업을 하는 생산자가 적정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손실을 봐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다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잔류 농약의 검사 항목을 적절히 조절해가되, 다른 한편의 지원책을 반드시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유기농업은 자연 순환성, 지속가능성, 생물의 다양성 등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농약이 만들어지기 전의 농업을 보자. 벼를 수확하면 쌀은 사람이 먹고, 왕겨와 벼짚은 가축이 먹는다. 그리고 인분과 축분을 발효시켜 논밭에 뿌리면 그것을 양분으로 하여 벼가 자란다. 유기농업이 지속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순환성이다. 순환하지 않고서 지속될 수 있는 게 있을까?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지하는 농업에서는 벼를 수확하여 쌀을 사람이 먹지만 인분은 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가축들은 사료를 먹으면서 더 이상 왕겨와 벼짚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료는 국내 자급률이 5% 정도에 불과하다. 외국에서 사오는 농산물을 원료로 사료를 만든다. 인분과 축분은 논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대신 수천 억의 재원을 들여 정화해야 한다. 지금은 해양 투기가 금지되었지만 상당기간 축분을 처리하지 못해 바다에 그냥 내다 버렸다. 땅의 영양분이 고갈되니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작물이 자라지 않으니 화학비료를 투여한다. 이 화학비료는 땅을 오염시켜 미생물이 자랄 수 없게 한다. 미생물이 자라지 않으니 더욱 화학비료에 의지하고, 땅은 더욱 죽어간다. 순환되지 않으면 지구 위의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다. 종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태계는 파괴된다.

우리나라 옛말에 '상극'이란 말이 있다. 보통 상극이라 하면 하늘 아래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여기는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정된 땅에 사슴과 사자가 살고 있다고 하자. 사슴의 입장에서는 사자가 상극이다. 사자만 없으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자가 없으면 사슴은 그 포식자가 없어 급격하게 개체 수가 늘어난다. 그렇게 늘어난 사슴은 결국 한정된 땅에서 생산된 부족한 먹이로 인해 종 자체가 멸종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이처럼 상극이란 서로 긴장된 관계에서 서로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관계를 말한다. 종 다양성이 그렇고, 생태계가 살아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 농약과 화학비료는 결코 지속가능한 농업이 아니다. 유기농업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농업방식이다. 따라서 유기농을 단순히 안전한 먹을거리로 해석하고, 농약이 없으면 유기농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강은 먹을거리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 등 환경이 함께 살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동식물과 미생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농약은 이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유기농산물을 수입해 먹는 것보다 설사 토양에 미미한 잔류 농약이 검출된다고 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국내의 유기농업을 활성화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농업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농작물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은 농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한편에서는 기다려주어야 한다. 또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농부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농업이 아니다. 텃밭을 가꾸는 정도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혼자서도 농사짓고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이미 인류의 문명은 모두가 자기 텃밭을 가꾸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예전처럼 90%의 인류가 농업으로 먹고사는 세계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텃밭을 가꾸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결국 소수의 농민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그 농업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생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산한 농산물은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 그래야 그 소득으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든, 병충해 피해든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속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적 지원과 환경이 있지 않으면 언제 농사를 그만두게 될 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소비자는 땅이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 또 농부가 먹고살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소비자 자신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은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꾸 법의 잣대와 농약 검출의 숫자로 유기농을 평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농업은 국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농업 자체가 갖고 있는 비 교역가치가 그것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살기 좋은 환경권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런 유기농을 법의 잣대로 재어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농약의 검출 여부만으로 친환경농업을 궁지로 몰아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기업, 어느 조직을 봐도 문제없는 조직은 없다.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이나 모범적이고, 롤모델이 될 만한 조직이라 해도 문제 없는 조직은 없다. 다만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드러내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민도 인증기관도 정부기관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관행농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죽을 인생 아무렇게나 살다가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결코 농가의 잘못을 묵인하고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증기관이나 정부기관의 문제를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드러내고 도려내고 고쳐내야 한다. 다만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를 넘어가는 친환경유기농업을 믿을 수 없다거나 불안하다는

이유로 다시 관행농으로 돌아가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지해 가자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일 수 없다는 것이다.

100% 완벽한 무공해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땅과 물,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환경에서 100% 안전한 농산물이란 존재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미 외국도 마찬가지다. 다소 부족하고 아쉬움은 있지만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친환경농업이 되어야 순환도 지속성도 보장될 수 있다. 당장 농약의 검출 여부보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작년보다 더 나아진 땅, 올해보다 더 나아진 내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실제 농약과 화학비료로 오염된 땅과 물, 공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icoop

지하철 9호선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김기태((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끝없는 상상이 혁신을 이끈다

"협동조합은 상상력이다"라는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되었다. 필요가 열망으로 발전되는 과정의 가운데에는 반드시 협동조합의 선구자 중의 한 명이 상상력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그 한 점의 불꽃이 점차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상상력을 구체화시켜 실제 실행 가능한 사업체계를 짤 때, 협동조합은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협동조합의 역사는 태초부터 세계 이성으로 존재하던 협동조합의 원칙이 발현된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 분투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혁신적 활동 가운데 성공했던 경험과 성공요인을 일반화시켜 온 역사이다. 협동조합운동은 하늘과 책에서 빛어낸 것이 아니라 땅과 실천으로 빛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상상력을 민영화¹를 둘러싼 논란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공기업을 몇몇 대자본가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 혹은 대기업에 넘기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민영화가 아니라 협동조합 방식의 민영화를 상상하면서 대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2012년 4월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갑자기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부터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이 대중적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1년 반 정도의 서울시와 9호선 투자자 그룹과의 협의 결과, 새로운 투자자그룹으

¹ 필자는 민영화를 사영화로 고쳐 불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독자의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민영화란 용어를 여기서는 사용한다.

로 전환되었다. 9호선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상상해 보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높이는 방법을 탐구하는 측면에서 재미있고 유익하지 않을까 싶다.

민영화의 다른 이름 : 민간투자사업

민영화는 주로 현재의 공기업을 매각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장기투자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해야 할 공공재의 건립과 운용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민간 자본에서 조달하고 대신에 투자자에게 특혜에 가까운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들도 크게 보면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의 투자목적은 투입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투자된 물건에 대해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기부체납을 하든 그렇지 않든 이윤만 보장되면 투자하려 한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민간투자사업에 확약해주는 수익보장은 결국 지속적으로 세금에서 빠져나가거나 대다수 국민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국민의 부담을 더 늘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이라면, 민간투자사업은 자본이 거위를 사서 국가에 기부한 다음에 거위가 낳는 보통 알을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의 세금 등을 가지고 금값으로 사주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민간투자사업의 대부분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이다.

BTO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후, 사용료 징수 등 운영(Operate)을 통해 투자비를 회

수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며, BTL은 민간자금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후, 정부가 운영하면서 민간투자자에게는 정부가 시설임대료(Lease)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BTO의 대표적인 사례가 민자고속도로들과 지하철 9호선이며, BTL은 공립학교 신축에서 가장 많이 보인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BTO 투자 시 민간의 투자로만 재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재원을 지원하는데, 초기 시설을 건설할 때 이미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민간 투자 사업은 역시 많은 세금을 축내고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은 현재까지 66개 사업이 있는데, 2012년 말까지 정부 지원금은 33조 7,275억 원이다. 정부지원금 중 건설보조금이나 용지보상비 등은 사업 초기에 지급되며, 민자 운영 중 예상수익보다 사업수익이 낮으면 이를 보상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각 사업의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김관영 국회의원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66개 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에 의해 매년 정부가 지급한 비용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누계는 2조 6,806억 원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2007년도 1,139억 원에서 2012년에는 5,90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현재 실시협약이 완료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액은 전체 49조 7,768억 원이며, 2014년도에만 1조 3,739억 원의 예산이 민자사업에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설계할 때나, BTL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투자자의 과도한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계약되었다는 점이다. 공적 계약담당자들에게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의 빈틈을 투자자들이 치밀하게 파고들어 갔다는 이야기다.

당초 지하철 9호선의 계약에서는 실제 운영수입과는 상관없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영수입보다 실제 운영수입이 적게 들어오면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90%, 6년~10년까지는 80%, 11년~15년까지는 70%까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MRG)하도록 되어 있다. 왜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가 하면,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이 실질수익률 8.9%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9호선은 이런 불공정한 계약에 따라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총 838억 원을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원했다. 원래대로의 계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주식회사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이 세금을 물어 낼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지하철9호선주식회사가 수익을 남길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통보하자 당시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 온 국민이 이런 이상한 계약의 실상을 알게 된 것이다.

기존의 공기업을 투자자 소유회사에 넘겨주어서 기존 공적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향후에는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나 BTO 민간회사가 공적 자산의 일부를 사적으로 운용하면서 요금을 올리는 것이나 사실상 세금지원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비슷하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민영화의 또 다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지하철 9호선 문제는 이제 해결된 걸까?

2012년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전말이 널리 알려진 뒤 서울시와 민간투자자는 재협상에 들어갔다. 서울시의 강력한 재조정의 의지에 따라 이전의 문제점을 상당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재협상을 통해 실질사업수익률 8.9%를 경상 수익률 4.86%로 조정하였으며,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9호선을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사업수입이 적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런 재협상 결과 서울시의 9호선 지원금 예상액은 5조 1,745억 원에서 1조 9,816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진 당초 계약보다 3조 2천억 원이 절감된 것이다.

<표 1> 재구조화 전후 재정지원금 비교(향후 26년 기준)

재구조화 이전		재구조화 이후	
합계 (A + B)	5조 1,745억 원	합계 (A + BC)	1조 9,816억 원
MRG (A)	7,830억 원	투자원리금(A)	1조 2,122억 원
미인상보조금(B)	4조 3,915억 원	관리운영비(B)	4조 7,377억 원
		사업수입(C)	3조 9,683억 원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혁신모델'로 거듭나"

이런 재협상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들로 지하철9호선주식회사의 대주주가 교체되었는데, 다음 표와 같이 초기 9호선주식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던 맥쿼리와 건설출자자들이 탈퇴하였고, 대신에 보험회사들과 자산운용사가 신규로 참여하게 되었다.

<표 2> 재구조화 전후 투자자 변경현황

재구조화 이전	재구조화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출자자(7개사) 현대로템, 포스코ICT, 현대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삼표이엔씨, 울트라건설, 쌍용건설 • 재무투자자(6개사) 맥쿼리, 신한은행, 엘지화재해상보험, 신한생명, 중소기업은행, 동부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사(2개사)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재무투자자(11개사)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은행, 흥국생명, 삼성생명,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신한생명, LIG손해보험, 농협생명, 흥국화재

탈퇴(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투자자 : 맥쿼리, 중소기업은행, • 건설출자자 : 현대로템, 포스코ICT, 현대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삼표이엔씨, 울트라건설, 쌍용건설
신규(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투자자 : 흥국생명, 삼성생명, 한화손해보험, 농협생명, 흥국화재 • 자산운용사 :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유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투자자 : 신한은행, 신한생명,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자료 : 서울시의 위 보도자료에 내용 추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서울시는 1천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일종의 국민주 혹은 시민주를 펀드 방식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들 펀드는 작년(2013년) 11월 20일부터 판매되었는데, 세간의 우려와 달리 대부분 판매 당일 전체 펀드가 판매되어 자금 조달은 원활하게 이뤄졌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이전의 계약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졌고, 시민들의 참여도 활성화되었다. 다른 지자체나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자화자찬한 것처럼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1천억 규모의 시민펀드는 누가 운영하고 있는가? 이번에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주주로 참여한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맡고 있다. 이들은 맥쿼리·현대로템 컨소시엄의 지분을 매수할 때 부족한 자본을 일종의 회사채 형식으로 시민펀드를 통해 조달했다. 시민들의 자금은 이들 자산운용사가 9호선주식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게 밑돈을 대 주는데서 머무르고 있다. 여전히 9호선 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들의 통제권은 1원 만큼도 없다. 시민들의 자금으로 1천억 원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시민펀드는 맥쿼리 인프라가 철수하는 데 있어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 결과 기존의 문

제점을 나타나게 했던 문제점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함께 눈에서 사라져 버렸다.

여전히 9호선주식회사와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상호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9호선 운영의 원가가 올라가도 시민들은 요금인상에 반대할 것이며, 그 차이만큼 서울시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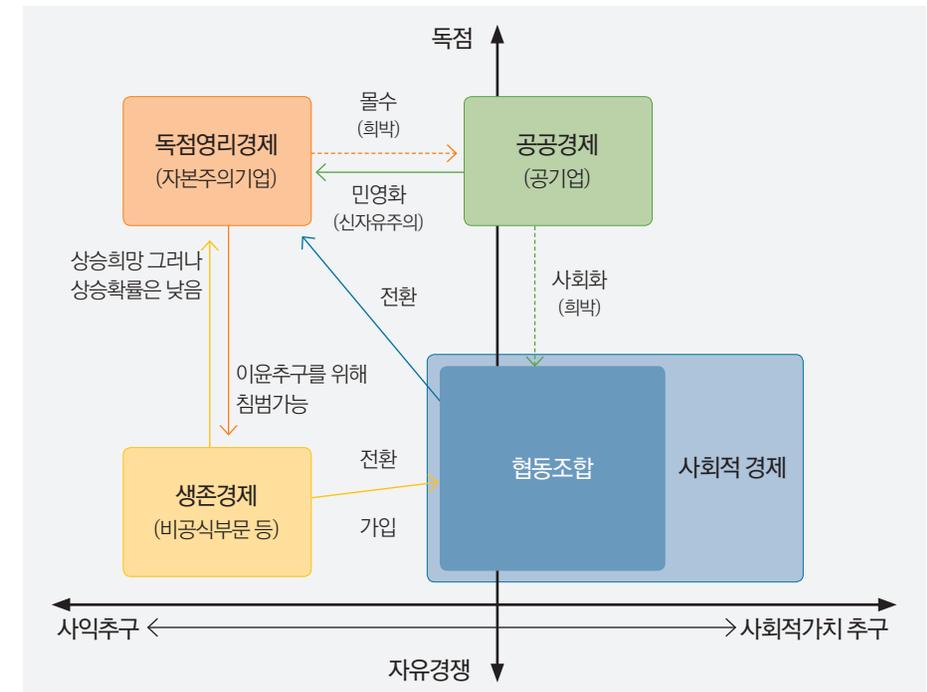
시민펀드를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범위는 최소 1백만 원 이상이며, 최대 2천만 원 이하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시민펀드 4.3%의 예상 수익률은 은행에 저금해 둔 사람에게는 높을지 몰라도 대출이 더 많은 서울시민에게는 투자할 수 없는 수치이다. 따라서 시민펀드는 이 정도 여유자금을 최소 4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민에게만 참여가 제한된 '제한적 시민펀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한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문제들은 5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초기 계약을 취소시키고 재계약하여 해결한 문제에 비하면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를 민감하게 느끼고 개선의 필요를 인식할 때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더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공기업과 소비자협동조합

공기업의 민영화 혹은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규모 자본이 관심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규모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과 공공사업체의 운영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 양자는 공히 독점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시장 구조 속에서 목적과 독점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각각의 경제 주체가 분포되어 있는가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경제와 독점영리경제는 해당 업종에서 독점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 반면 소상공인이나 협동조합 등은 일반적으로 자유경쟁 하에서 주로

운영된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은 공공경제를 매입할 경우 독점이윤을 추구하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판매하는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여 KT&G로 바꾸는 것은 대규모 자본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KTX를 민영화하거나,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는 모두 그 공기업이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를 보더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이다. 반면에 농촌에 있는 농산물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은 누구도 민영화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림> 시장내 경제주체들의 유형

하지만 실제 대다수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비생활에 밀접한 공기업의 경우 통제권을 제외하고는 소비자협동조합과 거의 흡사한 특징을 가진다. 담배를 제조 판매하거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

기업은 소비자협동조합과 유사성이 거의 없는 반면에 전기, 대중교통, 가스, 수도, 소매금융, 통신 등의 공기업은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실제로 공기업에 협동조합적 방식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없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농촌 실험에서 출발한 그레디아그리폴 지방은행과 지역은행의 지급능력과 유동성을 보장하며, 국가지원자금을 관리하던 공적 금융기관이었던 그레디아그리폴 중앙은행을 1988년 민영화하여 지역협동조합은행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식회사로 전환시켰다. 완벽한 의미의 공적 기관의 협동조합 전환은 아니었지만, 협동조합에게 소유권을 부여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민영화되었던 전기의 배전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협동조합이 배전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를 만들어서 개입하고 있다. 국영기업의 전환 후 경쟁시장으로 전환된 분야에 소비자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공기업을 민영화보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사회화시키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민영화보다 사회화가 더 좋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첫째, 공기업이 적정한 규모로 이용자 중심의 소비자협동조합으로 분할될 경우 이들은 공기업의 관료 조직적 문화에서 벗어나 효과성을 높이면서도 대규모 자본의 소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침해의 우려를 벗어날 수 있다.

둘째, 통신회사 및 시설 인프라 등 공동사용이 가능해지므로, 불필요한 경쟁이나 과시 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최신 인프라의 고수익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폐기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인프라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이용자들이 소유하고 통제할 경우 이들 사업체는 불필요한 과잉

상품을 만들지 않을 것이므로, 관련 국민 대다수의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

넷째, 원가정보가 공개되고,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요금 상승에 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기업 협동조합 전환의 저해요인과 몇 가지 해결방안

그토록 좋은 협동조합이 왜 희귀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양한데, 그중의 한 가지가 영리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제도적 제약을 들 수 있다. 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무수한 저해요인이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방도를 찾으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우선, 협동조합은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공기업을 인수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금융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실험을 비롯한 협동조합금융기관은 투자나 출자를 거의 할 수 없다. 또한 조합원이 돈을 맡길 경우에는 예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협동조합 출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신용협동조합이 초기 자금을 상당 부분 출자하고, 장기적으로 개별 이용자들이 이 자금을 대체해 나가는 방식을 설계한다면 자금조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기업을 인수해도 협동조합 관련 법규에 담겨있는 비조합원 이용금지 규정 때문에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다는 반박논리도 있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공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비조합원 이용금지 조항을 예외로 하도록 고시제도를 도입하면 쉽게 해결된다. 조합원에게는 할인혜택을 통해 유인할 수 있다.

조합원의 수가 많을 경우 실질적인 주인이 없어 직원들의 협동조합 강탈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료화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다. 대규모

모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대의원총회 참석 희망조합원들을 먼저 정하고, 이들 중 예비 대의원을 추천하여 뽑고, 적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카드를 사용한다. 이용액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되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배당을 출자 전환으로 처리하도록 약정을 맺는 방법을 도입하면 배당 관련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은 치밀하기보다 과감해야

공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사회화하자는 제안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이 글에서 제시한 저해요인만이 아니라 더 많은 쟁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빈틈이 여기 저기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협동조합의 상상력은 치밀하기보다 과감해야 한다. 민영화와 공기업의 관료화와 다른 협동조합적 사회화의 과감한 상상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icoop

아이쿱 생협만평

이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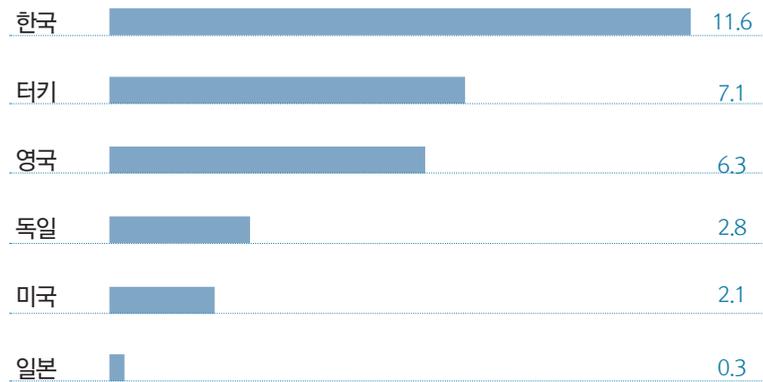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 그 원인과 처방은 무엇인가?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1.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

많은 분들이 지난 2010년 사상 유례 없는 배춧값 폭등 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한국인의 필수 먹을거리라고 할 수 있는 김치를 양배추로 담는다면 저소득층은 비싼 가격 때문에 아예 먹을 수조차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배추를 할인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까지 일어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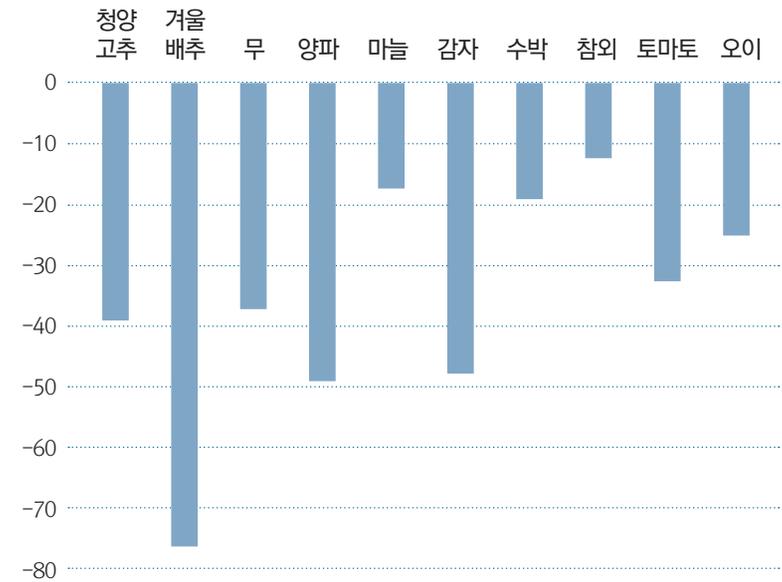
<그림 1> OECD 주요국 식품물가상승률(2011년 1월, 전년동월 대비, 단위 %, 자료: OECD)

2010년 애그플레이션(Agflation)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했을 때 식량자급률이 23%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식품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을 정도로 소비자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

¹ 농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agriculture'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inflation'이 합해진 말로, 농산물 상품의 가격이 올라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이르는 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주부들이 장 보러 가는 횟수를 줄일 정도로 서민 물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먹을거리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워져 '먹을거리 빈곤'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에는 가격폭락이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겨울부터 올 상반기까지 돼지 등 축산물 일부 품목과 작황이 부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그림 2> 2014 상반기 농산물 가격 하락률(전년 또는 평년대비)

지난 겨울 청양고추의 가격은 지난해 1월 대비 36%나 하락한 바 있다. 올봄 겨울 배추는 지난해 포기당 2,948원에서 792원으로 평년대비 74.3%나 하락하였고 무 가격은 평년대비 34.3%나 하락하였다. 양파는 6월 말 현재 지난해 837원(kg)에서 446원으로 46.7%나 하락하였다. 지난해 마늘은 전년대비 30% 이상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재고 과잉으로 평년(3,432원, 6월)에 비해 14.9%(2,920원, kg)나 하락하였다. 감자는 지난해에도 폭

락(1,344원, kg)한 데 이어 올해도 1,121원(4월)으로 평년대비 46%나 하락하였다. 올해는 과채류 역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인데 6월 하순 수박은 1만 200원(8kg)으로 평년대비 16.3% 하락하였고 참외는 2만 1,900원(10kg)으로 9.5% 하락하였으며, 토마토는 1만 200원(10kg)으로 30.4%, 오이는 1만 8,100원(100개)으로 22.4%나 하락하였다. 쌀값은 수확기를 앞둔 여름철에는 상승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 수확기 때보다도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몇 년째 농산물 가격폭락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올해의 경우는 과거보다 폭락의 양상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민들이 배추, 양파, 마늘밭을 갈아엎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렸다. 가격이 너무 떨어져 출하비용조차 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농산물 가격폭락과 폭등의 원인

농산물 가격폭락과 폭등의 주요 원인은 생산량의 증감, 수입농산물의 증가, 수급조절의 실패 등이 주로 거론되는데 특히 최근의 가격폭락 구조화 양상은 FTA 확대에 따른 저가 수입 농산물의 급증과 수급조절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각각의 원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가격이 상승한다. 생산량 증감의 원인으로는 재배면적의 증가, 생산기술의 향상, 기후조건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농산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기온이 상승하였고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밝힌 '2013년 가을배추·무·콩' 생산량 조사 결과 가을배추는

10년(2003~2012년) 내 평균 대비 11%, 가을무는 10년 내 평균과 비교해 10%가량 늘어났다. 콩 역시 10년 내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겨울에는 평년(2.1°C)보다 1.1°C 오른 3.2°C로 겨울배추나 무의 생산량이 평년대비 14.6%나 증가하였다. 지난겨울 청양고추 가격폭락 시에도 기온상승으로 인한 시설고추 출하 증대가 원인 중 하나였다.

또한 지난겨울 배추와 무, 양파의 재배면적은 평년 29.8천ha에서 31.7천ha로 6.4%나 증가하였다. 평년대비 면적 증가율은 겨울배추가 8%, 겨울무가 18%, 양파가 19.3%나 된다.

둘째, 농산물 가격폭락의 또 다른 원인은 수입농산물의 증가에 있다

2000년 이후 농산물의 수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고추와 마늘 등 주요 소득 작물의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건고추의 공급량 가운데 수입산의 비중은 2000년 13%에서 2010년에는 51%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UR 협상²에서 고추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다대기 고추와 냉동 고추는 낮은 관세로 개방했는데, 수입업자들이 이 같은 조건을 악용해 낮은 관세의 다대기와 냉동 형태로 고추를 들여와 말리거나 해동시켜서 고춧가루를 가공하여 판매하다보니 값싼 중국산 고추가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고추 가운데 반 이상은 수입산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늘 역시 2013년 공급량이 47만 3천 톤 가량인 가운데, 시장의 수요인 38만 7천 톤에 비해 공급량이 8만 6천 톤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만 4천 톤이나 수입했다. 이에 따라 가격이 30% 이상 폭락한 것이다. 특히 고추와 마찬가지로 마늘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냉동 깐마늘은 낮은 관세로 개방하다보니 수입업자들이 냉동 깐마늘을 싸게 들

²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1986~1993년까지 진행된 국제다자간 협상으로 농산물 무역이 처음으로 다루어졌고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개방이 시작되었다.

여와 해동해서 다진마늘 또는 깐마늘로 다량 유통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2012년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는 등 FTA 체결 확대에 의해 농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총 46개국과 9건의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다. 최근에는 한국농업에 '재앙'이라고 불리는 중국과의 FTA도 협상 중에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추진 중이다. 대부분 농산물 수출 강국들이다. 농업의 희생 하에 공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통상전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표 1> FTA 현황

구분	FTA 현황 (발효일, 타결일)
발효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터키(12.6)
타결	콜롬비아(13.2), 호주(13.12), 캐나다(14.3)
협상중	GCC,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한중일, 베트남, 뉴질랜드, RCEP
검토중	MERCOSUR, SACU,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이스라엘, 중미, T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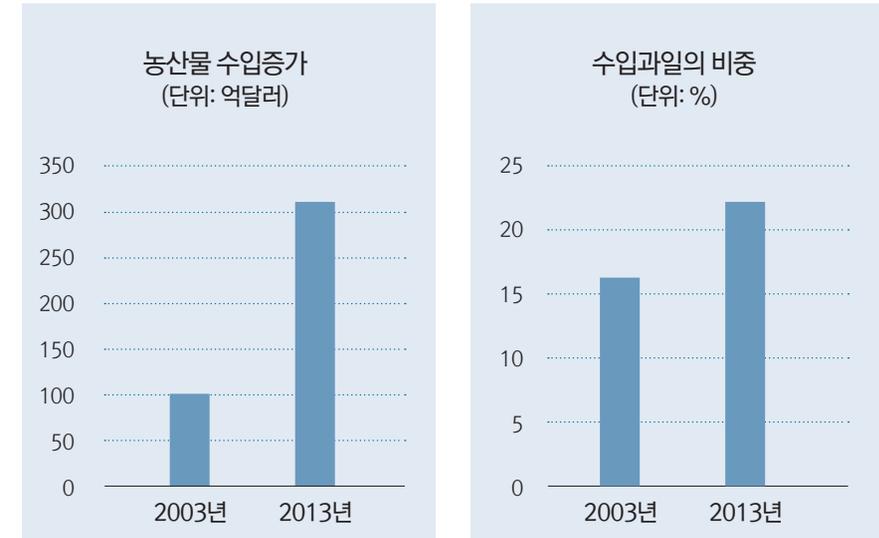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발효 이후 관세철폐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아직 전면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적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농산물 수입은 FTA 발효 이전인 2003년에 102억 2천만 달러에서 2013년 302억 9천 9백만 달러로 3배나 급증하였다.

수입농산물의 국내 농산물 시장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다. 수입 과일의 비중은 2003년 16.3%수준이었으나 2013년 23%로 확대되었다. 칠레산 포

도의 시장점유율은 2003년 1%에서 지난해 6%까지 증가하였고 미국산 과일의 시장점유율 역시 FTA 발효 전인 2011년 32.2%에서 지난해 36.4%로 상승하였다.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산의 비중이 2003년 7.4%에서 2013년 17.8%로 증가하였고 유제품 역시 2003년 5.5%에서 지난해 9.2%로 확대되었다.



<그림 3> FTA 발효 이후 수입농산물의 증가 현황

셋째, 농산물 수급 및 적정가격지지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산물 생산은 자연조건과 기후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즉시 반응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고, 소비량의 변동이 크지 않고 생산주기가 긴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며,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수요증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미 생산된 물량을 소비하기 어려워 가격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의 특성상 재고 발생에 따른 관리나 보관에도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조절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농산물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만 맡겨 놓을 경우, 언제든지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이 올 수 있으며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위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 수급 및 적정가격유지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 수급 및 적정가격지지정책에는 정부수매, 최저보장가격제도, 정부비축, 유통명령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정부는 채소류 가격안정 사업으로 계약재배, 최저가격제도, 수매비축사업을 하고 있다.

<표 2> 농산물 주요 가격정책

제도	내용
정부수매	쌀, 보리의 추하곡수매가 대표적인 경우. 일정한 가격으로 정부가 매입하였다가 시장의 수급현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매.
최저가격보장 제도	농산물의 가격 급락시 정부가 정해놓은 하한가격으로 수매 또는 산지폐기하는 제도.
정부비축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정부가 농산물을 구입하여 비축함으로써 가격의 하락을 방지, 과소생산의 경우에는 정부재고를 방출하여 가격상승을 방지.
유통명령	정부가 생산자들의 동의를 얻어 광고, 포장, 농산물의 질, 유통량 등을 통제.

하지만 배추, 무, 마늘, 양파 등 채소류 등에 대한 수매비축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대비 수매량이 미미하고 수매가격이 너무 낮다보니 농가 참여도가 저조하여 2006~2008년 3년간 889억 원이 불용되는 등 가격안정 효과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한 채소류 6개 품목에 대한 최저보장 가격 역시 수년간 동결되어 동기간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정부의 가격지지 의지가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재배 역시 저조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계약단가가 농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격폭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대책도 없다. 2010년 배춧값 폭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사회문제화가 될 정도로 심각하였지만 정부 대책은 무관세 수입물량 확대와 같은 외국에서 값싼 배추 사오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폭락 또는 폭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약재배 확대, 수급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 농업관측개선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산물의 수급관리 및 적정가격유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물가안정 목적의 농산물 가격하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수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조금만 시세가 높아져도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여론몰이를 하고, 곧바로 수입산으로 때우려는 임시방편 대책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율관세할당(TRQ)³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장에서 고추가격이 높을 때는 이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평상시 고추에 대한 관세 수준이 50%인 것에 비해 저율(10%)의 관세로 고추를 수입하는 것이다. 2011년에 고추가격이 상승하자 정부는 전년대비 두 배 가량인 14,092톤을 수입하여 시장에 방출하였고 고추가격이 하향세로 접어든 2012년에도 과거보다 많은 8,710톤이나 수입하였다.

³ 특정품목에 대해 정해진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보통 5~10%)를 부과하고 그 선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물가관리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음에 따라 2011년에만 20여 차례의 농산물 관련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농산물 수입을 통한 가격하락 유도정책이 과거에 비해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관세 인하 등을 통한 수입 장려차원을 넘어서 ‘정부가 수입업체를 통해 삼겹살을 구매하여 판매업체에 직접 공급하고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 하는가 하면 ‘민간 수입업체가 항공기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 지원’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정책까지 도입되기도 하였다.

넷째,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의 역할은 개별 생산자인 농민의 협동을 통해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사업을 함으로써 농민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즉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쌀, 사과, 배, 고추, 마늘, 돼지 등 개별 품목별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 조합들이 전국적인 연합사업을 통해 수급 및 출하조절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가격폭락과 폭등 사태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과 농민단체의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한국의 농협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설립되었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본연의 역할인 구매 판매 사업은 뒷전인 채 돈놀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다.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3. 농산물 가격폭등, 폭락의 해결방안

첫째,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무분별한 수입개방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타결 또는 진행 중인 각국과의 FTA를 보면 싱가포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농산물 수출 강국이다. 2008년 한미 FTA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서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는 대부분 농산물 개방을 통해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 추구’로, 이로 인해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외 개방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다. 결국 일방적인 농업 희생을 전제로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통상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농산물 가격폭락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농산물 수급 및 적정가격 유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먹을거리인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매 비축 등 수급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원활한 소비자 구매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 가격상한제 도입 등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산물가격을 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여기는 정책기조를 철회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수급조절을 위해 노력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재해 등으로 인해 가격변동이 극심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손실과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격안정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4 200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관사무인계인수서’(2008.8.6).

셋째, 품목별 생산조직의 수급조절 및 시장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수급조절 뿐만 아니라 생산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쌀,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등 주요 품목별로 협동조합의 전국단위 품목 연합을 지향해야 하고 우선 도별, 시군별 주요농산물 중 시행 가능한 품목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주산지연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적정 공급량, 출하시기 등을 생산자 스스로 조절해 나가야 한다. 농협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새 협동조합,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품목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넷째, 공공급식·로컬푸드 등 공공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폭락과 폭등 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시장의 확대 또한 중요하다.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생협이 농산물 판매 등은 적정 생산비에 근거한 새로운 농산물 유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기존 시장판매와 다른 방식의 공적 영역(사회적 경제 영역)이 농산물 유통시장의 일정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윤만을 추구하는 중간 상인과 대기업 유통자본의 농산물 가격 교란에 맞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농산물 계약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적정 생산비 보장을 통해 생산자 농민들이 의욕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생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먹을 거리를 공급하는 방향에서 적정 가격과 재배물량을 미리 정하는 계약재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농협의 계약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에는 계약단가와 최저보장가격이 생산자 농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문제가 컸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이 올라갈 경우 이탈하는 농민이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계획 생산방식을 농정의 중요한 축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해나가야 하며, 이것이 식량자급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협의 계약재배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생산자의 계약이행 의무화, 인식의 전환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coop](#)

협동으로 함께 굽는 빵, 동네빵집 되살릴까

김은남(<시사IN> 기자)

신흥중 깜빠뉴 베이커리 사장(62). 열일곱 살, 전남 영암에서 무작정 상경한 그 해 처음 빵을 빚었다. 서울에 와 있던 친척이 마침 제과제빵 일을 하고 있었다. 이쪽 일을 하면 숙식도 제공된다 했다.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 그로부터 45년. 열심히 살았다. 제빵사가 됐고, 가족을 꾸렸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 주택가로 접어드는 큰길가에 ‘빵의 나라’라는 가게도 차려 빵집 사장님이 됐다.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1990년대 중후반 들어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전국적으로 골목 진출을 개시한 것이 이즈음이었다. 그에 비례해 동네빵집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신 사장이 살던 동네도 마찬가지였다. 십여 년이 지나고 보니 인근에서 장사하던 빵집 7곳이 문을 닫고 신 사장네 빵집 한 곳만 남았다. 그 사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6곳이 새로 들어섰다. 문을 닫은 동네빵집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이름을 갈아탄 경우도 있었다. “가맹점으로 바꾸지 않으면 바로 옆에 매장을 내겠다고 (대기업들이) 위협하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신 씨는 말했다.

2000년대 들어 신 씨는 급기야 ‘빵굽터’라는 중소 브랜드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는 길을 선택했다. 대기업 브랜드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나마 보호막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였다. 대기업보다 브랜드 이용료를 덜 내도 되고, 매장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과의 격차는 자꾸만 벌어져 갔다. “브랜드 이용료로 월 30만 원을 내는 데 비해 혜택은 거의 없었다”고 신씨는 말했다.

최기권 마실ing 사장(52). 벌써 24년째 지금 있는 자리(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에서 빵집을 해오고 있다. 입지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큰길 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있다. 돌이켜보면 빵집으로 “돈을 쓸어 모으던 때가 있었다.” 상권 좋지, 빵 맛 좋지,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담뱃 받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4년 전 인근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고 최기권 사장은 회고했다. “처음엔 식당이 새로 들어선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지. 불과 열 걸음 떨어진 옆옆 가게에 파리바게뜨가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나.”

파리바게뜨가 옆에 생긴 이후 자꾸만 줄어가던 매출에 애가 타던 최 씨는 사실상 업종을 전환하는 결단을 내렸다. 매장을 카페로 리모델링하면서 판매하던 빵의 종류와 갯수를 대폭 줄여버린 것이다. 이를테면 커피가 주종이고 빵은 구색 맞추기 용이 된 썸이다. 함께 빵 굽던 종업원 2명도 내보냈다.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카페는 그런대로 성공적인 듯했다. 커피에 관심이 많아 바리스타 교육까지 이수한 둘째 아들이 직접 원두를 공수하는 등 정성을 들이면서 커피 맛이 괜찮다는 소문이 퍼졌고, 동네 이웃들도 사랑방인 양 이곳을 모임 장소로 삼게 됐다. 그러나 문제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매장을 확장해 카페 공간을 새로 내면서 또 다시 시련이 시작됐다. “우린 커피 한 잔에 3,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커피를 1,500원에 판다는 얘길 듣고 맥이 풀렸다”라고 최씨는 말했다. 자기네가 좋은 원료를 쓴다고 아무리 강조해 봐야 대기업의 혈값 공세와 마케팅 공세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치이고 자본은 딸리고... 반도의 혼한 빵집 사연

네티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여기까지는 ‘반도의 혼한 빵집 사연’이다. 빵 굽는 기술이 있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내

집 장만도 거뜰히 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고 이들은 회고한다. <제빵왕 김탁구>에서 마냥 동네빵집의 전성시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대기업들이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면서다. 물론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국내 제과제빵 업계가 생산·유통·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이룬 것은 부인하지 못할 성과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은 자기네 프랜차이즈에 들어오게끔 기존 동네빵집을 압박하고, 이를 거부하는 동네빵집이 있을 경우 바로 옆에 신규 매장을 오픈하거나 건물주에게 기존 동네빵집 임대료를 터무니없게 인상해 임대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각종 불공정한 형태를 일삼아 골목상인들의 원성을 샀다. 이 같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사회문제가 되자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존 동네빵집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을 낼 수 없게끔 출점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이 동네빵집 사장들의 중론이다. 2000년에 1만 8천 여 개에 달했던 동네빵집은 십여 년 만에 4천여 개로 급감했다. 신흥중·최기권 사장이 속한 대한제과협회 서울 서부지회(서대문구·은평구)의 경우 한창때는 회원 수가 300명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50명이 될까 말까한 수준이다. “지금껏 살아남은 동네빵집 주인들은 정말 독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실력이 딸리거나 허랑방탕한 사람들은 벌써 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신흥중 사장은 말했다.

마침내 현실이 된 빵집 주인들의 숙원

‘반도의 흔한 사연’을 넘어 이들이 ‘특별한 사연’의 주인공이 된 것은 동네빵네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면서다. 발단은 2013년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작한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공모 사업이었다. 소상공인 5명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동설비·장비 구매,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공고를 보고 서대문구·은평구 빵집 사장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솔직히 공모 참여 자격이 협동조합으로 한정돼 있어 협동조합 설립에 눈을 돌린 측면이 크다”고 신흥중 사장은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의 ‘눈먼 돈’을 거저먹겠다고 달려든 것만은 아니었다. 배이성 노블베이커리 사장(51·은평구 수색동)에 따르면, 공동시설은 이들의 숙원이었다. 협회 활동 등을 통해 오랜 기간 친목을 다져온 빵집 주인들은 ‘우리도 제대로 된 공장만 있으면 대기업과 맞붙어 볼 만할 텐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곤 했다. 지금처럼 가내수공업식으로 각자 자기네 오븐에서 빵을 구워내는 구조로는 다양한 빵 또는 숙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빵은 생산하기가 어려웠다. 새로운 기술을 교육받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도 한계가 뚜렷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으니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때마침 ‘귀인’도 나타났다. 연세대 학생들로 이뤄진 ‘인액터스’가 그들이었다. 인액터스는 탈북자가 중심이 된 도심 녹화 사업이나 자원 재활용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주로 해온 대학 동아리다. 2013년 들어 이들이 새롭게 눈을 돌린 것이 골목상권 문제였다. “골목상권 문제를 공부하다 동네빵집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고 싶었다”고 인액터스 조성열씨(연세대 영어영문학과)는 말했다. 이에 따라 동아리 내에 ‘동빵팀(동네빵네 프로젝트 팀)’을 구성한 학생 10여 명은 먼저 학교에서 가까운 서대문구·은평구의 동네빵집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는 상권 분석에서 마케팅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을 돕고 싶다고 빵집 주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협동조합 설립 논의가 불거진 것이다.

각자 매장을 운영하며 생업에 바빴던 빵집 사장들이 협동조합을 순조롭게 설립하기까지는 이 학생들의 도움이 컸다. 학생들은 협동조합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공부하며 정관 작성에서 설립 신고까지 빵집 사장들을 서포트하는 한편, '동네빵네'라는 협동조합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맛있게 부푼 빵을 형상화시킨 감각적인 로고 또한 이들이 소개한 디자이너들의 재능 기부로 탄생한 것이다.



연세대 학생들로 이뤄진 인액터스팀이 동네빵네 홍보를 돕고 있다. 사진은 동네빵네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재 중인 '빵툰(빵+웹툰)'

공장 함께 운영하며 히트상품 레시피도 공유

2013년 6월, 설립 신고를 마친 동네빵네협동조합이 맨 먼저 역점을 둔 것은 숙원사업이었던 공동 공장의 설립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공동 시설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동네빵네협동조합에 참여하기로 한 빵집 사장 11명은 각자 천만 원씩을 출자금으로 냈다. 정부 지원금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

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종잣돈 삼아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나선 조합은 2014년 1월 은평구 신사동에 마침내 공동 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아직 무더위가 한창인 8월 말, 이곳 공장을 직접 한번 찾아가 보았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걸어 3분 거리. 조합원들이 속한 빵집들로부터 가까이 언제든 신선한 빵과 반죽을 배달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였다. 협동조합 2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흥중 사장의 안내를 받아 공장 안으로 들어서니 제빵사들이 거대한 밀가루 반죽을 놓고 씨름 중인 선반대가 맨 먼저 눈에 들어왔다. 주변을 둘러본즉 대형 반죽기며 숙성기, 오븐도 차례로 눈에 띄었다. 과거 개인들이 빵집을 운영할 때는 사들일 엄두를 내기 어려웠던 개당 2천~3천만 원짜리 고가의 장비들이란다.



정부 지원금과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마련한 공장 내부 모습

신 이사장이 특히 공을 들여 설명한 것은 천연효모 발효기. “시중에서 파는 빵 중에는 제빵 개량제를 써서 반죽을 강제로 발효시키는 빵이 많다. 그래야 발효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개인 빵집들도 사정이 비슷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렇게 강제 발효시킨 빵을 먹은 사람들은 “밀

가루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소연하곤 한다. 그러나 소화를 저해한 범인은 밀가루가 아니다. 이들 빵의 식감을 오랫동안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 다량으로 집어넣은 유화제·방부제 등 식품첨가물이 진짜 범인인 셈이다. 동네빵네의 경우 공동 공장이 생기면서 천연효모 발효기를 이용해 2~3회에 걸쳐 반죽을 천천히 발효·숙성시키는 일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더 건강한 빵을 손님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신 이사장은 말했다.

더욱이 이들 공장에서 만든 빵은 대부분 얼리지 않은 생지(生地) 상태로 각 조합원의 매장에 배달된다. 조합원인 빵집 사장들은 이 생지를 다시 발효시키거나 가공해 각자 개성이 살아 있으면서도 신선한 빵을 구워낸다. 그런 만큼 본사로부터 냉동 생지를 공급받아 이를 오븐에 구워내기만 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과는 빵맛의 차원이 다르다고 동네빵네협동조합은 자부한다.

빵 종류도 훨씬 다양해졌다. 빵집 사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빵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새 빵을 개발할 때마다 조합원들이 모여 품평회를 하고, 이를 제품화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신 이사장은 말했다. 각자 매장에서 잘나가던 대표 주자들을 개량해 공동 브랜드화하고 레시피를 공유하는 일에도 나섰다.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던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달라진 빵 맛을 먼저 알아본 것은 소비자들이다. 일주일간 세 번 발효시킨 빵에 붉은 사과·건포도 등이 박혀 새콤달콤한 ‘일주일간 꿈꾼 빵’, 노아의 방주처럼 둥글게 생긴 빵 가운데 고소한 크림치즈를 얹은 ‘노아갈릭’, 빵 속에 든 무화과가 툭툭 씹히는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등 천연 발효 빵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빵에 소비자들은 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4월,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일주일간 벌인 특별 입점 행사에서 동네빵네협동조합은 빵 5,000만원어치를 똑딱 팔아치우기도 했다. 백화점 담당자도 놀랐다고 할 만큼 인상적인 기록이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협동조합 우수상품 바자회’에서도 동네빵네의 빵은 날개돋친 듯 팔려 나갔다. 이런 입소문을 바탕으로 동네빵네협동조합은 ‘SK 초콜릿’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동네빵네 건강빵 세트’도 판매하기 시작했다(인터넷 판매는 여름철에 일시 중단했다가 9월 중순 재개한다).

조합원들의 가게 매출도 늘었다. 전통적인 빵집 비수기인 여름 이전까지만 해도 매장당 매출이 20% 이상 신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동네빵네협동조합은 추산했다. 카페 위주로 운영되던 마실ing의 경우 협동조합 전환 이후 빵 판매를 크게 확대한 결과 매출이 40% 가까이 뛰었다. 덕분에 최기권 사장은 아들 지윤씨(25)와 새벽부터 하루 종일 빵을 구워낸다.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빵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전공을 바꿨다는 지윤씨는 “빵 만들고 굽는 게 어려우면서도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서 함께 제과제빵을 공부 중인 동기들의 경우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이런 데서는 냉동생지를 해동시켜 오븐에 구워내는 작업이 대부분인지라 빵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협동조합 전환 이후 이전보다 구색이 훨씬 다양해진 빵을 다루면서 아버지한테 고급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된 그는 분명 행운아인 셈이다.



신흥중 동네빵네협동조합 이사장이 숙성고 안에 든 빵을 보여주고 있다

협동조합,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

동네빵네협동조합에는 아직 불안 요소도 많다. 심지어 동네빵네에 속한 조합원은 “누가 협동조합을 한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배운 점도 많다”고 그는 말했다. 그렇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드는, 어쩌면 선후가 뒤바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장에서 발생했다. 배이성 노블베이커리 사장은 “처음에 공장을 너무 크게 시작했던 것 같다. 차근차근 규모를 키워갔어야 하는데 서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욕심이 앞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지원 정책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 설비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골목상인들이 제대로 협동조합을 공부하거나 미래를 설계할 시간 없이 설비 투자에 매달리게 됐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비용도 발생했다. 일단 공장 내 위생·냉각·자동주문 시설 등을 갖춰가는 데 끊임없이 추가 비용이 들었다. 초기 운영비를 따로 떼어 놓지 않은 것도 실책이었다. “처음에는 특히나 수요공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다 보니 재고가 쌓이면서 적자가 늘었다. 외부 이벤트에서 빵을 엄청나게 팔아놓고도 뒤로는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멍가게 수준으로 사업하던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매 순간 도전이었다”고 신흥중 이사장은 말했다. 하다못해 세금 비용도 발생했다. 신 이사장은 “올해 처음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깜짝 놀랐다. 정부가 말로는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면서 일반 기업과 똑같이 법인세를 물리더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구멍 난 재정은 조합원들의 각출로 메울 수밖에 없었다. 천만 원으로 시작됐던 조합원 1인당 출자금은 일 년여만에 2천~3천만 원 수준으로 늘었다. 한 조합원은 “매장에서 돈을 좀 만지게 되면 뭐하나. 공장 빛 메우느라 끌어박아야 하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이러니 조합원 간에 불화가 빚어지기도 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언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했다. 일부 조합원의 이기적인 행동 또한 협동조합을 위태롭게 했다. 공장의 경우 이들 조합원 매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게 돼 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전통적인 빵집 비수기인 여름을 맞으면서 매출이 하락하자 애초에 약속했던 물량을 구입하지 않은 채 자기 매장에서 직접 밀가루를 반죽하고 빵을 빚는 조합원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장 매출이 하락하고, 이것이 다시 조합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배이성 사장은 “조합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걸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를 선택한 이상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고 신흥중 이사장은 말했다.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것이 결국 조합원 모두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협동조합의 작동 원리를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집(공장)이 잘 되야 내 집(개인 매장)도 잘 된다. 우리 집이 잘못되면 내 집도 미래가 없다”는 신 이사장은 요즘 조합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집’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궁리 중이다. 조합원 이외 가게들에도 빵 반죽을 제공하면서 공장 거래처를 늘리고, 학교들을 상대로 빵 만들기 체험학습을 유치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마실ing의 안주인 안미진씨(47)는 협동조합을 하면서 생각지 못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과거처럼 한 치 앞이 안 보여 낙담하는 일은 사라졌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하면 동네빵집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녀가 전공을 바꿔 가업을 잇겠다고 나선 큰아들을 환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달라진 가게를 보고 제 일처럼 좋아하는 단골손님들을 보며 새삼 자부심도 생기더라고 안 씨는 말했다. “언젠가부터 파리바게뜨가 빵집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우리조차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하면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더 오랜 기간, 더 가까운 곳에서 이웃들의

건강과 추억을 챙겨온 것은 우리들 아닌가.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여럿이 힘을 합치면 동네 빵집이 다시 빵집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icoop



동네빵네협동조합에는 서대문구와 은평구 빵집 11곳이 참여 중이다

협동조합 역사: 로치데일협동조합을 다시 생각한다

R.C. 리처드슨(영국 윈체스터대학)

최근 몇 달 동안 영국의 협동조합은 신문과 방송, 두 매체에서 계속되는 나쁜 평판에 시달리고 있다. 테스코와 세인즈버리 같은 거대 슈퍼마켓 체인에 의해 소매업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되던 일이었다.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조직과 전략, 그리고 경영의 질과 구조 모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곧 오늘날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경영진이 치열한 경쟁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한 때, 협동조합 진영의 최고 걸작이던 자랑스러운 윤리적 ‘녹색’ 협동조합은 행은, 무능하고 도덕성이 무너진 리더십, 그리고 쓰러져가는 주택금융조합과 그 모든 지점들을 무분별하게 흡수한 것 때문에 붕괴 직전에 내몰렸다. 영국 코퍼라티브그룹의 사업모델과 경영구조에 외부감사를 도입하는 것은 저항을 받아왔고, 결국에는 부분적으로만 시행하게 되었다. 엄청난 부채에 직면한 코퍼라티브그룹은 자산 포트폴리오, 약제 사업부, 특히 4만 에이커 규모의 농지를 비롯한 일부 주요 자산을 매각해야만 했다. 오늘날의 비평가와 경제학자 중 몇몇은 영국의 코퍼라티브그룹과 그룹이 계승하고 있는 이상적인 방안들의 미래가 밝은지 어떤지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매각,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루어진 개혁에도 불구하고, 안정과 성장은, 어쩌면 생존까지도,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2014년의 영국 코퍼라티브그룹의 우울한 상황과 반대로 1844년, 로치데일의 랭커셔 직물타운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창시자들과 19세기에서 20세기 초 협동조합의 고귀한 원칙을 지키던, 영광스러운 그 날들로 돌아가 보자. 로치데일은 첫 산업혁명의 최초 발상지인 요크셔와 랭커셔의 경계마

을 페니hil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에 전 세계 협동조합의 수도로 지정되었다.



2012년 10월, 크게 확장한 박물관(영국화폐로 230만 파운드가량의 확장 비용이 소요)에서는 로치데일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의 초창기 시절을 엿볼 수 있다. 박물관은 1931년, 아주 소박한 규모의 박물관으로 처음 꾸며진 토드레인의 최초 매장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박물관은 세계 전역에서 온 방문객과 협동조합에 헌신적인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고급스러운 가이드북은 일본어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박물관에는 1844년에 매장에서 쓰던 가구와 장식품들, 그리고 회의록 원본과 기타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마침 같은 해인 2012년에 로치데일 선구자들을 다큐적으로 다룬 TV용 영화¹가 황금시간대에 방영되어 성공을 거두면서 이 협동조합 박물관까지도 자연스레 매스컴의 관심을 끌었

¹ 영화 <Rochdale Pioneers 로치데일 선구자들>

다. 수많은 적대적인 발언과 비평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재의 불행과는 반대로, 과거 영국 협동조합은 여러 차례 박수 받고, 축하받았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축하받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1844년 원래 로치데일 선구자들—주로 방직공과 기타 숙련노동자 및 수공업 직공이 전체 28파운드의 초기 자본을 모으고, 700파운드가 조금 넘는 매출을 첫 해에 올린—이 협동조합 기본원칙을 세웠다고 할 수는 없다. 기본원칙의 일부는 17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보다 분명하게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로버트 오웬이나 윌리엄 킹과 같은 인물이 이것들을 좀 더 보완하여 협동조합 기본원칙의 틀을 세웠다. 초기 협동조합 실험은 다른 곳에서도 진행되었는데, 켄트의 채덤, 쉬어니스, 브라이튼, 런던, 헐, 스코틀랜드의 뉴라나크 등이 포함되며, 심지어 로치데일 내에서도 협동조합이 있었다. 협동조합 회의가 1831년 (로치데일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맨체스터에서 열렸는데, 협동조합 회의로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로치데일 선구자들은 1844년 12월, 아주 기본적이고 급조된 매장을 토드레인 31번지의 오래된 모직 창고 1층에서 열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서 첫 번째의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소매업체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선임자들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다. 로치데일의 원칙은 민주주의, 이윤-공유, 현금 결제, 공정한 가격, 정직한 무게와 수단, 순수 품질의 상품 보장(상업적인 위법행위와 불순품이 일어날 때)이었다. 개장 후 6년 만에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연간 매출은 1만 3천 파운드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였고, 조합원은 600명이 넘었다. 1867년 선구자들은 원래 매장을 훨씬 넓혀 같은 거리의 좀 더 큰 4층 건물로 이사하고, 번성 중인 사업체의 다른 부서 자리를 만드는 한편, 당시 조합이 제공하던 다른 서비스(교육과 조합원 도서관 등)를 위한 공간을 제공했다. 또한 그때부터 잉글랜드 북부지역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로치데일 협동조합 모델을 받아들였다. 1914년이 되자 영국에는 1,500개가 넘는 소매 협동조합이 생겼다. 협

동조합은 생산, 제조, 도매유통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맨체스터에 본부를 둔 CWS(도매협동조합사업연합회)는 186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19세기 마지막 10년 간, 영국 코퍼라티브그룹은 상품 제조로 활동을 다각화하고, 은행과 보험 부서를 성공적으로 설립했다. 또한 다양한 농업 부문들로 큰 걸음을 내디뎠으니, 영국에서 뿐만이 아니었다. 현재 스리랑카에 있는 차 플랜테이션을 1902년 인수한 것은 주목할 만한 해외농업 사업체 사례다. 코퍼라티브그룹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신념은 더욱 폭넓게 확장되었다. 처음부터 그룹 안에서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지지해왔다. 또한 로치데일은 지역별로 노동자계층에게 주택을 제공했다. 협동조합의 교육 활동 또한 지속되었으니, 1919년 협동조합 대학의 설립으로 정점을 찍는다. 이 대학은 기숙사와 장학금을 제공했다. 협동조합운동의 민주적 정책은 마침내 1917년 의회 내 의원을 둔 독립적인 당으로 발전했고, 이후 초기의 노동당과 합병하게 된다.

이 모든 것,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새롭게 문을 연 로치데일 선구자 박물관에 알맞게 전시되어 기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든 학교를 통해서든 이곳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는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다양하고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협동조합과 활동, 그 중요성에 관한 훌륭한 출판물들도 판매된다. 잘 만들어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박물관 웹사이트에는 ‘가상 여행’ 기능도 있다. 거리감이 느껴지던 예전의 전통적 양식의 박물관과는 다른 모습이다.

오늘날의 박물관은 협동조합유산기금(Co-operative Heritage Trust, 2007년 창립)에 의해 활기차고 상상력 넘치게 운영되고 있다. 기금은 맨체스터에 있는 협동조합 운동의 중앙 아카이브에서 관리한다.

죽은 과거의 파편으로서가 아니라, 모쪼록 살아 있는 역사로서 박물관이 오랫동안 번성하길. 19세기 중반 로치데일 선구자들을 이끌고, 여전히 현

재 세계의 다른 곳, 매우 다른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원래의 이상, 에너지, 헌신을 일깨우길.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즉각적인, 이미 만들어진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편적인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앞을 내다보고 벽찬 도전을 마주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박물관의 목적이 있다. 1844년의 로치데일 선구자는 단순하게 편히 묻어가는 사람(passenger)이 아니라 대담한 선지자(visionary)들이었다.

R.C. 리차드슨(Richardson)은 현재 윈체스터대학 역사학과 명예교수이며, 영국 사회사에 대한 많은 책과 논문을 썼다. 2012년 생협평론(11-102쪽)에 ‘Living history: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살아있는 역사: 북서부 잉글랜드 협동조합에서 일하다)’를 실은 바 있다.

번역: 이경수(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협동연구원) [icoop](#)

Co-op History: Re-visiting the Rochdale Pioneers

R.C.Richardson(University of Winchester UK)

The Co-op in England has been battling against depressingly bad publicity in recent months both in the newspaper press and on television. Its market share of retailing has continued to fall; self-evidently it has long since been overtaken by the top supermarket chains such as Tesco and Sainsbury's. Fundamentally backward-looking, its business organization and strategy, and the structure and quality of its management team have all been called into question. It has proved itself ill-equipped to cope with the increasingly intense competition of today's recession-stricken economy. The proudly ethical and 'green' Co-op Bank, once a jewel in the crown, has teetered on the brink of collapse due to incompetent and morally bankrupt leadership and the ill-advised absorption of a faltering building society and all its branches. Probing external audits of the Co-op group's management structures and business model has been resisted and, in the end, only partly implemented. Confronted by colossal debts the Co-op group has been compelled to sell off some of its major assets, in particular its huge 40,000 acre agricultural enterprise, its pharmacy division, and some of its property portfolio. It has been a real question for some of today's commentators and economists whether the Co-op group in England and its inherited ideals have any significant future. Even with the very recent sell-offs and the belated implementation of some reforms stabilization and growth, perhaps even survival, are likely to be a real struggle.

Faced with the depressing picture offered by the state of the Co-op in England in 2014 it is refreshing to turn back to the glory days and lofty

principles of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and to the founding fathers of the Co-operative Movement in the Lancashire textile town of Rochdale in 1844. Rochdale, which nestles next to the Pennine hills in the border country between Lancashire and Yorkshire, the original heartland of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was justly designated the global capital of Co-operation in 2011. In October 2012 a greatly enlarged museum (re-vamped at a cost of over 2.3 million pounds sterling) devoted to the early days of the Co-op opened in Rochdale. It incorporated the original store in Toad Lane - see the below photograph - which had first opened as a museum on a very modest scale in 1931.

The new museum attracts visitors and dedicated pilgrim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ts glossy guidebook has been translated into several languages, Japanese among them. Some of the furniture and fittings of the 1844 store and some of the original minute books and other records are on display.



A successful television docu-drama about the Rochdale Pioneers and their importance was given a prime-time viewing slot in the same year (2012), strategically adding useful publicity. Clearly, while the present misfortunes of the Co-op in England have been the subject of much hostile comment and criticism its past has been repeatedly applauded and celebrated.

But it is as well to be clear what exactly is celebrated. The original Rochdale Pioneers of 1844 – mainly weavers and skilled workers and craftsmen of other kinds, with a combined initial working capital of only £28 and with sales in the first year of trading of just over £700 – cannot be credited with the invention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operation. These can be traced back in part to the seventeenth century and, more completely, to the lat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 centuries when men like Robert Owen and William King paved the way in developing an articulate agenda. Early Co-op experiments took place in other places, among them Chatham and Sheerness in Kent, Brighton, London, Hull, and New Lanark in Scotland – and even in Rochdale itself. A Co-operative Congress – the first of its kind – was held in Manchester (only a few miles from Rochdale) in 1831.

But the Rochdale Pioneers pulled off – against all the odds – the first successful and sustained venture in Co-operative retailing when they opened in December 1844 their extremely basic and hastily improvised shop on the ground floor of a former woollen warehouse at 31 Toad Lane. They were careful to learn from the mistakes of their predecessors. The Rochdale principles were democracy, profit-sharing, cash-only trading, fair prices, honest weights and measures, and guaranteed pure quality goods (at a time when commercial malpractices and adulteration were commonplace).

Within the space of only six years of the opening annual sales at the Rochdale Co-op had increased exponentially to over £13,000 and the Society had a membership of 600. By 1867 the Pioneers had far outgrown the original premises and moved further up the same street into a large new, imposing, four-storey, building which housed the different departments of their flourishing business and provided space for the other services (among them education and a members' library) which by that point the Society offered.

By that date, too, the Rochdale model of Co-operation had been embraced in many other parts of the North of England and elsewhere. By 1914 there were no fewer than 1,500 Co-op retail societies in the UK. The Co-op had also moved into production, manufacture and wholesale trading; the CWS (the Co-operative Wholesale Society) with its headquarters in Manchester had begun operations in 1863. In the last decades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Co-op further diversified its activities and range of manufactured goods, and had successfully opened up banking and insurance divisions. It had also entered in a big way into the different branches of agriculture, not only in the UK; tea plantations in what is now Sri Lanka acquired in 1902 were one notable overseas farming enterprise. But the Co-op's wider socio-economic and political belief was also expanded. The role and rights of women were championed from the outset not only within the Co-op itself but in society at large. At local level the Co-op became a provider of working-class housing, first of all in Rochdale itself. The Co-op's educational activities also continued and culminated in 1919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College which offered residential courses and bursaries. The democratic politics of the Co-operative Movement – there from the beginning – finally found formal expression in 1917 in the originally separate Co-operative Party (with its

own Members of Parliament) which in due course merged with the nascent Labour Party.

All this, and more, are appropriately commemorated in the new Rochdale Pioneers Museum. Children who visit – both individually and in school parties – are well provided for with a range of special programmes designed to arouse their interest. A good range of publications about the Co-op and its activities and significance are on sale. – All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very traditional, rather forbidding former museum which though quaint and undeniably authentic was more like a mausoleum.

Today's Museum is energetically and imaginatively managed by the Co-operative Heritage Trust (formed in 2007) which also cares for the central archives of the Co-op Movement housed in Manchester. Long may the Museum flourish as living history – not as a remnant of a dead past but as a vibrant reminder that the original ideals, energy and commitment which guided the Rochdale Pioneers in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still have relevance in the very different conditions which prevail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day. But the relevance consists in part in inspiring the courage and determination to be forward-looking and to confront daunting challenges, not in providing a universal blueprint offering instant, ready-made solutions which can be unthinkingly implemented at all times and in all situations. The Rochdale Pioneers of 1844 were bold visionaries not mere passengers.

R.C.Richardson is Emeritus Professor of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Winchester and the author of many scholarly books and articles on English social history. His earlier article 'Living history: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appeared in this journal in 2012 (pp.102-11). [icoop](#)

눈부신 순간에 대한 기록 〈로치데일의 선구자들〉

주현숙(독립영화감독)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무엇일까?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인간에 대한 질문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선한 존재일까? 악한 존재일까? 종교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민을 했고, 그것들이 쌓여 철학이 되고

했을 터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면, 명쾌하게 답을 내리기 어렵다. 그렇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인간은 눈부실 때가 있다. <로치데일의 선구자들>은 그런 인간의 눈부신 순간에 대한 기록이다.

<로치데일의 선구자들>은 시간 여행을 하듯 19세기 초반의 영국 이야기로 시작한다. 영국 이야기라고 하지만 어딘지 낯설지 않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묘사는 늙은 노동자의 경험이 담긴 증언을 통해 힘을 얻는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낮게 읊조린다. “한 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않았던 세상, 그렇다고 그 세상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 영화는 천연덕스럽게 우리를 조용히 영국의 황량한 시골 길로 안내한다. 시골 길에 선 세 사람은 누추한 차림으로 특유의 영국식 유머를 구사하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영화는 이들이 왜 길 위에 서 있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묻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에서 황량한 길과는 다르게 희망을 품게 된다.

영화는 시간 여행을 계속 한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4개월 전, 윌리엄이라는 청년은 실업에 시달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벌어 그날의 양식을 구한다. 큰맘 먹고 사 들고 온 베이컨을 아내에게 내밀며 오늘도 풀이 죽어 있을 장인에 대해 걱정한다. 오랫동안 노동한 늙은 노동자의 얼굴에는 일자리를 잃은 당혹감과 무기력감이 있다. 일자리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일지도 모르겠다. 그 의식을 빼앗긴 사람의 얼굴에는 우울함이 가득하다. 그런 아버지를 뒤로하고 딸 베티와 윌리엄과 샘은 협동조합의 회의장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출자를 한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토해내고 있었다. 주변의 협동조합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기에 그 불안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것은 항상 실패할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그것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실패의 조건들만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런 실패의 조건들은 그냥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원하지 않는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것이었다.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다른 가게의 주인은 도매업자들을 선동해 어렵게 얻은 협동조합의 가게에 물건을 대지 못하게 하고 경쟁만이 성공을 만든다고 속삭이며 불안에 떠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흔든다. 흔들리는 조합원들은 또 다른 조합원인 윌리엄을 흔든다. 하지만 희망을 품은 그의 아내 베티는 조용히 그에게 희망을 이야기한다. 현실의 벽과 인간의 불안 그리고 그 안에 스스로를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다. 점잖은 자본가에게 얻은 참고는 볼품없지만 그 참고 앞에 서 있는 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은 손 볼 곳이 많으며 걱정하면서도 미래의 가게를 상상하며 미소 짓는다. 외면하는 도매업자들을 계속 만나러 다니고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원들 때문에 의기소침해지면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 현실의 벽을 마주하며 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은 꿈을 이룰 원칙들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해줄 사람은 우리 스스로라는 확신을 가진다.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은 더 현명해진다. 도매업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장을 찾아 나서자고 우울해 있던 늙은 노동자가 이야기한다. 서로 의견을 모으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미처 생각지 못한 해결법에 다들 들뜨고, 흔들렸던 윌리엄이 시장에 가겠다고 나선다. 길 위의 세 사람은 윌리엄과 샘 그리고 존이다. 존은 부를 창출하는 것은 공장 사장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도 아니고 일하는 우리들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닌 그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들 셋은 황량한 길을 수레를 끌며 간다. 그리고 시장에 다다른다. 활기찬 시장에서 사람을 잘 믿는 윌리엄은 좋지 않은 물건을 사지만, 경험 많은 존은 조합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물건을

구하기 위해 다시 흥정을 한다. 물건을 수레에 싣고 돌아오는 세 사람의 모습은 처음의 불안은 사라지고 설렘과 서로에 대한 신뢰로 가득하다.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가게에는 가스 공급자들의 거부로 등불 하나 밝히지 못해 어둡다. 문을 열지 못한 가게 밖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물건이 없는 가게 안을 비웃는다. 실패는 당연한 것이니까. 성공 전까지는 말이다. 물건이 실린 수레를 끌고 오는 세 사람이 모퉁이를 돌자 멀리 가게 밖의 사람들이 보이고 윌리엄은 무리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베틀의 모습을 본다. 천천히 베틀이 윌리엄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서 그녀는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미소를 짓는다. 희망이 실현되는 눈부신 순간이다.

가게 안의 사람들은 차려진 물건이 없지만 분주하다. 그런 사람들 사이로 존이 말하며 들어온다. 가스가 없다면 사온 초로 가게 안을 밝히자고. 초에 불이 붙여지고 어둠이 조금은 가시고 가게 안에는 물건이 정성스럽게 차려진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밖에 있던 흔들렸던 조합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차려진 물건은 밀가루 6자루,オート밀 1자루, 설탕, 버터 조금 그리고 양초였다. 눈부신 순간을 빛내기엔 더없이 충분한 차림이다. 이것은 1844년 12월 21일 영국의 공장 노동자 28명이 협동조합을 시작한 순간이다.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시작한 협동조합은 이제 세계 96개국 265회 월 단체가 가입하고 조합원 수가 10억 명에 달하는 국제연합 산하 최대 비정부기구로 성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망했던 세상을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한 1인 1표의 권리를 부여했다. 영국에서 보통선거권이 실현됐던 것은 1928년이지만 이들은 설립 초기부터 '1인 1표'를 실현했고 종교와 정치적 입장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이익을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했다. 영화는 시작의 순간,

더디게만 느껴졌던 시간들과 그 시간을 견디고 스스로의 상황은 스스로만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담담히 담아낸다. 그들이 만들어 낸 눈부신 순간들 덕에 조금은 부끄러워지고 조금은 더 희망을 가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과 영화를 통해 그 눈부신 순간을 만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의 시간대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노력

김영미(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CICOPA,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협동조합의 기여를 입증하다

전 세계 발전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UN '2015년 이후 개발 목표' (Post-2015 개발목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협동조합을 통해 UN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한 보고서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 CICOPA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도자, 협동조합(Co-operatives as builders of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의 연구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UN Post-2015 개발목표는 각 핵심 영역(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자 하며 이는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목표와 일치한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까? CICOPA 발표를 인용하자면 현재 전 세계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는 총 4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11,200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는데,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빈곤과 사회적 차별에 맞서 싸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 예로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CICOPA 내 12,600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금융 위기 속에서 일반 기업보다 더 큰 회복력을 입증했음을 사례로 들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지역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조합원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 훈련이 그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요구와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

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들의 역량, 권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발전된 역량을 통해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CICOPA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발전 전략을 3단계로 제시하기도 했다. 1단계에서 협동조합은 조직 내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교육과 훈련 실시, 자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협동조합끼리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발전과 협동조합 간 국제적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정책과 법 체제 마련에 힘을 쏟는 거시적 수준으로 나아간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실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협동조합이 Post-2015 개발 목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직원들의 권한 강화,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지역의 요구 대응 영역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의 기여를 강조하였다.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인하다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코퍼라티브유럽(유럽협동조합연맹)은 의회 선거에서 협동조합을 주요 의제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협동조합 정책을 담은 '협동조합 성명서'도 발표했다. 협동조합 지원 정책 요구안을 담은 이번 캠페인(#coopsupporter 캠페인)은 성명서를 지지하는 유럽의회 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발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5개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의 5개 주요 정치그룹을 대표하는 45명의 후보자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했고 그 중 27명은 유럽의회원으로 선출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 캠페인은 코퍼라티브유럽의 정책 요구 활동이 비로소 의원들과 진정한 소통을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협동조합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코퍼라티브유럽은 유럽의회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이 캠페인을 지속하여 유럽의회 내에서 협동조합을 지지하는 의원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하고자 한다.

유럽의회 선거 기간 동안 코퍼라티브유럽이 발표한 성명서는 협동조합 은행, 제조업 및 서비스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코퍼라티브유럽은 현재 EU의 협동조합 정책이 협동조합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임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수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원활한 협동조합 설립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협동조합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각 영역에서 제시한 정책 요구안을 살펴보자면 우선 5,600만 조합원과 85만 명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럽협동조합은행연합은 금융 부문에서 일반 기업과 다른 협동조합만의 다양한 규모와 사업 형태가 인정될 수 있도록 EU 및 국제적 수준의 법적 제도를 요구했다. 총 17개 EU 국가 내 5만 개 협동조합 및 직원 소유 기업의 연합체인 CECOP(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 유럽지부)은 사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협동조합 클러스터, 연합조직 지원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인 유로코업(Eurocoop)은 소비자협동조합의 사업과 운동을 위해 소매 정책, 공정 경쟁, 자본 마련을 위한 지원책을 요청했다. 소비자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하며 EU가 공정하고 강력한 소비자 정책과 식품 정책을 마련해 소비자협동조합의 소매 사업을 보호해야 함을 제안했다. 그 밖에 유럽 주택협동조합연합 CECODHAS는 사회/공공/협동조합주택의 효과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사회 투자를, 유럽의 재생가능한 에너지협동조합 대표 조직인 ReScoop은 화석 및 원자력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화석 및 원자력 에너지 산업 보조금 중단을 요청했다.

발췌 : ICA 다이제스트 2014년 6월, 7월, 8월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간도서

I. 단행본

번호	제목	발행년도
1	『진짜 가격은 얼마입니까? 2013』(E-Book)	2014
2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니시무라 이치로 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2013
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정광민 옮김)	2013
4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서울특별시)	2013
5	『진짜 가격은 얼마 입니까?』(E-Book)	2013
6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김형미 외 저)	2012
7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에드가 파넬 저, 엄찬희 옮김)	2012
8	『후쿠이생협의 도전』(일본생협연합회 엮음, 이은선 옮김)	2012
9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오리토이시오 저, 와카니시 케이코 일러스트, 이은선 옮김)	2012
10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사이토 요시아키 저, 다나카 히로시 옮김)	2012
11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이은선 옮김)	2012
12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김형미·김영미 옮김)	2011
13	『생활속의 협동』(오사와 마리 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2009
14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iCOOP협동조합연구소·한겨레 경제연구소 옮김)	2009
15	『협동, 생활의 윤리』(iCOOP생협연대 엮음)	2008
1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일본 21세기 코프연구소 엮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옮김)	2006
17	『새로운 생협운동』((사)한국생협연대 지음)	2002

II. 연구보고서

번호	제목	발행년도
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엄은희)	2014
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모음집: 이론/사례/거버넌스』(이경수 편역)	2014
3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4) 『대규모 협동조합 사업체의 거버넌스(1)』(이경수 편역)	2014
4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3) 『위기 동안 이탈리아 협동조합』(이경수 편역)	2014
5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2) 『무지개 깃발과 국제협동조합의 날 기원』(이경수 편역)	2014
6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1) 『협동조합 조합원과 운동』(이경수 편역)	2014
7	『훗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이향숙)	2014
8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지민진, 최은주)	2014
9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 만족도 조사』(손범규)	2014
10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5) 『참여 민주주의 공동 프로젝트 결과 보고』(이경수 편역)	2013
11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4) 『노동자 회생기업 현황과 관련 연구』(이경수 편역)	2013
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이경수 편역)	2013
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2-1)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관여』(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2-2) 『이론과 실제에서의 협동조합 회사』(이경수 편역)	2013
14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1-1) 『규모화 vs 참여』(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1-2) 『CWS 인수 시도』(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1-3) 『거버넌스』(이경수 편역)	2013

15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이경수 편역)	2013
16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9-1) 『식품부문 협동』(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9-2) 『자주관리 돌봄-협동조합 접근방식』(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이경수 편역)	2013
17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8-1) 『몬드라곤 인터뷰』(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8-2) 『일본 생협과 지역사회』(이경수 편역)	2013
18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7) 『사회연대경제 이해하기』(이경수 편역)	2013
19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6) 『지역사회 발전』(이경수 편역)	2013
20	『생협의 사회 가치 -iCOOP생협을 대상으로-』(이향숙·지민진)	2013
21	(생활과 동향 1호)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발표(지민진)	2013
22	『2012 iCOOP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염찬희·손범규·지민진)	2013
23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장상환)	2013
24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5) 『로치데일』(이경수 편역)	2012
25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조언 Tips』(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2) 『ICA 세계 협동조합 모니터』(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3) 『ICA 세계 협동조합 모니터 순위』(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4) 『캐나다 재생 에너지』(이경수 편역)	2012

26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3-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3-3) 『유릭스 베네치아회의 최종보고서』(이경수 편역)	2012
27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2) 『미국 협동조합 현황(1)』(이경수 편역)	2012
28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1) 『어떻게 사회적 혁신을 이룰 것 인가? 정책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하여』(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2) 『이탈리아 협동조합』(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3)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1)』(이경수 편역)	2012
29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장종익)	2012
30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장종익·김아영)	2011
31	『iCOOP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정해진)	2011
32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 회계 문제』(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엮음)	2011
33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생협-의 동향』,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엮음)	2011
34	『2009iCOOP생협 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염찬희)	2010
35	『생협 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김찬호)	2010
3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장원봉·하승우·임동현)	2010
37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생협운동을 중심으로』(염찬희·엄은희·이선옥)	2010
38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김주숙·김성오·정원각)	2007

III. 포럼 및 후속교육 자료집

번호	제목	발행년도
1	(제33회 포럼 자료집) 『윤리적생산을 위한 iCOOP생협 생산자들의 활동과 비전』	2014
2	(제32회 포럼 자료집)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2013
3	(시민사회포럼·한국NGO학회·iCOOP협동조합연구소 공동기획포럼 자료집) 『윤리적 소비와 시민사회』	2013
4	(제30회 포럼 자료집) 『한일 생협의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발표』	2013
5	(제29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의 공정무역 현황과 방향』	2013
6	(제28회 포럼 자료집) 『농지가격이 친환경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13
7	(제29회 후속교육 자료집) 『생활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분석』	2013
8	(제28회 후속교육 자료집) 『공정무역을 통한 인권회복 활동』	2013
9	(출판기념세미나 및 제26회 포럼 자료집) 『일본생협 매장사업의 실제와 시사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저자에게서 듣는 일본생협운동의 전망』	2012
10	(제27회 포럼 자료집) 『한국 사회의 물 공공성과 식수 안전성을 생각해 보다』	2012
11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포럼 자료집) 『한국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2012
12	(제25회 포럼 자료집)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2
13	(제24회 포럼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14	(제26회 후속교육 자료집) 『ICA 총회 및 해외 협동조합 연수 보고회』	2012
15	(제25회 후속교육 자료집) 『유럽 민중의 집과 지역 네트워크/ iCOOP생협 경험 연구 - 윤리적 소비와 지역생협 이사회 분석』	2012
16	(제24회 후속교육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17	(제23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의 새로운 생협운동 정책에 대한 평가』	2011
18	(제22회 포럼 자료집) 『공정무역 5년의 성과와 과제』	2011
19	(제21회 포럼 자료집) 『조합원 활동가 교육 현황 평가』	2011

20	(제20회 포럼 자료집) 『조합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모색』	2011
21	(제19회 포럼 자료집) 『iCOOP 직원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2011
22	(제23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2011
23	(제20회 후속교육 자료집) 『복지국가 스웨덴에 대한 이해』	2011
24	(제16회 후속교육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영국 방문 보고』	2011
25	(제14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시행령 시행규칙 내부지침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1
26	(제18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 활동을 위한 이론 정리를 위한 토론』	2010
27	(제17회 포럼 자료집) 『유통인증 5년에 대한 평가』	2010
28	(제16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 결과 보고』	2010
29	(제15회 포럼 자료집)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방향』	2010
30	(제14회 포럼 자료집) 『생협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10
31	(제13회 포럼 자료집) 『통화 운동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2010
32	(제13회 후속교육 자료집) 『2010년 유럽영국몬드라곤 방문 보고회』	2010
33	(제12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법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0
34	(제12회 포럼 자료집) 『생협의 노동과 임금』	2009
35	(제11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9
36	(제9회 후속교육 자료집) 『한국의 조세·재정 현황과 바람직한 방안』	2009
37	(제10회 포럼 자료집) 『람사르총회와 논습지 보전의 필요성과 과제 전망』	2008
38	(제9회 포럼 자료집) 『광우병 촛불 정국에서 생활 운동체인 iCOOP생협과 이후 과제』	2008
39	(제8회 포럼 자료집)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한국 경(제)와 생협 운동의 전망』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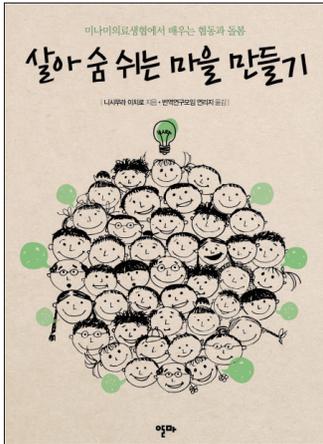
40	(제7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	2008
41	(제6회 포럼 자료집) 『새로운 대안운동으로써의 사회적 경제와 생협운동』	2007
42	(제5회 포럼 자료집) 『우리 밀 생산과 소비 운동의 성과와 이후 과제』	2007
43	(제4회 포럼 자료집)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의 사례와 향후 과제』	2007
44	(제6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2007
45	(제4회 후속교육 자료집) 『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	2007
46	(제3회 포럼 자료집) 『생협에서 공정무역이 갖는 의미와 방향』	2006
47	(제2회 포럼 자료집) 『한국 사회의 식문화 현황과 문제점 - 식육법의 필요에 대하여』	2006
48	(제1회 포럼 자료집)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	2006

IV. 기타 간행물

번호	제목	발행년도
1	『2013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3
2	『제8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2
3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2
4	『2011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1
5	『제7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1
6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1년 활동 자료집』	2011
7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생협운동의 기원과 전개』	2011
8	『2010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0

9	『제6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0
10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0년 활동 자료집』	2010
11	(iCOOP생협 ICA가입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가입과 생협의 사회적책임』	2009
12	『2010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09
13	『제5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9
14	(우리밀 1%의 기적 10%의 희망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자료집) 『생산과 소비의 상생연계를 통한 우리밀 산업화의 과제』	2009
15	『제1회 대학원생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자료집』	2008
16	『제4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8
17	(iCOOP생협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iCOOP생협 10년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	2007
18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윤리적소비의 방향과 실천적 모색-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지원과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중심으로』	2007
19	(iCOOP협동조합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일 생협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7
20	『제3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7
21	(출판기념 토론회 자료집) 『생협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2006
22	『제2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51	『제1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구입 / 열람 문의 : icoop-institute@hanmail.net



니시무라 이치로 저, 변연연구모임 연리지 옮김 (2013)
알마 | 224쪽 | 규격 외 판형 | 13,500원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 미나미의료생협에서 배우는 협동과 돌봄

협동조합 시대, 미나미의료생협의 놀라운 이야기!

미나미의료생협에서 배우는 협동과 돌봄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이 책은 협동조합의 시대에 좋은 사례로 미나미의료생협이 50년 동안 얻은 성과를 소개한다. 의료, 돌봄과 복지, 건강한 몸 만들기, 지역 만들기와 생협 만들기 같은 주제로 시골의 넓고 작은 진료소였던 곳에서 지역사회를 살리는 종합병원이 되기까지 미나미의료생협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고 한국의 의료생협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 본다.

미나미의료생협은 시골의 작은 진료소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조합원 6만 여 명, 900개의 반 모임 80여 개 지부, 10개 이상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1일 방문 환자 수는 약 1,300여명 가량이다. 미나미의료생협의 시설, 의료진 등의 관계자들은 내원자나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으며 의료 복지뿐 아니라 문화까지도 서로 협력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미나미의료생협의 사례를 통해 한국 의료생협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며 협동조합의 시대에 한국의 협동조합론, 생협론이 성장하고 현실화 되는데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 줄 것이다.



조지 제이콥 홀리우크 저, 정광민 옮김 (2013)
그물코 | 400쪽 | 150 x 200 | 16,000원

[협동조합 고전 총서 1]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역사와 사람들 (원제)Self-help by the people : The history of the Rochdale Pioneers

협동조합운동의 세계적 고전, 협동조합 사람들의 필독서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역사와 사람들〉 첫 완역판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것이다. 영국 랭커셔 주의 작은 마을 로치데일에서 노동자 28명이 28파운드를 가지고 만든 세계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이며, 국제협동운동의 기본원칙으로 지금도 계승되고 있는 ‘로치데일 원칙’을 확립한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의 기록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다.

이 책의 제1부는 1857년에 간행되었고, 제2부를 더한 증보판은 1893년에 간행되었다. 제1부가 나온 뒤 150여 년 동안 이 책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헝가리, 일본 등 협동조합 선진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완역판이 나온 것인데,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협동조합고전총서’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